

인문사회연구회
업종연구총서 2000-10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길 은 배 (한국청소년개발원)
함 병 수 (")
이 종 원 (")
최 원 기 (")

통일연구원

머 리 말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포용정책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천명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 평화 정착을 통한 남북사이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판단 아래,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서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대화와 협력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서로간의 불신과 이질성을 줄이고 민족 동질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교류의 확대가 남북관계의 안정은 물론 당국간의 화해와 협력까지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주로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한총련(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불법적 형태의 인적교류와 FAX를 통한 간접적 교류로 편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의식, 가치, 문화 등에 많은 변동이 생기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과정에 NGO가 추진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과정에 새로운 행위주체가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부만이 단일 행위주체로 기능하였고, 필요에 따라 NGO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 NGO가 정부의 파트너로써 기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분산되었던 힘을 NGO라는 단체로 집중하여 실행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뜻한다. 즉, 그동안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아주 소규모로 각 개인이나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NGO를 통한 교류·협력은 참가 인원, 활동기간, 활동유형, 그리고 파급효과 등과 같은 제영

역에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실행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통일방안에 합의를 형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서로 이념을 달리하고 상호불신과 갈등의 역사를 반세기 동안 지속해 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인적·물적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남북한간에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에는 남북한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비인격적 교류, 제3세계를 통한 접촉, 그리고 물자 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교류 형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지역내에서의 직접적인 인적교류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양체제 유지에 상호 부담감이 없으면서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비정치적인 분야로, 양쪽 주민간의 이질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를 위한 타당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청소년 대상의 통일 및 북한, 그리고 청소년 교류·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의 의견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내용과 조사결과 그리고 방안들이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

2000년 12월

연구진

요

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0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9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 서 론

현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당장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주력하기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을 우선시 하며, 평화정착의 기반위에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도모해 나아간다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화해와 협력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협력은 화해·협력과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교류·협력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남북한 정부당국, 또는 NGO가 해당될 수 있으나, 북한 당국이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NGO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교류·협력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 정부중심의 교류·협력은 성격 자체가 정치적 사안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신뢰구축의 과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비정치적인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NGO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물론,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비정부차원, 예를 들면 NGO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이므로, 화해·협력이 보다 발전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차원까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II.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과 NGO

지금까지 남북간 민간부문의 사회문화 교류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소년분야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운동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비공식적인 정치적 교류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 이후에 직면하게 될 사회문화적 통합의 과제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는 민족적 이질성 극복을 향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이 과거 적대국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으로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쟁과 적대적 대립으로 인한 기성세대의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와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간적인 신뢰감과 우정을 쌓아간다면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 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통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NGO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은 세계시민의 공동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국가적인 부담과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청소년의식 조사

청소년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사회의 통일논의와 과정을 주도해 나갈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분단상황이 자연스런 삶의 조건이 되어버린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많은 격차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바,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북한·통일교육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청소년이 찬성했지만, 약 1/4의 청소년이 현상유지 또는 반대 입장을 취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리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7명중 1명에 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관련 정보·교육시스템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5%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북한관련 교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북한청소년의 인간적 이미지는, “우울”하고 “무뚝뚝”한 측면도 있지만 남한청소년들보다 “부지런함”, “조용함”, “겸손함”, “영리함”의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과 북한청소년에 대한 정보·지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는 과거 체제경쟁의 과정에서 조장된 허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들을 자신보다 열등하거나 적대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들 수 있다.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할에 이르렀고 실제로 남북한 청소년교류 사업이 시행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할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추진실적 평가

남북관계의 변화는 90년도를 전후하여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는 그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변동의 중심에서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계층인 청소년을 고려해볼 때 그 교류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활동이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순수 청소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활동은 빈약한 실정이다.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 변동 과정을 상정해 본다면 그 속에서 청소년 계층이 차지할 비중은 사회의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남북교류에 있어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도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서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분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걸어온 경제 위주의 정책추진 경향과도 관계되는 측면으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조속히 긍정적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는 공리주의적 조급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의 청소년관련 NGO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남북교류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 이념갈등 시대의 사회성이 반영된 것으로 NGO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낮은 관심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셋째,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이는 두 번째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로서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역할과 위상을 소외시켜 온 그동안의 정책적 편협함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북한 내 민간단체가 부재 한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볼 때 이 지적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남북 교류 노력은 더욱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한총련 등과 같은 일부 불법·이적단체들의 불법적·비공식적 접촉이 대 국민 인식을 악화시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인식 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측면이다.

여섯째, 지금까지 남북한이 제의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가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띤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는, 소극적·미시적인 제안들로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일곱째,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주체인 정부와 학생, 북한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정부의 보수적 태도와 대학생들의 급진적 태도는 남북교류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갈등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한 동안 이 문제가 남북 청소년교류의 시행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 요인은 앞서 제기된 몇몇 다른 요인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여덟째, 제3국을 통한 제한적·간헐적인 접촉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을 크게 위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 체제에 부담이 없는 국제 사회 활동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제3국에서의 청소년 접촉은 현재까지 남북한 청소년들이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고착화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전체가 아닌 대학생 중심의 제한된 교류는 청소년분야의 교류 범위를 좁히고 있다.

V.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제도의 개선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법·제도 개선 및 제도화 추진을 통하여 NGO 중심의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NGO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범위 확대, 북한주민접촉승인제도의 개선, NGO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방북절차의 간소화, 북한방문기간의 연장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관련 NGO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청소년관련 NGO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기구 외에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청소년단체 및 외국 「청소년교류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전문 NGO의 참여 확대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관련 문화·예술 NGO의 활용,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연계한 교류·협력 증진, 국제 전문 NGO와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연계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의 NGO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남북한 청소년 민속경진대회’ 및 ‘남북한 청소년 공동탐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이 마련·시행되어야 한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범위 및 구성	6
3. 연구 방법	8
II. 기본논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과 NGO	11
1. 청소년 교류·협력의 의의	11
2. NGO의 개념과 현황	13
3.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23
III.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청소년의식 조사	25
1. 서 론	25
2. 조사결과 분석	28
가. 통일관	28
나. 북한관	42
다. 교류관	61
3. 요약 및 논의	77
IV.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실태 및 분단국 사례 분석	86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실태	86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평가	105
3.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 분석	114

IV.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148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148
2. NGO를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	149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	160
V.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5
부록	180

표 차례

<표 II-1> 비정부단체의 조직유형의 수: 1909~1994	19
<표 II-2> 각 지역별·국가별 국제비정부단체 수	20
<표 II-3> 시민단체, 비정부단체, 그리고 지부의 수 분포	22
<표 III-1> 표본의 일반적 특성	27
<표 III-2> 계층구분의 기준과 구성비	28
<표 III-3> 통일에 관한 대화정도	30
<표 III-4> 통일에 관한 대화정도	31
<표 III-5>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32
<표 III-6>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32
<표 III-7>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33
<표 III-8>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34
<표 III-9> 통일 시기 예상	35
<표 III-10> 통일 시기 예상	35
<표 III-11> 통일논의에 대한 불만사항	36
<표 III-12> 통일논의에 대한 불만사항	37
<표 III-13> 통일을 위한 중요과제	38
<표 III-14> 통일을 위한 중요과제	38
<표 III-15> 통일의 장애요인	39
<표 III-16> 통일의 장애요인: 회전된 요인행렬표	40
<표 III-17> 통일의 장애요인: 요인별 평균값	41
<표 III-18> 통일 후의 사회 전망	42
<표 III-19> 통일 후의 사회전망	42
<표 III-20> “햇볕정책”의 인지도	43
<표 III-21> “햇볕정책”의 인지도	44
<표 III-22>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45
<표 III-23>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45

<표 III-24>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46
<표 III-25>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47
<표 III-26> 북한돕기운동 참여경험	48
<표 III-27> 북한돕기운동 참여경험	48
<표 III-28> 북한관련 정보입수 매체	49
<표 III-29> 북한관련 정보입수 매체	50
<표 III-30> 북한문제 대화상대	51
<표 III-31> 북한문제 대화상대	51
<표 III-32> 북한관련 교육내용 만족도	52
<표 III-33> 북한관련 교육내용 만족도	53
<표 III-34> 북한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54
<표 III-35> 북한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54
<표 III-36>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요인	55
<표 III-37>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요인	56
<표 III-38>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 인지도	57
<표 III-39>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 인지도	57
<표 III-40> 북한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정도	58
<표 III-41> 북한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정도	59
<표 III-42>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60
<표 III-43> 남북 교류 사례에 대한 관심도	61
<표 III-44>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62
<표 III-45> 통일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역할	63
<표 III-46> 통일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역할	63
<표 III-47>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	64
<표 III-48>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	65
<표 III-49> 남북 교류·협력의 우선순위	66
<표 III-50> 북한청소년에 대한 대응	67
<표 III-51> 북한청소년에 대한 대응	67
<표 III-52> 북한방문 의사	68

<표 III-53> 북한방문 의사	68
<표 III-54> 남북 청소년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69
<표 III-55> 남북 청소년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70
<표 III-56> 남북 청소년교류 참여의사	70
<표 III-57> 남북 청소년교류 참여의사	71
<표 III-58> 남북 청소년교류의 참여희망 분야	72
<표 III-59> 남북 청소년교류의 참여희망 분야	73
<표 III-60> 남북 청소년간 이질화가 심각한 분야	74
<표 III-61> 남북 청소년간 이질화가 심각한 분야	74
<표 III-62> 남북 청소년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75
<표 III-63> 청소년 교류를 통한 이질성 해소의 가능성	76
<표 III-64> 청소년 교류를 통한 이질성 해소의 가능성	77
<표 IV-1>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88
<표 IV-2> 분야별 북한주민접촉	89
<표 IV-3> 연도별 북한 방문	90
<표 IV-4> 분야별 북한 방문 경향	91
<표 IV-5> 99년 11월 중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93
<표 IV-6> 1991년 대학생 대북교류신청 현황	94
<표 IV-7> 1992년 대학생 교류신청 현황	95
<표 IV-8> 1993년 대학생 교류신청 현황	95
<표 IV-9> 1991년 FAX를 통한 불법적인 대북접촉 사례	102
<표 IV-10> 청소년들의 통일관	108
<표 IV-11> 청소년들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의식	108
<표 IV-12>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 정도	108
<표 IV-13>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불만족스러운 통일 논의	109
<표 IV-14> 청소년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통일 과제	110
<표 IV-15>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대북정책	111
<표 IV-16> 청소년들의 통일관계의식과 교류에 대한 문항간 상관관계	112

<표 IV-17> 연도별 서독 청소년의 동독 여행 현황	136
<표 IV-18> 청소년 교류여행에 대한 서독정부 지원	139
<표 IV-19> 동·서독 양측의 청소년여행 일정에 대한 입장(예)	141

I. 서론

1. 연구목적

남북한의 교류·협력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이하: NGO)의 역할 제고를 통한 동질성 증진 노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남북간의 정치적·국제적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한 동질성 증진 노력은 과거 정치논리에 바탕한 정부주도의 일방적 추진¹⁾으로 인하여 단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²⁾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실적도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화된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국내의 NGO는 인적교류를 포함한 학술, 종교,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북지원 및 인권 등과 같은 부분에서도 국제전문 NGO들과 연계하여 다각적

-
- 1) 현재까지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각 정권별로 국내외적인 상황에 의한 필요에 의하여 일회적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때문에 그동안의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의 장구단일화를 통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남북한 양체제는 정치적·이념적 논리에 입각하여 교류·협력을 적절한 상호체제의 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점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체제경쟁관계에 놓여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용했으며 남한의 반공주의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경직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 2)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정부는 1990년 2월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5원칙」을 발표했으며,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였고,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였다. 특히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남북관계 제도화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어 1992년 5월에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에는 「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7년 6월 27일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1990년대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제도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 역시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지녔던 본질적·구조적인 한계는 여러 측면에서 지적된다. 첫째, 사회문화분야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남북간 교류·협력은 정부일변도의 단일창구 형태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를 빌미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청소년분야를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는 독립변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군사적 관계에 의해 규정받는 종속변수적 성격을 지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제외들은 상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사가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류·협력의 형태도 일시적이고 단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문화 교류·협력 그 자체보다 정치적인 선진성을 우선시한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의 남북 교류·협력활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반공이데올로기를 통치논리로 무장한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환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체제와 반체제 즉 민주와 반민주간의 투쟁·갈등구도로 인해 통일문제는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권안보적 측면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³⁾. 일명 ‘햇볕정책’ 또는

3)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의 경우 사회문화부문에서 남북한 주민접촉이 성사된 건수는 종교 34건, 문화·예술 26건, 학술 21건, 관광·수송 20건, 언론·출판 10건, 체육 9건, 과학·환경 3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종교와 문화·예술분야의 교류·협력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으며, 관광·수송분야의 교류·협력증가는 금강산 사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들어 이루어진 주요 교류 사례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평양 공연(98년 5월), 남쪽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북쪽 천주교 유적지 조사(98년 5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의 북

‘대북포용정책’으로 불리어지는 대북정책은 그동안 정치적 상황과의 연장선상에서 조율되던 사회문화분야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보다 자율성이 보장된 교류·협력 환경이 마련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 결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활발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방법은 첫째, 상호간 체제유지에 부담이 없으며 실익이 있는 경제 및 관광분야부터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일이고, 둘째는 비정치적 영역, 즉 청소년, 문화·예술, 학술, 종교, 체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을 위한 신뢰구축의 단초를 찾아가는 것이며, 셋째는 교류·협력의 추진기반은 민간부문, 즉 국내외 전문 NGO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비롯한 정부 당국간 접촉을 일관되게 기피해 온 북한측의 입장이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 교류·협력의 채널, 특히 청소년교류와 같은 분야는 NGO와 같은 민간부문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장구·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비정치적 분야인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방향성은 단기적 성과 내지는 과시적 목표달성이 아니라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화 극복과 민족공동체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이 출범하면서 시민사회 및 신중간계층을 중심으로 NGO의 영향력이 확대 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통일논의에 대한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통일과 관련된 NGO의 활동

쪽 문화유적 답사(98년 7월), 남북 음악인들의 윤이상 음악제(98년 10월) 등이 있다. 또한 문화방송과 스포츠아트가 각각 북한의 역사 유물 및 명승 고적 등을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 경향신문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대북 문화정보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민족복지재단이 나진-선봉지역에 제약공장 및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겠다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봉,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방안”,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서울: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 자료집, 1998), 377~378쪽.

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NGO의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994년 경실련은 통일관련 민간단체 조사과정에서 대략 250개정도 단체를 찾아냈으나, 실제로 경실련의 조사에 응한 단체는 171개였다⁴⁾. 그러나 이후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이 증가추세에 놓였으며, 『국민의 정부』들어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NGO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청소년분야를 한 영역으로 하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⁵⁾. 그러나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청소년분야는 사회문화분야의 하위영역⁶⁾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성사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보더라도 학술, 종교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교

4) 1997년에 발간된 『한국민간단체총람』에는 약 3,899개의 단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지부를 포함하여 약 1만개이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NGO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단체를 별도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3,899개의 단체중 NGO는 약 730개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이상이 1987년 이후 등장했다. 1987년 이후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는 질적 변화를 동반하여 단체의 조직양상이 분화되고, 활동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 소비자보호, 환경보존 등과 같은 불특정다수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김영래, “한국비정부단체의 세계화전략 연구”, 『국제정치학논집』, 제37집 1호, 251~253쪽 참조.

5)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대부분 사회문화분야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딱히 청소년분야라고 구분할 만한 실적은 없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교류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전체적으로 1989년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경제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국민의 정부』가 대북포용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용이해졌다. 1989년 6월 이후 1998년 10월 31일까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교류·협력에서 분야별로 성사된 건수는 학술 133건(1,700명), 종교 93건(723명), 문화·예술 67건(648명), 관광·수송 59건(213명), 언론·출판 42건(127명), 체육 40건(107명), 과학·환경 35건(241명)으로 집계되었다.

6) 현재 사회문화분야는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된 문건이나 논문들에 따르면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청소년, 관광분야가 주요영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북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 체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실적이 많다. 이와 같은 분야의 교류·협력은 단지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류·협력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경우도 있었으며, 청년·인권·교육 및 통일관련 NGO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속에는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접근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NGO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정부주도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전개되었고,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전혀 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단체가 증대되고 그 역할도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관련 NGO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NGO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에서 제기되기 어려운 문제 내지는 정부간의 공식적 교섭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NGO는 민간분야의 특성을 바탕으로 남북 청소년교류·협력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남북관계개선 및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NGO⁷⁾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

7) NGO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UN이 정부이외의 NGO와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 NGO는 UN을 통해 포괄적 협의자격, 특정분야 협의자격 및 특정문제 자문자격 등 세 가지 종류의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취득할 수 있다. 오늘날 NGO는 일반적으로 UN이 협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구나 국제법상의 규정을 넘어서 보다 광의의 의미로 쓰인다. NGO는 비영리적 목적과 사적주도의 상설적 구조로써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말로는 민간단체가 NGO와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경우 시민단체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

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까지 남북간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환경요인에 의하여 크게 제한 받아 왔고, 북한은 정부차원의 교류·협력보다는 남한의 NGO를 통한 교류·협력을 선택적으로 선호하여 왔다. 따라서 비정치적 성격이 강한 NGO 중심의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동질성 증대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청소년분야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성을 대표하는 NGO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인 선택이며,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현재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처방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접근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 이상적 교류·협력 방안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통합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으로, 단계성과 점진성을 바탕으로 초기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의 교류·협력 및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구성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 NGO간의 교류·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일부 단체들은 전위적 성격의 단체들로 NGO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단계의 교류·협력은

남한의 NGO에 의한 북한사회로의 일방적 교류·협력을 전제로 한다.

둘째, 남북간에 추진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90년대부터 최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왜냐하면 90년대 이전의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은 주로 비공식적·불법적인 대학생 중심의 교류·협력으로 NGO에 의한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 도출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NGO는 반드시 청소년관련 NGO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현재 남북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NGO는 국내외를 비롯한 다양한 NGO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NGO의 범위는 청소년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사회문화분야의 NGO를 포괄한다.

넷째, 남북한 교류·협력관에 대한 청소년대상의 설문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조사결과에서 지역보다, 성별, 계열,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 이산가족 여부 등과 같은 변인들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범위 속에서 전 6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들 중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작업이다. 먼저 그동안 남북한간에 추진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비추어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살펴본다. 특히, NGO의 정의와 기능 등을 고찰하여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NGO를 통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본다.

제3장은 서울시에 소재 하는 학생청소년 대상의 설문결과를 빈도와 성별, 계열,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 이산가족 여부 등 4개의 배경변인에 의한 교차분석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은 청소년들의 통일관, 북

한관,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4장은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실태, 추진기반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승인에 의한 공식적 교류 사례와 일부 대학생에 의하여 추진된 불법적·비공식적 사례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동·서독간에 추진된 청소년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제5장은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NGO의 역할 확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 국제 전문NGO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한 남북의 화해·협력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제언할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최근 사회문화분야를 비롯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 등과 관련된 일부 자료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없어, 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일부 확보한 자료간 통계수치가 틀리게 나타나 정확한 자료의 인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이론 및 문헌연구,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분단국 청소년교류·협력 사례분석, 그리고 청소년 및 북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가. 이론 및 문헌연구

남북한 사회문화 및 청소년분야에서 추진된 교류·협력이 향후 남북청소년간의 이질성 해소 및 동질성 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또한 이의 실행 주체인 국내외 NGO의 등장배경과 현황을 고찰하여,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NGO가 갖게되는 위치 및 그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교류·협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NGO에 의한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이 갖는 유용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 사례분석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이 상호간에 취했던 청소년교류·협력의 정책과 추진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초기에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청소년교류·협력이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로 역할이 진이되는 과정을 고찰하여 한국NGO의 참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동·서독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하나의 기제로 사용할 것이다.

다.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관련 학과 교수, 청소년 및 북한관련 전문가 등 8명을 대상으로 남북한 화해·협력단계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 및 참여 NGO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주로 비정치적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또한 NGO의 역량 강화방안은 정책·제도적 개선, 네트워크 구축, 재정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적실성 있는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라. 설문조사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통일 및 북한관, 그리고 청소년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참여 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문계와 실업계의 표본 비율은 8:2로 하며, 남·녀 비율은 5:5로 구성할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문항과 배경 변인간 교차분석 방법을 이용하고, 조사결과는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기본논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과 NGO

1. 청소년 교류·협력의 의의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문제의 주된 관심사는 주로 정부 주도에 의한 정치·군사적인 긴장완화로 집약될 수 있다. 경제적 부문의 남북 교류와 협력이 일부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엄밀한 의미의 민간교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독일의 통일을 목적하고 난 뒤의 일이라 하겠다. 독일은 정치적 통일이 외적 요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이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융합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통일 후 나타난 사회적 혼란이라는 교훈은 실질적인 민족통합이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내적 통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⁸⁾.

독일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단계적 교류를 시도 하면서 통일을 준비해 왔던 사회도 정치통합 이후에 그와 같은 어려움에 당면해야만 했다면 우리의 사정은 더욱 복잡하고 난관이 크리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사회문화는 윤희유와 같아서 정치, 경제를 받쳐주며 유연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체제의 구조적 통합인 정치적·제도적 통일과 더불어 남북한 주민들간의 의식과 사고, 행동방식에 있어서의 이질성 극복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급진적 통일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도 남북한간의 이질성에 따른 간격을 가능한

8)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통합론』(서울: 삶과 꿈, 1997)

한 사전에 극복함으로써 통일 이후 예상되는 후유증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향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는 남북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에도 사회·문화 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물밑 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후원 자격으로 남고 민간 주도에 의한 사회·문화교류가 활발해질 때 통일조국의 실현은 그만큼 앞당겨 지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남·북간 민간부문의 사회·문화 교류는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소년부문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운동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비공식적 차원의 정치적 교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 이후에 직면하게 될 사회·문화적 통합의 과제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의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는 민족적 이질성 극복을 향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이 과거 적대국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으로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⁹⁾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쟁과 적대적 대립으로 인한 기성세대의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와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간적인 신뢰감과 우정을 쌓아간다면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 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9) 당시 독일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적대감정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NGO의 개념과 현황

가. NGO의 등장 배경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고도 산업화와 민주화로의 이행을 경험하면서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를 향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 테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통한 경제의 탈지역화 현상과 연계되어 있다. 최근 극소전자기술을 중심으로 정보산업의 발전은 무역, 금융, 생산의 전 경제 영역에서 신속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축적의 범위가 전지구화하는 경제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¹⁰⁾.

이와 더불어 세계 2차대전 이후 헤게모니의 변화와 식민지 질서의 붕괴에 따른 세계 질서의 재편,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권의 몰락에 의한 냉전의 종언, 그리고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하여 민주정치의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공간의 분할구도가 약화되면서 국민국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지구적인(global) 수준의 상호의존적인 민주주의 범세계적 모델(the cosmopolitan model of democracy)이나 전지구공동체(global village) 건설이라는 세기적 변혁을 지향함을 의미한다¹¹⁾.

또한, 경제 개발, 환경 보존, 소비자 보호, 인권 보장, 경제 정의, 부정 부패 추방, 여성인권, 인류애적 구호사업, 긴급구호, 아동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나 전지구적 과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 폭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들 쟁점과 과제들은 국가 수준의 정책 대상이기보다는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과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전

10) 김혁래, “세계화와 한국 NGO의 현황”,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안』(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77), 13쪽.

11) Weiss, Thomas G., and Leon Gordenker., *NGOs, the UN, and Global Governanc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66)

지구적 시민권이나 시민의식에 기반한 사회의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에 대한 기대와 역할 증대가 필요시 되고 있다¹²⁾.

자원부문은 지방, 국가, 또는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국가부문과 시장부문과 함께 21세기의 제반 사회적 쟁점과 과제들을 담당할 제 3부문(third sector)으로 등장하고 있다¹³⁾. 국민국가가 20세기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면, 자원부문은 21세기 전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¹⁴⁾. 경제와 정치의 세계화와 세계 시민사회로의 지향성이라는 21세기의 세기적 과제들에 대한 자원부문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를 향한 시대적 요구가 강한 요즈음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자원부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행위자가 공적 영역의 국민국가 틀로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환경, 개발, 인권, 여성, 노동, 빈곤 등과 같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중요한 사회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국가의 틀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직결된다. 따라서 점차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시민사회 형성의 중심세력인 비정부단체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NGO는 민주주의와 다원적 시민사회를 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권한위임(empowerment)을 받아 대안적 발전모형을 구축해 나아갈 수 있는 조직체¹⁵⁾(Fiedman, 1992)로 인식되고 있다.

나. NGO의 개념과 특징

현대사회에서 NGO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인

12)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ur Global Neighbour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김혁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p. 13.

13) 김혁래, 앞의 책, 13쪽.

14) Clark, J., *Democratizing Development: The Role of Voluntary Organizations*.(London: Earthscan., 1991).

15) 김혁래, 앞의 책, 13쪽.

속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nonprofit 또는 not-for-profit organization, 정부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 타인의 강요나 법적인 구속을 갖고 생겨난 조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voluntary organization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¹⁶⁾. 여기서는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인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NGO는 그 학문적 논의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 활동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정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민법상 법인자격을 취득한 자발적인 민간단체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좁은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NGO들이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많은 NGO들은 법인자격을 획득을 꺼려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NGO를 Salamon의 논의¹⁷⁾를 참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광의의 정의는 법인격을 획득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영리법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많은 NGO를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게 된다. 또한 이 정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주체인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한 NGO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NGO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한시적인 모임은 NGO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직이라는 의미는 구조와 활동이 어느 정도

16) 이근주,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9), 5쪽.

17) Salamon, L. M.,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A Global ‘Associated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73, No. 4(1994) pp. 109~122.

18) 이근주, 앞의 책, 7~9쪽.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모임들은 비영리부문에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NGO가 공식적으로 법인화할 필요는 없다. 법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고, 조직업무 수행시 재정책임으로부터 집행자를 보호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격 유무가 조직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양하지만 집행부,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두번째로 NGO란 민간(private)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부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정부기구도 아니고 정부관료가 지명한 위원회에 의해 동치되는 기구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NGO는 정부와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NGO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NGO의 활동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NGO는 근본적으로 기본구조가 민간기구이므로 공공부문의 상호작용이 NGO를 공공조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세번째로는 편익의 비배분성(non-profit-distributing)을 지적할 수 있다. 비배분성의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s) 이라고도 한다. NGO는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혹시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이윤이 생긴 경우에도 조직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NGO는 자신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NGO가 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윤이 조직의 설립자 혹은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기본목적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분야의 사기업과 NGO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네번째로 NGO는 자치(self-governing) 조직이다. 자치란 의미는 NGO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생성, 활동과 소멸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위한 내부조직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번째로 NGO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자발적(voluntary)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활동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나 상근직원 등 참여의 형식을 불문하고 NGO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 제도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NGO는 조직의 성장이나 구성원의 편익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편익 증진이나 공공가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NGO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경우 NGO가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NGO가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다. NGO의 현황

(1) 세계의 NGO

비정부단체는 세계적으로 그 단체의 숫자나 가입자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OECD가 발간한 환경과 개발 분야에서의 비정부단체총람에 따르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1980년 약 1,600여개에서 1990년 약 2,50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는 약 20,000여개의 비정부단체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은 최근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정부단체가 이보다 훨씬 많은 50,0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¹⁹⁾.

또 다른 지표로 1990년대 들어 행하여진 세계정상회의들을 들 수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최근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을 위

19) 김혁래, 앞의 책, 15쪽.

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도 NGO FORUM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1992년의 리우 환경회의, 93년의 비엔나 인권회의, 94년의 카이로 인구회의와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그리고 96년의 이스탄불 세계거주회의 등에서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은 증폭되고 있다. 예들 들어,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 178여개국 정부대표와 1,500여개의 환경 비정부단체, 1994년 코펜하겐 회의에는 2,000여개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참석하였으며,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비정부단체 포럼에 약 30,000여명의 여성대표들이 참석하였다²⁰⁾.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유엔기구 및 미국개발처(USAID)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공적개발원조기구, 국제적십자사(ICRC)나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Greenpeace나 Friends of Earth, 인권보호나 신장을 위한 Amnesty International, 소비자보호 및 경제정의를 위한 Ralph Nader Consumer Group, Commission for Justice and Development, 한국 경실련과 같은 국제 및 국내의 다양한 NGO나 단체 등의 활동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비정부단체의 조직유형의 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909년 176개의 조직유형이 존재하던 것이, 1976년 2,502개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다시 과거 20년간 배로 증가하여 1994년 4,928개가 되었다. 반면에 국제정부기구는 1909년 37개에서 1994년 263개로 증가하였다,

20) 김혁래, 위의 책, 16쪽.

<표 II-1> 비정부단체의 조직유형의 수: 1909~1994

연 도	국제정부단체	국제비정부단체
1909	37	176
1956	132	973
1960	154	1,255
1964	179	1,470
1968	229	1,899
1976	252	2,502
1981	337	4,265
1984	365	4,615
1988	309	4,518
1991	297	4,620
1994	263	4,928

※ 자료: 국제기구년감(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94/1995, p. 681, 김혁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6쪽.

이러한 국제비정부단체 조직유형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그 실질적인 단체의 수는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960년 24,000여 개에서 1994년 126,655개로 약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국제비정부단체의 수적인 증가를 지역별, 국가별, 년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약 반 정도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대 들어 각 지역과 국가에서 비정부단체는 2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비정부단체 수와 비교하여 약 반정도 되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비슷하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1980년대 비정부단체의 수적인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표 II-2> 각 지역별·국가별 국제비정부단체 수

지 역/국 가	1960	1966	1977	1994
아메리카지역	5,057	7,471	10,995	23,420
캐 나 다	492	699	980	2,043
미 국	612	847	1,106	2,273
브 라 질	412	547	764	1,555
유럽지역	13,023	18,212	24,443	57,081
프 랑 스	886	1,168	1,457	3,038
이 태 리	808	1,057	1,343	2,791
영 국	742	1,039	1,380	2,846
아시아지역	3,342	5,232	8,112	21,269
한 국	102	209	371	1,034
일 본	412	636	878	1,863
이스라엘	370	554	751	1,524
인 도	391	531	733	1,495
총 합 계	24,136	36,237	52,119	126,655

※ 자료: 국제기구연감, 1994/1995, pp. 1,682~1,689, 김혁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7쪽.

(2) 한국의 NGO 현황

한국의 자원부문 비정부단체의 발전은 대체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투쟁 이후에 이루어졌다. 한국 국제비정부단체의 수적인 증가는 앞서 살펴봤듯이 1980년대에 약 3배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인 이익집단의 수적인 측면도 1980년대에서 급속한 성장을 나타낸다. 1974년 천여개의 이익집단의 수는 1984년 별다른 증가 없이 1,322여개였으나, 1994년에는 거의 2배로 증가하여 2,181개가 되었다.

다음의 표는 「시민의 신문」이 1997년에 발행한 『한국시민단체 총람』

(1997)의 분석결과이다. 이 총람에는 총 3,899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총람에는 앞서 논의한 비정부단체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김혁래²¹⁾는 NGO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²²⁾하여 최종적으로 730개의 비정부단체를 NGO로 간주하였다. 특히 특정 대상집단에 대한 비정부단체를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이들 집단에 소속된 단체는 전체 분석 대상 중에서 64.3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특정 대상 집단은 시민, 노동, 농민/어부, 도시빈민, 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이며, 복지 대상 집단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일반 복지 대상 집단 등이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비정부단체는 전체 730개 중에서 64.3 퍼센트를 차지하는 470개이며, 이들의 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5,569개 중에서 67.9 퍼센트를 차지하는 2,355개이다. 그러나 『한국시민단체총람』에 수록된 전체 3,899개 중에서 이들 특정 대상 집단에 소속된 비정부단체의 수는 23.9 퍼센트를 차지하는 933개에 불과하다.

21) 김혁래, 앞의 책, 26쪽.

22) 국제기구나 해외 동포들의 사적 단체들과 회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노동조합과 전문단체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순수 종교단체, 정치/행정, 교육/연구기관, 방송/출판, 문화/예술, 스포츠/여가 등에 소속된 단체들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종교단체라도 복지 기능이나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인 경우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II-3> 시민단체, 비정부단체, 그리고 지부의 수 분포

구 분	시민단체	비정부단체	지 부
통 일	107	42	108
정치/행정/법	17	9	42
교 육	83	11	93
방송/출판	63	-	1
문화/예술	305	-	205
스포츠/여가	82	-	161
학 술	561	-	-
종 교	313	-	721
경제/경영	14	3	-
산 업	413	-	663
건강/의료	104	38	315
자원봉사	44	15	184
연구기관/단체	72	-	22
국 제	50	-	57
해외교포	471	-	-
일상생활	58	34	164
인 권	52	29	28
환 경	123	71	88
기 타	34	8	157
소 계	2,966 (76.1)	260 (35.7)	1,786 (32.1)
특정목표집단영역			
시 민	212	71	396
노 동	129	31	420
농민/어부	40	20	163
도시빈민	25	20	44
여 성	136	45	334
청 소 년	75	66	129
북 지	316	217	969
소 계	933 (23.9)	470 (64.3)	2,335 (67.9)
합 계	3,899	730	5,569

※ 자료: 한국시민단체총람 (1997), 김혁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26쪽.

※ 주: 괄호 안은 백분율

현재 우리나라의 NGO는 그 규모나 활동내용의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점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감안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NGO는 정부, 기업부문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제3의 세력으로 성장하리라 예상된다.

3.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통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과거 남북대치 상황하에서의 남북간 교섭과 대화는 민족통일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외에 체제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정권안보의 차원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창구를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빚어진 부작용으로써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감의 형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NGO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GO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은 세계시민의 공동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NGO는 대부분 제한된 범위의 국가와 지역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의 조직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인 경우에도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각국의 기구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

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지난 수세기간 인류사회를 괴롭혀 온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의 종식을 향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라는 제한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인류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NGO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자원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내의 돌발적인 분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국가적인 부담과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NGO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나 중층적 관료체제하의 공공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모든 사업을 정부주도하에 시행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점차 민간으로의 이양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교류·협력 초기단계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 가려져 왔던 경비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고려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합리적인 기준하에 적정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NGO는 민간기업이나 공공조직이 갖지 못한 유연한 조직운영과 자원인력의 활용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의 이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Ⅲ.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청소년의식 조사

1. 서 론

가.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사회의 통일논의와 과정을 주도해 나갈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분단상황이 자연스런 삶의 조건이 되어버린 청소년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많은 격차가 있으리라 예상되는바,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북한·통일교육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사의 내용

조사의 내용은 크게 청소년들의 “통일관”, “북한관”, “교류·협력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주요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관”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연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와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다루었다.

“북한관”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소년들이 어

면 매체를 통해 북한관련 정보를 얻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에 만족하는지의 여부,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교류관”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일반 및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과 참여의사, 청소년 교류·협력이 통일과 남북간 이질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다. 조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집단의 선정은 모집단을 ① 성별(남·녀), ② 학교계열별(인문계·실업계), ③ 학교소재지별(강동·강서·강북·강남)의 네 가지 범주로 층화하여 각 범주별로 실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층화할당표집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학교는 표본집단 범주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서울의 각 지역별로 안배하여 총 12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가 선정된 뒤에는 연구진이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응답 요청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시 후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30매로서 오류검토 작업을 거쳐 총 1,095매가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변량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52.8%, 여자가 47.2%로서 남자가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79.2%, 실업계 학생이 20.8%로서 실제 모집단인구를 감안할 때 인문계 고등학생이 과다표집 되었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12.7%로서 소수에 머물렀고, 고졸이 46.8%로서 가장 다수였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도 40.5%에 달하였다.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수준이라는 응답이 67.3%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19.1%로서 못 사는 편이라는 응답(13.6%)보다 많은 편이었다. 자신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 중 남북 이산가족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14.6%로서 소수에 머물렀다.

<표 III-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내 용	사례수	비 율
성	남 자	573	52.8
	여 자	512	47.2
학교계열	인문고	839	79.2
	실업고	221	20.8
부친의 학력	무 학	10	0.9
	국 졸	39	3.6
	중 졸	89	8.2
	고 졸	507	46.8
	대 졸	345	31.9
	대학원	93	8.6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못사는 편	22	2.0
	중간보다 못사는 편	126	11.6
	중간 수준	733	67.3
	중간보다 잘 사는 편	181	16.6
	매우 잘 사는 편	27	2.5
이산가족 유무	있 다	158	14.6
	없 다	922	85.4

※ 비고: 각 변인별 무응답자의 수치 및 비율은 표에서 제외되었음

(3) 독립변인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독립변인은 성, 학교계열, 사회계층, 이산가족 유무의 네 가지이다. 이중 사회계층 변인은 “부친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계층구분은 상-중-하의 세 단계로 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계층구분의 기준과 구성비

구 분	계층구분 기준	구성비
상	- 부친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전체 - 부친학력이 “대졸”이며 가정 경제수준이 “중간보다 잘 사는 편” 이상 - 부친학력이 “고졸”이며 가정의 경제수준이 “매우 잘 사는 편”인 경우	16.7% (181명)
하	- 부친학력이 “국졸 이하”인 경우 전체 - 부친학력이 “고졸”이며 가정 경제수준이 “중간보다 못사는 편” 이하 - 부친학력이 “중졸”이며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수준”이하	19.9% (216명)
중	- 상층 및 하층을 제외한 전체	63.3% (686명)

2. 조사결과 분석

가. 통일관

반세기 이상 남북분단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일을 민족의 지상과제로 간주하여 절대시하던 입장이 주류였음에 비해 최근에는 통일

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분단상황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청소년층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과연 통일문제에서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통일 이후의 우리사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가) 통일에 관한 대화 정도

평소에 가족·친구 등 주위사람들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화의 빈도에 따른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하지 않는다”가 41.3%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저 그렇다”가 40.9%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가 9.8%인 반면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각각 7.6%, 0.5%).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의 정도가 그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통일에 관한 대화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하지 않는다	107	9.8
거의 하지 않는다	453	41.3
그저 그렇다	449	40.9
자주 한다	83	7.6
매우 자주 한다	5	0.5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 학교계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의 통일관련 대화빈도가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에 관해서 “전혀” 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남학생이 53.2%로서 과반수에 달하는 반면, 여학생은 49.2%로서 절반에 못 미쳤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가 매우 현격하여 인문계 학생의 “전혀” 또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49.2%인 반면, 실업계 학생은 58.8%에 달하여 인문계 학생들의 통일관련 대화빈도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 중 남자보다는 여자,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층별로는 상층 집단이 중-하층 집단보다,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대화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 통일에 관한 대화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그 저 그렇다	자주한다	매 우 자주한다
성 별	남 자	12.4	40.8	37.9	8.6	0.3
	여 자	6.8	42.4	43.9	6.4	0.4
계 열	인문고	8.6	40.6	42.2	8.0	0.6
	실업고	15.8	43.0	33.9	7.2	-

※ 통계치: 성별 $\chi^2=12.74^*$, 계열 $\chi^2=13.74^{**}$

※ 주: 이 보고서에서는 통계적 유의도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 $p<0.05$, ** $p<0.01$, *** $p<0.001$

(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청소년들은 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에 대한 “찬성” “반대” “무관심”을 포괄하는 다섯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찬성”이 27.3%,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극적 찬성”이 48.6%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청소년이 약 76%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현 상태의 유지를 선호하는 “소극적 반대”가 15.8%에 머물러 있고, 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적극적 반대”는 극소수(1.8%)에 불과했다. 통일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무관심”의견은 6.6%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수는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대”와 “무관심”을 포함한 “비찬성”의 입장에 있는 청소년도 1/3 정도에 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III-5>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내 용	빈 도	비 율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299	27.3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533	48.6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173	15.8
통일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	20	1.8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72	6.6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 학교계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일에 찬성하는 남학생이 79.7%로서 여학생(71.6%)을 8% 가량 상회하였고 무관심 집단의 비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의 찬성 응답율이 78.4%에 달하는 반면 실업계는 65.1%로서 현격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실업계 고교생들은 “현상유지” 입장의 응답율이 “적극적 찬성” 응답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자 인문계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자 실업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층별로는 상층 집단이 중-하층 집단보다, 주변에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6>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한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성별	남 자	34.0	45.7	12.9	1.9	5.4
	여 자	19.1	52.5	18.9	1.8	7.6
계열	인문고	28.6	49.8	14.2	1.2	6.2
	실업고	20.8	44.3	23.1	3.6	8.1

※ 통계치: 성별 $\chi^2=33.08^{***}$, 계열 $\chi^2=20.71^{***}$

(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통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당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묻는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과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청소년(85.8%)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7명중 1명 정도(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남북교류에 활성화에 따라 단계적·점진적 평화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우리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사회의 통일논의를 주도해 나갈 고교생 중 적지 않은 인원이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표 III-7>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예(가 능)	929	85.8
아니오(불가능)	154	14.2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학교계열, 계층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체로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 중-하층 집단보다는 상층 집단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결과를 보면, 학교계열별로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이 인문계 학생의 경우 87.6%에 달하는 반면 실업계 학생은 78.5%에 불과하여 1/5 이상이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부

정적으로 평가하여 하층 집단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율이 18.3%로서 상층 집단(6.7%)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통일의 가능성을 다소 높게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8>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예(가능)	아니오(불가능)
성 별	남 자	87.4	12.6
	여 자	84.2	15.8
계 열	인문고	87.6	12.4
	실업고	78.5	21.5
사회계층	하	81.7	18.3
	중	84.9	15.1
	상	93.3	6.7

※ 통계치: 성별 $\chi^2=2.31$, 계열 $\chi^2=11.62^{**}$, 계층 $\chi^2=11.67^{**}$

(라) 통일 시기 예상

앞의 문항에서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과연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선택지로 제시된 4항목 중에서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43.8%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년 이내”(26.5%), “5년 이내”(17.5%)의 순이었고 “20년 이상”이 12.2%로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최근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통일 시기 예상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5년 이내	162	17.5
10년 이내	405	43.8
20년 이내	245	26.5
20년 이상	113	12.2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 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 중-상층 집단보다는 하층 집단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남자가 21.6%임에 비해 여자는 12.7%에 불과했고, 계층별로는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 하층 집단이 22.0%임에 비해 상층집단은 14.3%에 머물렀다. 이밖에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학생,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5년 이내” “10년 이내”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0> 통일 시기 예상

(단위: %)

구 분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상
성 별	남 자	21.6	42.2	25.5	10.6
	여 자	12.7	46.0	27.7	13.6
계 열	인문고	16.9	43.0	27.9	12.2
	실업고	21.1	47.6	20.5	10.8
사회계층	하	22.0	36.4	26.0	15.6
	중	17.0	47.4	24.8	10.8
	상	14.3	39.9	32.1	13.7

※ 통계치: 성별 $\chi^2=13.32^{**}$, 계열 $\chi^2=5.00$, 계층 $\chi^2=12.91^*$

(2) 통일의 과제와 장애요인

(가) 통일논의에 대한 불만사항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논의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6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하여 청소년들 대다수가 현재의 통일논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의 내용으로서는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40.0%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20.0%),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19.0%), “남북한을 적대·대립관계로만 생각한다”(6.0%)의 순이었으며 기타 의견은 3.4%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통일논의에 대한 불만사항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180	20.0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361	40.0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	171	19.0
남북한을 적대·대립관계로만 생각한다	54	6.0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	105	11.6
기 타	31	3.4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녀 모두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나(남자 37.4%, 여자 42.3%), 그 다음으로 남학생들은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23.3%)는 점을 지적한 반면, 여학생들은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20.6%)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III-12> 통일논의에 대한 불만사항

(단위: %)

구 분		청소년 의견 미반영	국민 의견 미반영	너 무 추상적	남북한을대립 관계로 생각	불 만 없 다	기 타
성별	남 자	23.3	37.4	17.2	4.4	14.8	2.9
	여 자	16.5	42.3	20.6	7.8	8.7	4.1
계열	인문고	19.6	40.4	19.3	5.6	11.6	3.5
	실업고	20.8	37.5	18.8	6.8	12.5	3.6

※ 통계치: 성별 $\chi^2=20.11^{**}$, 계열 $\chi^2=0.93$

(나) 통일을 위한 중요과제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7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이 34.6%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24.7%),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23.8%)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8.6%),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7.0%), “강대국의 협조 요청”(0.5%) 등은 응답률은 모두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청소년들이 통일은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남한보다는 북한 내부의 체제개혁을 통일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III-13> 통일을 위한 중요과제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379	34.6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	261	23.8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77	7.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270	24.7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94	8.6
강대국의 협조요청	5	0.5
기 타	9	0.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학교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여학생은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열별로는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지적한 응답률이 인문계 학생들은 36.9%에 달함에 비해 실업계 학생들은 28.2%에 머물렀다.

<표 III-14> 통일을 위한 중요과제

(단위: %)

구 분		상호이해·신뢰구축	상호간교류·협력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자유화·개방	미군 철수·보안법 철폐	강대국의 협조 요청	기 타
성별	남 자	31.3	26.4	5.4	24.5	10.8	0.7	0.9
	여 자	38.9	21.3	8.0	24.9	5.9	0.2	0.8
계열	인문고	36.9	23.0	6.6	24.0	8.6	0.1	0.8
	실업고	28.2	26.8	6.4	27.3	8.6	1.8	0.9

※ 통계치: 성별 $\chi^2=19.53^{**}$, 계열 $\chi^2=16.23^*$

(다) 통일의 장애요인

현재 우리사회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장애요인들을 안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사회에서 통일논의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모두 11가지를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그것이 얼마나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에서 “매우 장애가 된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최소: 1점 최대 5점).

분석의 편의상 각 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단계별로 유형화해보면, 먼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장애요인(평균값 4.0이상)으로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4.15)와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4.10)가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의 장애요인(평균값 3.5 이상)으로는 “남북한의 이념 대립”(3.97),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3.92),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3.60), “주한미군 주둔”(3.60),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3.55) 등이 지적되었고, 중간 수준(3.0 이상)의 장애요인은 “통일방법상의 차이”(3.43),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3.30),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3.14)가 거론 되었으며, “상호 통일의지 결여”(2.9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표 III-15> 통일의 장애요인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4.15	1.10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4.10	1.04
남북한의 이념 대립	3.97	0.95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3.92	0.98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	3.60	1.04
주한미군 주둔	3.60	1.21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3.55	1.23
통일방법상의 차이	3.43	1.13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	3.30	1.25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3.14	1.31
상호 통일의지 결여	2.98	1.28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분석을 위해 항목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주성분분석-직교회전).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모두 세 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은 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치·경제·군사적인 대립과 갈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갈등” 변인으로, 요인 II는 남북한간의 대립·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지·노력 부족” 변인으로, 요인 III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대국 이해관계” 변인으로 각각 명명하기로 한다.

<표 III-16> 통일의 장애요인: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 인	항 목	I	II	III
요인 I (상호 대립·갈등)	남북한의 이념 대립	<u>0.669</u>	0.061	-0.067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u>0.651</u>	0.023	0.047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u>0.636</u>	0.032	0.061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u>0.482</u>	0.188	0.137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u>0.432</u>	-0.236	0.290
	남북한 통일방법상의 차이	<u>0.402</u>	0.285	-0.040
요인 II (통일의지·노력 부족)	상호 통일의지 결여	0.735	<u>0.842</u>	0.076
	상호 실질적인 노력 부족	0.116	<u>0.795</u>	0.043
요인 III (강대국 이해관계)	주한미군의 주둔	0.156	0.731	<u>0.795</u>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0.631	0.228	<u>0.783</u>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이들 세 변인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상호 대립·갈등구도”가 3.85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강대국의 이해관계” (3.37)였으며, “통일의지·노력부족이 3.31으로서 가장 낮았다. 즉, 청소년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착되어 온 내부적 대립·갈등 구도를 통일의 최대의 장애요인으로,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그 다음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두 요인에 비교하여 “통일·의지노력 부족” 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최근 정상회담을 유사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교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7> 통일의 장애요인: 요인별 평균값

구 분	척도신뢰도	평 균	표준편차
상호 대립·갈등 구도	0.56	3.85	0.5971
통일의지·노력 부족	0.65	3.13	1.0910
강대국 이해관계	0.49	3.37	1.0261

(3) 통일 후의 사회전망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 우리사회가 지금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에서 “매우 좋아질 것이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어려워질 것이다” 는 응답이 39.9%로가 가장 다수였으며, 다음으로 “좋아질 것이다”(28.4%), “그저 그럴 것이다” (17.6%)의 순이었으며, 극단적인 변화(“매우 어려워질 것이다”와 “매우 좋아질 것이다”)를 예상하는 응답률은 모두 10% 미만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악화되리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달하여(47.9%), 호전되리라는 응답(34.4%)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것은 통일 이후 독일사회의 혼란상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내용이 응답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표 III-18> 통일 후의 사회 전망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88	8.0
어려워질 것이다	438	39.9
그저 그럴 것이다	193	17.6
좋아질 것이다	312	28.4
매우 좋아질 것이다	66	6.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변인에서 유의미하였다. 통일 이후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악화되리라는 응답율이 여학생은 과반수에 달함에 비해(51.4%), 남학생은 44.75에 머물러 남학생들이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통일 이후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호전되리라는 응답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9> 통일 후의 사회전망

(단위: %)

구 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성별	남 자	7.9	36.8	17.1	29.5	8.7
	여 자	7.8	43.6	18.4	27.3	2.9
계열	인문고	7.7	39.3	17.9	28.2	6.8
	실업고	9.0	42.5	16.7	28.1	3.6

※ 통계치: 성별 $\chi^2=18.90^{**}$, 계열 $\chi^2=3.82$

나. 북한관

최근 남북교류 분위기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동안 단편적·제한적으로

만 알려져 왔던 북한관련 정보가 매스컴의 보도 등을 통하여 연일 우리사회에 소개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북한 예술단의 공연 등 지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는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북한사회·북한 사람의 이미지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고 변모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세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관련 정책과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북한사회와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대북정책 인지와 의견

(가) “햇볕정책”의 인지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햇볕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45.1%에 머물렀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햇볕정책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낮은 인지도는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들은 바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III-20> “햇볕정책”의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알고 있다	486	45.1
모 르 다	592	54.9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학교계열, 사회계층의 두 가지 변인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계열별로는 햇별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 이 인문계 학생은 47.5%에 달함에 비해 실업계 학생은 2할 이상 낮은 수준인 27.1%에 머물렀다. 계층별로는 상층 집단이 중-하층 집단에 비 해 햇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응 답결과는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 중-하층보다는 상위계층 청소년들 이 통일문제를 포함한 현실 시사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1> “햇별정책”의 인지도

(단위: %)

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성 별	남 자	47.5	52.5
	여 자	42.5	57.5
계 열	인문고	49.5	50.5
	실업고	27.1	72.9
사회계층	하	37.1	62.9
	중	41.8	58.2
	상	66.5	33.5

※ 통계치: 성별 $\chi^2=2.66$, 계열 $\chi^2=34.36^{***}$, 계층 $\chi^2=41.44^{***}$

(나) “햇별정책”에 대한 의견

햇별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햇별정책을 어떻 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에서 “매우 바람 직하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바람직하다”가 41.9%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그 저 그렇다”(33.5%), “바람직하지 않다”(13.0%)의 순이었고, “매우 바람 직하다”(7.9%)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3.7%)라고 하는 강한 찬성과 반대 응답은 모두 10% 미만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찬성응답(49.8%)

이 반대응답(16.7%)의 약 3배에 달하여 청소년들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8	3.7
바람직하지 않다	63	13.0
그저 그렇다	162	33.5
바람직하다	203	41.9
매우 바람직하다	38	7.9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계층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햇볕정책에 찬성하는 남학생의 응답률이 54.5%임에 비해 여학생은 44.4%에 머물렀고, 계층별로는 하층집단의 찬성응답이 중-상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찬성율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3>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전혀 바람직하 지 않다	바람직하 지 않다	그저 그렇다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성 별	남 자	4.1	10.5	30.8	44.0	10.5
	여 자	2.8	15.9	36.9	39.7	4.7
계 열	인문고	3.4	12.4	33.7	42.4	8.0
	실업고	3.6	16.1	37.5	35.7	7.1
사회계층	하	-	9.2	38.2	35.5	17.1
	중	3.2	12.1	35.1	43.6	6.0
	상	5.9	17.6	26.1	43.7	6.7

※ 통계치: 성별 $\chi^2=10.18^*$, 계열 $\chi^2=1.30$, 계층 $\chi^2=21.06^{**}$

(다)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선택지로 제시된 다섯 가지 정책 중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43.5%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협력 및 지원”(21.8%), “식량이나 비료를 비롯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19.9%)의 순이었으며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국방경계태세 확립”(7.8%)과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붕괴 유도”(7.0%)는 1할 미만의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응답성향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서 상호간의 교류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체제간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식량이나 비료를 비롯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204	19.9
경제적 협력 및 지원	223	21.8
사회문화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446	43.5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붕괴 유도	72	7.0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국방경계태세 확립	80	7.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는 성, 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여학생들은 북한의 붕괴 유도와 국방 태세 확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남학생들의 대북관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평화적·유화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사회문화 교류에, 실업계 학생이 식량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계층별로는 하층 집단이 식량 지원에, 상층 집단이 국방 확립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점이 주목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5>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구 분		식량·비료등 인도적 지원	경제적 협력·지원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압박·봉쇄 통한 붕괴유도	철저한 국방태세 확립
성별	남 자	20.0	25.6	42.9	4.8	6.7
	여 자	19.4	17.8	44.4	9.2	9.2
계열	인문고	17.7	22.0	46.1	6.9	7.3
	실업고	27.3	21.8	32.4	7.9	10.6

※ 통계치: 성별 $\chi^2=16.41^{**}$, 계열 $\chi^2= 17.82^{**}$

(라) 북한돕기운동 참여경험

근년에 접어들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교류와 더불어 각종 사회·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 돕기 행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돕기 행사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북한돕기 운동에 아직까지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68.6%로서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31.4%)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III-26> 북한돕기운동 참여경험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참여한 적이 있다	341	31.4
참여한 적이 없다	744	68.6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층, 이산가족 유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하층집단의 경우 22.9%임에 비해 중-상층 집단은 모두 30%이상이었는데(각각 37.4%, 32.4%), 이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의 참여율이 40.9%로서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응답율(29.8%)을 10% 이상 상회하였다. 계열별로는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의 참여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7> 북한돕기운동 참여경험

(단위: %)

구 분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성 별	남 자	31.3	68.7
	여 자	31.7	68.3
계 열	인문고	31.9	68.1
	실업고	28.0	72.0
사회계층	하	22.9	77.1
	중	32.4	67.6
	상	37.4	62.6
이산가족	이산있다	40.9	59.1
	이산없다	29.8	70.2

※ 통계치: 성별 $\chi^2=0.01$, 계열 $\chi^2=1.20$, 계층 $\chi^2=10.46^{**}$, 이산 $\chi^2=7.54^{**}$

(2) 북한관련 정보·교육

(가) 북한관련 정보입수 매체

청소년들은 북한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4가지와 학교수업의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북한관련 정보를 입수한다는 응답이 88.5%로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여 오늘날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텔레비전의 높은 비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신문”(8.1%), “잡지”(0.9%), “라디오”(0.3%)의 응답률은 모두 10% 미만에 머물렀다. “학교수업”을 통해 북한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통일·북한관련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8> 북한관련 정보입수 매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TV	970	88.5
신 문	89	8.1
잡 지	10	0.9
라디오	3	0.3
학교수업	24	2.2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분석의 대상이 된 4가지 독립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하위집단에서 “텔레비전”이 85% 이상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른 매체를 선택한 응답은 10% 미만에 머물렀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계층 변인에서 상층 집단의 “텔레비전” 응답율(85.6%)이 중-하층 집단(각각

89.8%, 88.0%)보다 낮은 편이고, “신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일하게 1할을 상회(11.0%)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I-29> 북한관련 정보입수 매체

(단위: %)

구 분		TV	신 문	잡 지	라디오	학교수업
성별	남 자	88.0	9.1	0.9	0.2	1.9
	여 자	89.6	7.0	0.6	0.4	2.3
계열	인문고	88.7	8.6	0.7	0.2	1.8
	실업고	89.5	5.0	1.4	0.5	3.6

※ 통계치: 성별 $\chi^2=2.44$, 계열 $\chi^2=6.76$

(나) 북한문제 대화상대

북한관련 지식·정보는 대중매체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수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매체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는 당사자간의 교감과 토론,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북한관·통일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북한에 관하여 누구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6가지의 대상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님”이 45.6%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친구나 선·후배”(28.0%), “학교선생님”(11.3%)의 순이었으며, “형제·자매”(7.3%), “할아버지·할머니”(5.4%), “친척·친지”(2.5%)는 모두 1할 미만에 머물렀다. “부모님”의 응답률이 다른 대상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 접하는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30> 북한문제 대화상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부모님	494	45.6
형제·자매	79	7.3
할아버지·할머니	58	5.4
친척·친지	27	2.5
학교선생님	123	11.3
친구나 선·후배	303	28.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학교계열과 이산가족 유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부모님”, 실업계 학생은 “친구나 선·후배”의 응답율이 각각 상대집단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이산을 경험한 조부모 세대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성별로는 남자는 “학교선생님”, 여자는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1> 북한문제 대화상대

(단위: %)

구 분		부모님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친지	학교선생님	친구나 선·후배
성별	남 자	43.3	7.8	5.1	2.8	13.4	27.6
	여 자	48.4	6.7	5.5	1.8	9.1	28.5
계열	인문고	49.6	7.0	5.2	1.9	10.5	25.7
	실업고	32.4	8.2	6.4	3.7	14.2	35.2
이산 가족	이산있다	51.0	6.4	10.8	3.2	7.6	21.0
	이산없다	44.7	7.5	4.4	2.3	12.1	29.1

※ 통계치: 성별 $x^2=7.78$, 계열 $x^2=21.81^{**}$, 이산 $x^2=17.62^{**}$

(다) 북한관련 교육내용 만족도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그저 그렇다”가 44.0%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불만이다”(35.1%), “매우 불만이다”(14.0%), “만족한다”(5.3%)의 순이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극소수(1.6%)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거의 절반 수준(49.1%)에 달하는 반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6.9%)은 1할에도 못 미쳐서 현행 북한관련 교육내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2> 북한관련 교육내용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불만이다	153	14.0
불만이다	385	35.1
그저 그렇다	482	44.0
만족한다	58	5.3
매우 만족한다	18	1.6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학교계열, 사회계층의 세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만족하고 있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8.6%임에 비해 여자는 4.1%,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5.5%임에 비해 실업계는 10.4%로서 남자보다는 여자,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층별로는 상층집단이 중-하층 집단에 비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33> 북한관련 교육내용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 별	남 자	17.5	34.0	40.0	6.5	2.1
	여 자	10.4	36.7	48.8	3.7	0.4
계 열	인문고	14.8	36.4	43.4	4.5	1.0
	실업고	11.3	29.9	48.4	7.7	2.7
사회계층	하	12.5	31.0	45.8	5.6	5.1
	중	12.7	36.2	45.5	5.1	0.6
	상	18.2	38.7	36.5	5.5	1.1

※ 통계치: 성별 $\chi^2=25.06^{***}$, 계열 $\chi^2=12.07^*$, 계층 $\chi^2=29.80^{***}$

(3) 북한·북한청소년관

(가) 북한의 이미지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6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공산주의 체제”(34.0%)와 “김일성·김정일”(33.7%)이 3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굶주림과 기아”(16.0%)의 순으로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백두산”(8.0%), “같은 한민족”(7.0%)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기타 1.4%).

<표 III-34> 북한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공산주의 체제	371	34.0
김일성·김정일	368	33.7
같은 한민족	76	7.0
금강산·백두산	87	8.0
궤주립과 기아	175	16.0
기 타	15	1.4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학교계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같은 한민족”과 “금강산·백두산”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응답률이, 여자는 “공산주의체제” “궤주립·기아”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은 “공산주의체제”, 실업계 학생들은 “금강산·백두산”의 응답율이 상대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표 III-35> 북한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단위: %)

구 분		공산주의 체제	김일성·김정일	같은 한민족	금강산·백두산	궤주립·기아	기 타
성별	남 자	32.3	33.5	8.4	9.6	14.0	2.1
	여 자	36.4	33.9	5.1	5.7	18.4	0.6
계열	인문고	35.7	34.1	6.9	6.2	15.8	1.2
	실업고	26.4	32.7	6.8	13.6	18.2	2.3

※ 통계치: 성별 $\chi^2=18.85^{**}$, 계열 $\chi^2=18.90^{**}$

(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요인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6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북한의 도발적 행위(동해 잠수함 침투, 간첩남파 등)”를 지적한 청소년이 68.5%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 등)”(13.2%), “학교교육”(11.4%)의 순이었으며, “주변사람(부모, 친구, 선배 등)”(2.9%), “북한관련 서적”(2.4%)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III-36>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요인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주변사람(부모, 친구, 선배 등)	32	2.9
학교교육	125	11.4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144	13.2
북한관련 서적	26	2.4
북한의 도발적 행위(동해 잠수함 침투, 간첩남파 등)	749	68.5
기 타	17	1.6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영향요인으로서 남자는 “대중매체”와 “주변사람”, 여자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선택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른 변인에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에서 “학교교육”의 응답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7>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요인

(단위: %)

구 분		주변사람	학교교육	대중매체	북한관련 서적	북한의 도발행위	기 타
성 별	남 자	4.4	12.1	15.1	1.9	64.4	2.1
	여 자	1.2	10.6	10.8	2.3	74.2	1.0
계 열	인문고	2.4	11.6	13.2	2.2	69.0	1.7
	실업고	4.1	9.0	13.6	2.7	69.2	1.4

※ 통계치: 성별 $\chi^2=20.11^{**}$, 계열 $\chi^2=3.20$

(다)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 인지도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혀 모르고 있다”에서 “매우 많이 알고 있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잘 모르고 있다”는 청소년이 43.7%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40.1%이며, “전혀 모르고 있다”(9.1%), “많이 알고 있다”(6.1%), “매우 많이 알고 있다”(1.0%)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전혀 모르고 있다”와 “잘 모르고 있다”)한 청소년이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52.8%),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많이 알고 있다”와 “매우 많이 알고 있다”)하는 청소년은 열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류·협력은 많은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 청소년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청소년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교육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를 알 수 있다.

<표 III-38>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모르고 있다	100	9.1
잘 모르고 있다	479	43.7
보통이다	440	40.1
많이 알고 있다	67	6.1
매우 많이 알고 있다	11	1.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사회계층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체로 상위계층의 청소년들일수록 북한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밖에 여자보다는 남자,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9>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 인지도

(단위: %)

구 분		전혀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보통이다	많이 알고 있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성 별	남 자	11.0	42.9	38.6	6.5	1.0
	여 자	6.8	44.7	42.6	5.3	0.6
계 열	인문고	8.5	44.9	40.2	5.7	0.7
	실업고	10.9	40.3	41.2	7.2	0.5
사회계층	하	11.1	40.7	41.2	3.7	3.2
	중	7.9	45.2	40.4	6.3	0.3
	상	10.5	44.2	36.5	7.7	1.1

※ 통계치: 성별 $\chi^2=7.78$, 계열 $\chi^2=2.88$, 계층 $\chi^2=20.87^{**}$

(라) 북한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에서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0.5%로서 가장 다수이고 그 다음이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27.1%), “친근하게 느껴진다”(19.5%),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10.5%)의 순이었으며,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2.2%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응답(37.8%)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률(21.7%)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북한·북한청소년관련 정보의 절대적인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0> 북한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117	10.7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297	27.1
그저 그렇다	444	40.5
친근하게 느껴진다	214	19.5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4	2.2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는 성, 학교계열의 두 가지 변인에서 유의미하였다.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자가 35.7%, 여자가 40.3%,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37.8%, 실업계가 38.0%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이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사회

계층,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1> 북한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그저 그렇다	친근하게 느껴진다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성 별	남 자	12.0	23.7	42.4	19.2	2.6
	여 자	9.2	31.1	38.9	19.7	1.2
계 열	인문고	9.2	28.6	40.9	19.4	1.9
	실업고	16.3	21.7	39.8	19.0	3.2
이산가족	이산있다	10.1	25.9	36.1	22.8	5.1
	이산없다	10.7	27.5	41.3	18.9	1.5

※ 통계치: 성별 $\chi^2=11.19^*$, 계열 $\chi^2=12.69^*$, 이산 $\chi^2= 10.47^*$

(마)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북한청소년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두 10가지의 성격·행동 및 신체·경제적 특성 변인을 제시하고 남한의 청소년과 비교할 때 북한 청소년들은 어떻다고 생각되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선택지는 각 변인별 5점 서열척도로서 “그저 그렇다”(3점: 남한 청소년과 같은 수준)를 기준으로 부정적인 특성(매우 부정적 1, 부정적 2)과 긍정적인 특성(긍정적 4점, 매우 긍정적 5점)을 묘사하는 항목을 나열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10가지 특성변인 중에서 5가지 특성이 남한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것(3점 이상)으로, 나머지 5가지 특성이 부정적인 것(3점 이하)으로 평가되었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을 살펴보면, “부지런하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4.20), 다음으로 “조용하다”(3.74), “겸손하다”(3.63), “영리하다”(3.49)의 순이었으며, “민

을 수 있다”(3.01)는 남한 청소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남한청소년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가난하다”(1.90)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허약하다”(2.48), “호전적이다”(2.69), “우울하다”(2.82), “무뚝뚝하다”(2.89)의 순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된 “가난하다”와 “허약하다”, “호전적이다”가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반영임을 감안할 때, 개인적인 성격특성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우울하다”와 “무뚝뚝하다”의 두 항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북한청소년의 인간적 이미지는, “우울”하고 “무뚝뚝한” 측면도 있지만 남한청소년보다 “부지런함”, “조용함”, “겸손함”, “영리함”의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I-42>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변인	척도		평균값
	부정적	긍정적	
부지런함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4.20
조용함	시끄럽다	조용하다	3.74
겸손함	무례하다	겸손하다	3.63
영리함	둔하다	영리하다	3.49
신뢰성	믿을 수 없다	믿을수 있다	3.01
상냥함	무뚝뚝하다	상냥하다	2.89
명랑함	우울하다	명랑하다	2.82
평화적	호전적이다	평화적이다	2.69
건강함	허약하다	건강하다	2.48
부유함	가난하다	부유하다	1.93

다. 교류관

(1) 교류·협력 정책 의견

(가) 교류 사례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실시된 구체적인 남북한 교류사례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혀 없다”에서 “매우 많다”에 이르는 5점 서열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한 후 그 평균값을 산출하였다(최소값 1~최대값 5).

사례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4.10)에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남북한 정상회담”(3.52),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3.29), “평양 학생예술단 서울 공연”(3.08)의 순으로 관심도가 높았으며,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공연”(2.78), “남북한 장관급회담”(2.72)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표 III-43> 남북 교류 사례에 대한 관심도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	3.29	1.09
평양 학생예술단 서울 공연	3.08	1.10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공연	2.78	1.08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4.10	1.04
남북한 정상회담	3.52	1.19
남북한 장관급회담	2.72	1.18

※ 비교: 최소값 1(“전혀없다”), 최대값 5(“매우 많다”)

각 교류사례별 응답결과의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검토해 보면,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에서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성, 학교계열, 사회계층의 세 가지 독립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중-하위 계층보다는 상위계층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하여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표 III-44>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성	남 자	3.65	1.22
	여 자	3.40	1.13
계 열	인문고	3.57	1.19
	실업고	3.29	1.19
계 층	하	3.32	1.24
	중	3.54	1.16
	상	3.73	1.24

※ 통계치: 성별 F=12.40***, 계열 F=9.82**, 계층 F=6.14**

※ 비교: 최소값 1(“전혀 없다”), 최대값 3(“매우 많다”)

(나) 통일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역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교류가 남북통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0.0%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매우 긍정적”(37.2%), “그저 그럴 것이다”(10.4%)의 순이었으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응답(“매우 부정적”과 “부정적”)은 2.4%로서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이 약 9할에 달하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표 III-45> 통일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역할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1	1.0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5	1.4
그저 그럴 것이다	114	10.4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49	50.0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08	37.2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체로 남자의 긍정적인 응답율이 여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고 학생의 긍정응답률이 실업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밖에 모든 하위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응답률이 80%를 상회하였다.

<표 III-46> 통일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역할

(단위: %)

구 분		매우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그저 그럴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	매우 긍정적인 영향
성 별	남 자	1.7	1.0	9.6	47.2	40.5
	여 자	0.2	1.4	11.1	53.5	33.8
계 열	인문고	0.8	0.7	9.8	49.5	39.2
	실업고	0.9	2.3	13.6	54.8	28.5

※ 통계치: 성별 $\chi^2=12.71^*$, 계열 $\chi^2=12.82^*$

(다) 남북 교류의 방향

앞으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가 74.7%로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6.5%로서 그 다음이었고, “모르겠다”(5.2%), “축소시켜야 한다”(2.6%), “교류를 단절시켜야 한다”(0.9%)는 소수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9할 이상의 청소년이 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활발한 남북간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7>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818	74.7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81	16.5
축소시켜야 한다	29	2.6
교류를 단절시켜야 한다	10	0.9
모르겠다	57	5.2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 계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남학생이 78.0%로서 여학생(71.0%)이 응답율을 상회하여 대체로 남학생이 남북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약 1할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III-48> 바람직한 남북교류의 방향

(단위: %)

구 분		더욱 활성화시켜야	현재의 상태 유지	축소시켜야	교류를 단절시켜야	모르겠다
성별	남 자	78.0	14.0	2.1	1.4	4.5
	여 자	71.0	19.8	2.7	0.4	6.1
계열	인문고	76.7	15.2	2.3	0.6	5.3
	실업고	67.7	21.4	4.1	1.8	5.0

※ 통계치: 성별 $\chi^2=11.74^*$, 계열 $\chi^2=11.23^*$

(라) 남북 교류·협력의 우선순위

청소년들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어떤 분야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9가지의 교류분야를 제시하고 그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분야로서 “이산가족 상봉”(67.1%)과 “경제협력 분야”(53.9%)가 이에 해당된다. 이 두 분야는 현재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청소년들에게도 가장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2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한 “정보통신 분야(전화, 인터넷 등)”(22.8%)와 “언론분야(TV, 라디오, 신문 등)”(21.9%)로서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교류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분야”(8.4%), “과학·학술분야”(8.3%), “문화·예술 분야(예술단, 곡예단, 역사유물, 미술품 등)”(7.2%), “체육분야”(6.1%), “종교분야”(2.4%) 등의 각종 문화·학술·종교 분야로서 모두 10%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표 III-49> 남북 교류·협력의 우선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경제협력분야	591	53.9
관광분야	92	8.4
체육분야	67	6.1
이산가족 상봉	736	67.1
정보통신분야(전화, 인터넷 등)	250	22.8
언론분야(TV, 라디오, 신문 등)	240	21.9
종교분야	26	2.4
과학·학술분야	91	8.3
문화·예술분야(예술단, 곡예단, 역사유물, 미술품 등)	79	7.2

(2) 청소년 교류·협력

(가) 북한 청소년에 대한 대응

앞으로 북한청소년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섯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담담히 대하겠다”가 42.7%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적극 환대하겠다”(33.2%)로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으로 대하겠다”(4.8%)와 “대화를 피하겠다”(3.8%)는 부정적인 응답률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유보적인 태도(“모르겠다”)를 보인 응답률은 15.5%였다.

<표 III-50> 북한청소년에 대한 대응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적극 환대하겠다	363	33.2
담담히 대하겠다	467	42.7
대화를 피하겠다	42	3.8
적대적으로 대하겠다	52	4.8
모르겠다	170	15.5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학교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문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환대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34.8%)이 실업계(30.3%)보다 많은 반면, 부정적으로 대하겠다는 응답률(7.4%)은 실업계(10.9%)보다 다소 적게 나타나는 등 북한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계층별로는 중-하층 집단보다는 상층 집단,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북한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1> 북한청소년에 대한 대응

(단위: %)

구 분		적극 환대하겠다	담담히 대하겠다	대화를 피하겠다	적대적으로 대하겠다	모르겠다
성 별	남 자	31.9	42.9	3.7	5.8	15.7
	여 자	34.8	42.7	3.5	3.5	15.5
계 열	인문고	34.3	44.3	3.1	4.3	14.0
	실업고	30.3	36.2	5.0	5.9	22.6
사회계층	하	29.6	39.4	3.7	5.6	21.8
	중	33.0	44.2	3.2	4.8	14.8
	상	39.2	42.0	5.5	3.3	9.9

※ 통계치: 성별 $\chi^2=3.58$, 계열 $\chi^2=14.50^{**}$, χ^2 =계층 16.23*

(나) 북한 방문 의사

만약 남북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될 경우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청소년이 “방문하겠다”고 응답하였고(85.2%), 방문할 의사가 없다는 청소년은 14.8%로서 소수에 머물렀다.

<표 III-52> 북한방문 의사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방문하겠다	924	85.2
방문하고 싶지 않다	161	14.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집단에 걸쳐 방문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80%를 상회하였고, 네 가지 독립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53> 북한방문 의사

(단위: %)

구 분		방문하겠다	방문하고 싶지 않다
성 별	남 자	84.5	15.5
	여 자	85.9	14.1
계 열	인문고	85.9	14.1
	실업고	82.9	17.1

※ 통계치: 성별 $\chi^2=0.40$, 계열 $\chi^2=1.22$

(다) 남북 청소년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만약 앞으로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것이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매우 부정적인 영향”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54.3%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25.0%), “그저 그럴 것이다”(17.2%)의 순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이 79.3%로서 전체의 8할 수준에 달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3.5%(“부정적인 영향” 2.3%, “매우 부정적인 영향” 1.3%)로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표 III-54> 남북 청소년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1.3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2.3
그저 그럴 것이다	188	17.2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94	54.3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3	25.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 학교계열 등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여자 81.6%, 남자 77.8%), 계열별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률이 인문계 학생이 82.2%로서 실업계 학생(69.1%)보다 1할 이상 상회하였다. 계열별로는 하층 집단보다는 중-상층 집단이,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5> 남북 청소년교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 분		매우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그저 그럴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	매우 긍정적인 영향
성별	남 자	1.9	3.0	17.3	50.7	27.1
	여 자	0.6	1.4	16.4	58.6	23.0
계열	인문고	0.8	1.8	15.2	54.2	28.0
	실업고	2.7	3.6	24.5	53.2	15.9

※ 통계치: 성별 $\chi^2=11.86^*$, 계열 $\chi^2=26.87^{**}$

(라) 남북 청소년 교류 참여의사

앞으로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자신이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가능하면 참가하겠다”는 청소년이 53.3%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참가하지 않겠다”가 15.7%, “반드시 참가하겠다”가 8.2%였으며 “절대 참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가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61.5%로서 참여의사가 없는 청소년(20.1%)의 세배 이상에 달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표 III-56> 남북 청소년교류 참여의사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반드시 참가하겠다	89	8.2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578	53.3
참가하지 않겠다	170	15.7
절대 참가하지 않겠다	48	4.4
모르겠다	200	18.4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학교계열, 사회계층의 세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참여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66.8%)이 남학생(57.1%)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62.3%)이 실업계 학생(56.0%)보다 각각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 집단 청소년의 참가하겠다는 응답율이 67.8%로서 60% 남짓한 중-하층 청소년의 응답률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참여의사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7> 남북 청소년교류 참여의사

(단위: %)

구 분		반드시 참가하겠다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절대 참가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성 별	남 자	8.1	49.0	18.7	5.6	18.5
	여 자	7.9	58.9	12.0	2.6	18.7
계 열	인문고	8.5	53.8	16.0	3.6	18.1
	실업고	6.0	50.0	14.2	7.3	22.5
사회계층	하	8.0	52.6	14.1	7.5	17.8
	중	7.2	53.4	15.6	2.9	20.9
	상	12.2	55.6	16.7	6.1	9.4

※ 통계치: 성별 $\chi^2=18.64^{**}$, $\chi^2=$ 계열 9.51*, $\chi^2=$ 계층 24.39**

(마) 남북 청소년 교류의 참여희망 분야

앞으로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사업이 시행될 경우 어떤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7가지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수학·단체 여행”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4.7%), “유적지·명승지 답사”(16.9%), “체육활동”(12.3%), “예

능활동(음악·미술 등)(10.4%) 등이 1할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학술활동”(2.4%)과 “문예활동”(2.1%)을 선택한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기타” 0.8%).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청소년들이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 그동안 미지의 세계로 존재해 왔던 북한사회의 생활상과 자연경관, 문화유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58> 남북 청소년교류의 참여희망 분야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유적·명승지 답사	112	16.9
체육활동	84	12.7
예능활동(음악·미술 등)	69	10.4
수학·단체 여행	362	54.7
문예활동	14	2.1
학술활동	16	2.4
기 타	5	0.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는 “체육활동”, 여자는 “수학·단체여행”을 선호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에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 학생의 “예능활동”, 계층별로는 하위계층 청소년의 “유적·명승지 답사”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9> 남북 청소년교류의 참여희망 분야

(단위: %)

구 분		유적지·명승지 답사	체육 활동	음악·미술등 예능활동	수학·단체 여행	문예 활동	학술 활동	기타
성 별	남 자	17.7	22.0	5.6	48.1	2.2	3.4	0.9
	여 자	15.8	3.9	15.2	61.0	2.1	1.5	0.6
계 열	인문고	16.9	12.2	9.3	56.3	1.9	2.5	0.8
	실업고	13.3	13.3	16.7	52.5	2.5	0.8	0.8

※ 통계치: 성별 $\chi^2=65.10^{***}$, 계열 $\chi^2=7.42$

(3) 청소년의 동질성과 이질성

(가) 남북 청소년간 이질화가 심각한 분야

현재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질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전된 부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선택지로 제시된 여섯 가지 부문중에서 “가치관(이념, 관습, 규범 등)”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6.3%), 이어서 “생활문화(의·식·주 등)”(13.4%), “대중문화(문화, 예술, 문학 등)”(12.0%), “교육문화(학교·학업 관련)”(9.3%) 등이 10% 내외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놀이문화”(7.8%)와 “전통문화”(1.1%)를 지적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머물렀다.

<표 III-60> 남북 청소년간 이질화가 심각한 분야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생활문화(의·식·주 등)	145	13.4
가치관(이념, 관습, 규범 등)	610	56.3
대중문화(문화, 예술, 문학 등)	130	12.0
놀이문화	85	7.8
교육문화(학교·학업 관련)	101	9.3
전통문화	12	1.1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학교계열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남자는 “생활문화”, 여자는 “가치관”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의 “가치관” 응답률과 실업계 학생들의 “생활문화” 응답률이 상대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표 III-61> 남북 청소년간 이질화가 심각한 분야

(단위: %)

구 분		생활문화	가치관	대중문화	놀이문화	교육문화	전통문화
성 별	남 자	16.8	48.1	13.1	9.9	10.1	1.9
	여 자	9.2	66.0	10.6	5.5	8.4	.2
계 열	인문고	10.8	60.1	11.7	7.6	9.3	.5
	실업고	24.1	41.8	12.7	8.2	9.5	3.6

※ 통계치: 성별 $\chi^2=42.91^{***}$, 계열 $\chi^2=48.15^{***}$

(나) 남북 청소년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앞으로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이 시행되어 북한청소년과

같이 활동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이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모두 11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전통문화 분야”가 47.1%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체육분야”의 39.5%였다. 다음으로 20% 내외의 응답률을 나타낸 항목으로는 “예술분야(연극, 음악, 미술 등)”(24.4%), “인터넷·컴퓨터 분야”(21.3%), “학술분야(역사탐구, 학술토론 등)”(19.1%) 등 이었고, 이어서 “오락분야(만화, 게임 등)”(15.5%)와 “문학분야(소설, 시 등)”(9.2%)가 10% 안팎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종교분야”의 응답률(3.3%)이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의 현실을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기타”2.4%)

<표 III-62> 남북 청소년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체육분야	433	39.5
인터넷, 컴퓨터 분야	234	21.3
전통문화 분야	517	47.1
만화, 게임 등의 오락분야	170	15.5
소설, 시 등의 문학분야	101	9.2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예술분야	268	24.4
종교분야	36	3.3
역사탐구, 학술토론 등의 학술분야	209	19.1
기타	26	2.4

(라) 청소년교류를 통한 이질성 해소의 가능성

만약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통해 현존하는 문화적 이질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선택지로서는 “전혀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에서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60.0%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그저 그럴 것이다”(22.4%), “거의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9.3%),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6.6%)의 순이었으며, “전혀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고 보는 응답은 극소수(1.7%)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66.6%에 달하여 불가능하다는 응답률(11.0%)의 6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표 III-63> 청소년 교류를 통한 이질성 해소의 가능성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18	1.7
거의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101	9.3
그저 그럴 것이다	243	22.4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650	60.0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	71	6.6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 “그저 그럴 것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청소년이 26.5%로서 남자의 응답율(18.4%)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밖에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계층별로는 상층 집단이 중-하층 집단보다, 이산가족 유무별로는 이산가족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

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64> 청소년 교류를 통한 이질성 해소의 가능성

(단위: %)

구 분		전혀 해소시킬 수 없을 것	거의 해소시킬 수 없을 것	그저 그럴 것이다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매우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
성별	남 자	2.8	10.2	18.4	61.1	7.4
	여 자	0.4	8.1	26.5	59.5	5.5
계열	인문고	1.3	8.6	21.7	62.3	6.1
	실업고	3.2	12.3	23.6	54.5	6.4

※ 통계치: 성별 $\chi^2=20.51^{***}$, 계열 $\chi^2=8.10$

3. 요약 및 논의

가. 조사결과 요약

(1) 통일관

(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견

청소년들은 평소에 가족·친구 등 주위사람들과 통일문제에 대해 그다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다. 대화하지 않는다(거의 또는 전혀)는 청소년이 과반수(51%)에 달하는 반면, 대화를 나눈다(자주 또는 매우)고 응답한 청소년은 1할에도 못 미쳤다(8%). 이와 같은 낮은 대화빈도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특히 무관심해서라기 보다는 통일·북한문제 관련 정보와 교육의 부재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청소년이 76%임에 비해, 현상유지가 16%, 무관심이 7%, 절대 반대가 2% 수준이

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점진적인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고 있었고 “현상유지”“절대 반대”와 “무관심”을 포함한 “통일 비찬성” 입장에 있는 청소년도 1/3 수준에 이르렀다.

통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청소년(85.8%)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7명중 1명 정도(14.2%)에 달하였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10년 이내”(4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년 이내”(26.5%), “5년 이내”(17.5%)의 순이었고 “20년 이상”(12.2%)이 가장 적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통일의 과제와 장애요인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관련 논의에 대해 약 9할의 청소년(88.4%)이 불만을 갖고 있었고, 불만의 주요내용은 “일방적인 정부주도”(40.0%), “청소년의견을 배제한 성인중심의 논의”(20.0%) 등이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로서는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34.6%),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24.7%),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23.8%) 등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청소년들은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교류 추진을 통한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선호하였다.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재정리하면, “상호 대립·갈등구도”(3.85)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강대국의 이해관계”(3.37), “통일의지·노력부족”(3.31)의 순이었다. “통일의지·노력부족”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은 최근 정상회담을 위시한 남북한 당국간의 화해·교류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 통일 후의 사회전망

통일 이후의 사회전망에 대하여 지금보다 악화되리라는 응답이 47.9%로서, 호전되리라는 응답(34.4%) 보다 많았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17.6%에 달하여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북 한 관

(가) 대북정책 인지와 의견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되고 있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5.1%로서 절반에 못 미쳤다. 통일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가정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표명한 청소년이 49.8%로서 반대 응답률(16.7%)의 약 3배에 달하여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지지율을 엿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응답률이 43.5%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협력 및 지원”(21.8%), “식량이나 비료를 비롯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19.9%)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서 상호간의 교류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체제간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나) 북한관련 정보·교육

청소년들이 북한관련 지식·정보를 입수하는 매체로서는 “텔레비전”이 88.5%로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학교수업”을 통해 북한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이것은 우리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통일·북한관련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북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대상으로는 “부모님”이 45.6%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친구나 선·후배”(28.0%), “학교선생님”(11.3%) 등의 순이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 거의 절반 수준(49.1%)으로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6.9%)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다) 북한·북한청소년관

북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로써 “공산주의체제”(34.0%)와 “김일성·김정일”(33.7%)이 3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굶주림과 기아”(16.0%)의 순으로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백두산”(8.0%), “같은 한민족”(7.0%)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기타 1.4%).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요인으로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응답률(68.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중매체”(13.2%), “학교교육”(11.4%) 등의 순이었다.

북한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52.8%),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한명에도 못미치고 있다. 남북 청소년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청소년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교육체계의 정립이 시

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0.5%로서 가장 다수였고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응답(37.8%)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률(21.7%)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북한·북한청소년 관련 정보의 절대적인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청소년들이 자신들에 비해 “부지런하다”, “조용하다”, “겸손하다”, “영리하다”, “믿을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가난하다”, “허약하다”, “호전적이다”, “우울하다”, “무뚝뚝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특성을 제외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북한청소년의 인간적 이미지는, “우울”하고 “무뚝뚝한” 측면도 있지만 남한청소년보다 “부지런함” “조용함” “겸손함” “영리함”의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교류 관

(가) 교류·협력정책 의견

최근에 실시된 구체적인 남북한 교류사례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4.10)에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남북한 정상회담”(3.52), “평양 교예단 서울 공연”(3.29), “평양 학생예술단 서울 공연”(3.08) 등의 순이었다.

남북한간의 교류가 남북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응답이 87.3%에 달하는 반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2.4%)에 불과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9할 이상의 청소년이 현 수준(16.5%) 또는 그 이상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74.7%)하였으며 축소 또는 단절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극소수(3.5%)였다.

청소년들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사업의 우선순위(복수응답)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산가족 상봉”(67.1%)과 “경제협력 분야”(53.9%)를 지적하였으며 이밖에도 “정보통신 분야”(22.8%)와 “언론 분야”(21.9%)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교류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나) 청소년 교류·협력

북한청소년을 직접 만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담담히 대하겠다”(42.7%), “적극 환대하겠다”(33.2%)는 응답이 다수로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약 남북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될 경우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방문하겠다”고 응답하였다(85.2%),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8할 수준(79.3%)에 달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3.5%로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앞으로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1.5%로서 참여의사가 없는 청소년(20.1%)의 세배 이상에 달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사업이 시행될 경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수학·단체 여행”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4.7%), 다음으로는 “유적지·명승지 답사”(16.9%), “체육활동”(12.3%), “예능활동(음악·미술 등)”(10.4%) 등의 순이었다.

(다) 청소년의 동질성과 이질성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질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전된 부문으로서 “가치관”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6.3%), 이어서 “생활문화”(13.4%), “대중문화”(12.0%) 등의 순이었으며 “전통문화”(1.1%)를 지적인 응답이 가장 적었다.

남북한간의 청소년간의 가장 많은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서는 “전통문화 분야”가 47.1%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체육분야”(39.5%), “예술분야”(24.4%), “인터넷·컴퓨터 분야”(21.3%) 등의 순이었고 “종교분야”의 응답률(3.3%)이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의 현실을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현존하는 문화적 이질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또는 많이 해소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66.6%에 달하여 해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11.0%)의 6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나. 논의와 시사점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청소년이 찬성했지만, 약 1/4의 청소년이 현상유지 또는 반대 입장을 취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리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7명중 1명에 달하고 있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남북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체험이 없고 사회·경제적인 쟁점보다는 학업이나 문화·여가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예상 가능한 응답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통일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머지 않은 장래에 이들이 우리사회의 통일과정을 주도해 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임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관련 정보·교육시스템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5%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북한관련 교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행 학교교육이 특정교과를 중심으로 한 입시준비 위주의 학생지도에만 편중되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지식·기술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국가·사회의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통일문제가 국가·사회의 방향과 진로를 좌우하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관련 정보·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북한청소년의 인간적 이미지는, “우울”하고 “무뚝뚝”한 측면도 있지만 남한청소년들보다 “부지런함” “조용함” “검손함” “영리함”의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과 북한청소년에 대한 정보·지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는 과거 체제경쟁의 과정에서 조장된 허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들을 자신보다 열등하거나 적대적인 존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대화를 피하겠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머물

렸다.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체험에 얽매어 있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선입견과 편견 없이 북한청소년과 마주하여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정부주도-성인중심의 남북교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으로서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의의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들 수 있다.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할에 이르렀고 실제로 남북한 청소년교류 사업이 시행된다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할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태어나고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매스컴의 보도내용 등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에 불과하며, 따라서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기성 세대의 것과는 큰 격차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한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외세에 의해 강요된 우리의 분단현실을 되돌아보고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실태 및 분단국 사례 분석

그 동안 남북한 청소년교류 및 협력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얻게된 다소 완화되어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 기회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중요성과 탈이데올로기적인 순수한 태도로부터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청소년교류의 실태 등을 일반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앞서 제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의 결과들과 연계하여 지금까지의 교류, 협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같은 분단국으로서의 고통을 겪었던 동·서독의 통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실태

대북정책의 변화는 90년대를 전후하여 급격한 진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남북 청소년교류와 협력 또한 이 시점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분단의 지속은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로 인해 남북간의 청소년교류 또한 커다란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극히 제한된 영역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교류를 제외한 그 밖의 교류들은 불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연령적 지위가 지니고 있는 순수함의 의미가 남북교류와 협력에 보다 많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 전반적 현황,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협력, 대학생 중심의 교류, 기타 교류·협력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전반적 현황

지금까지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교류, 이산가족상봉 및 관광분야 등이며 이외에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교통통신, 과학환경, 경수로, 대북지원 등의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 6월 12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 이루어진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반적인 사례를 북한주민 접촉의 경우와 북한방문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 접촉

남북 주민간 실질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도부터이다. 1990년에 62건 377명이던 접촉 건수는 94년에 237건 69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99년도에는 4,283건 10,88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불허 건수도 96년도를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을 볼 때 남북간 접촉 사례도 남북간 상황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IV-1> 연도별 북한주민접촉²³⁾

(단위: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불 허	철회	처리중	성 사
1989	36(70)	21(22)	15(48)	-	-	-
1990	235(687)	206(652)	29(35)	-	-	62(377)
1991	753(2195)	685(2047)	41(70)	-	-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72(230)	-	-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21(36)	-	-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8(63)	-	-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4(108)	-	-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53(406)	-	-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17(38)	2(4)	-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13(26)	10(31)	-	856(1890)
1999	7572(9120)	7507(8715)	15(52)	4(318)	118(148)	836(1617)
계	19662 (34366)	19178 (32746)	348 (1112)	16 (353)	118 (148)	4283 (10886)

한편, 이 기간 동안 접촉분야별 총 건수를 살펴보면, 이산가족의 경우가 1,852건, 경제교류가 1,712건, 교육학술 153, 문화예술 93, 체육 58, 종교 114, 언론출판 54, 관광 실무분야 47, 교통통신 33, 과학환경 44, 대북지원 37, 기타 86건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산가족과 경제교류를 제외한 다른 경우는 아직까지도 다소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남북분단과 통일정책의 변천.

<표 IV-2> 분야별 북한주민접촉²⁴⁾

(단위: 건/명)

분 야	신 청	승 인	불 허	철회	처리중	성 사
이산가족	13918 (14450)	13833 (14365)	1 (1)	-	84 (84)	1852 (2133)
경 제	3356 (8389)	3246 (8109)	76 (210)	6 (15)	27 (54)	1712 (2874)
교육학술	479 (3623)	440 (3004)	35 (311)	3 (306)	1 (2)	153 (1974)
문화예술	328 (1464)	282 (1373)	45 (90)	-	1 (1)	93 (737)
체 육	189 (905)	179 (865)	6 (23)	3 (11)	1 (6)	58 (518)
종 교	329 (1596)	276 (1450)	53 (141)	- (5)	-	114 (875)
언론출판	265 (692)	223 (592)	38 (90)	1 (7)	3 (3)	54 (147)
관광실무	166 (524)	158 (496)	8 (28)	-	-	47 (145)
교통통신	60 (198)	60 (198)	-	-	-	33 (119)
과학환경	198 (791)	187 (773)	9 (13)	1 (4)	1 (1)	44 (284)
대북지원	39 (169)	39 (166)	- (2)	- (1)	-	37 (128)
기 타	335 (1565)	255 (1355)	77 (203)	2 (4)	1 (3)	86 (952)
계	19662 (34366)	19178 (32746)	348 (1112)	16 (353)	118 (148)	4283 (10886)

24) 위의 자료, WWW.unikorea.go.kr.

(2) 북한방문

실질적 북한방문의 경우 또한 93, 9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총 748건에 5,203명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금강산 관광객은 98, 99년 두 해 동안 총 250회에 걸쳐 146,131명이 다녀오는 등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급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연도별 북한 방문²⁵⁾

(단위: 건/명)

연도	신청	승인	불허	철회	처리중	성사	
1989	1(1)	1(1)	-	-	-	1(1)	
1990	7(199)	6(187)	1(12)	-	-	3(183)	
1991	12(244)	11(243)	-	-	-	10(237)	
1992	17(303)	8(257)	10(47)	-	-	8(257)	
1993	6(21)	5(19)	1(2)	-	-	4(18)	
1994	12(78)	7(54)	-	-	-	1(12)	
1995	66(567)	59(546)	10(32)	-	-	53(539)	
1996	50(249)	35(170)	3(19)	-	-	28(146)	
1997	156 (1194)	149 (1172)	3(9)	14(73)	-	136(1015)	
1998	402 (3980)	387 (3716)	2(12)	7(118)	-	341(3317)	
1999	812 (5862)	783 (5617)	1(3)	27(328)	12(63)	748(5203)	
소계	1541 (12698)	1451 (11982)	31(136)	48(519)	12(63)	1332 (10928)	
금강산 관광객	98	29 (14228)	26 (12812)	- (9)	-	-	23(10554)
	99	234 (149753)	231 (149336)	- (88)	6(1736)	-	227 (135577)
	계	263 (163981)	257 (162148)	- (97)	6(1736)	-	250 (146131)
총계	1804 (176679)	1708 (174130)	31 (233)	54 (2255)	12 (63)	1582 (157059)	

25) 위의 자료, WWW.unikorea.go.kr.

그러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접촉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이산가족의 사례는 극히 저조하며 경제교류와 관광 실무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표 IV-4> 분야별 북한 방문 경향²⁶⁾

(단위: 건/명)

분 야	신 청	승 인	불 허	철회	처리중	성 사
이산가족	12(16)	11(15)	1(1)	-	-	7(7)
경 제	318(1153)	278(1009)	11(61)	24(65)	5(17)	233(789)
교육학술	16(96)	14(93)	2(2)	-(1)	-	9(41)
문화예술	24(214)	20(187)	4(24)	-(3)	-	12(135)
체 육	22(390)	21(374)	-	1(16)	-	19(348)
종 교	46(178)	37(137)	8(30)	-(7)	1(4)	24(86)
언론출판	22(86)	17(68)	2(4)	3(14)	-	15(63)
관광실무	644(6387)	629(6043)	-	11(322)	4(22)	602(5517)
교통통신	10(34)	8(29)	-	2(5)	-	7(25)
과학환경	22(85)	20(73)	-	2(12)	-	16(57)
경 수 로	288(2500)	285(2421)	-	2(62)	1(17)	284(2379)
대북지원	103(1098)	99(1085)	1(1)	2(9)	1(3)	93(1033)
기 타	14(461)	12(448)	2(13)	-	-	11(448)
소 계	1541 (12698)	1451 (11982)	31 (136)	48 (519)	12 (63)	1332 (10928)
금강산관 광객	263 (163981)	257 (162148)	- (97)	6 (1736)	-	250 (146131)
계	1804 (176679)	1708 (174130)	31 (233)	54 (2255)	12 (63)	1582 (157059)

26) 위의 자료, WWW.unikorea.go.kr.

나. 민간단체 중심의 합법적 교류·협력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행되어오거나 혹은 실행계획 중에 있는 교류·협력 분야는 주로 사회문화 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의 경우, 그리고 대학생들의 교류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사회문화 협력사업

1991년부터 시작된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1999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17건이 협력사업자 승인과 관계되며 이중 협력 승인을 받은 단체 수는 13개이다.

특히, 17건의 교류 중 15건이 1997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남북간 현실적 이해관계가 증대되면서 교류와 협력의 폭과 양이 증대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청소년교류는 91년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91.5.27~6.4, 포르투갈)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뿐으로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이루어진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이나 1999년 8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던 “금강산 수련활동”, 2000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 등에 서와 같이 점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가 새롭게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인도적 지원

1999년 11월 한달 동안 이루어진 민간 단체에 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의 대북지원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 99년 11월 중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²⁷⁾

지원단체	지원창구	품목 및 수량	금 액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 시대본부	한 적	밀가루 333톤, 옥수수 1000톤	2억 5200만원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독자창구	라면 15000개, 축구공 500개, 밀가루 51톤	4669만원
천주교 민족화해 위원회	독자창구	옥수수 3000톤	5억 4000만원
한국JTS	독자창구	설탕 5톤, 분유 5톤, 공책 20000권, 연필 20000개	3582만원
강원대 북한농업 지원후원회	한 적	씨감자 30톤	3900만원 상당
국제 라이온스 협회 한국연합회	한 적	어린이용 담요 6000장	1억 965만원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	독자창구	신발 4000켤레, 의류 4000점	1억 502만원
총 계	7개 단체 11억 2818만원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보다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역시 주로 식량문제와 관계된 것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학생 중심의 교류

1990년대 들어 청소년분야의 교류는 실제 성사된 사례는 적었지만, 타 분야와 동일하게 연도별로 남북간 대학생교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타파를 핵심 이슈로 주장하

27) 위의 자료, WWW.unikorea.go.kr.

는 한충련 등의 불법적인 통신 및 서신을 이용한 교류가 많았던 80년대에 비하면, 90년대의 대북 교류는 어느 정도 제도권내로 진입하는 과도기 현상을 보였다.²⁸⁾

1991년 통일원에 접수된 청소년분야의 대북교류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V-6> 1991년 대학생 대북교류신청 현황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성 사	성사율
건 수	11	6	5	0	0%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2, p. 32.

신청과 승인, 불허 건수에 비해 성사된 건수는 전무한 실정으로 당시의 쉽지 않았던 남북관계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에 따라 남북왕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의 핵문제, 간첩단 사건 등의 장애 요인이 작용하여 91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내용별로는 당국간 회담차원의 왕래 이외에 경제분야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한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방문 및 남포공단투자실무조사단 파견 등 경험 목적의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핵문제, 간첩단사건 등 남북 현안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경제계 인사의 교류도 중단되었다.²⁹⁾

이러한 남북한의 전반적인 경색 정국과 맞물려 청소년분야의 교류 및 접촉 신청도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소하였다.

28) 길은배, 『NGO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34쪽.

29) 길은배, 위의 책, 37쪽.

<표 IV-7> 1992년 대학생 교류신청 현황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성 사	성사율
건수(명)	8(12)	6(6)	2(6)	0	0%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2, p. 29 참조.

93년도 대학생교류의 특징은 ‘연·고전에 김일성대학생 초청’과 같은 총학생회 차원의 신청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동서 이념갈등의 종식 및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학생교류가 점차 제도권 내로 진입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93년도에 추진된 대학생 중심의 대북교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8> 1993년 대학생 교류신청 현황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성 사	성사율
건(명)	10(28)	5(14)	5(14)	1(2)	20%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4, p. 36.

대학생의 대북 교류·접촉 총신청 건수는 10건으로 92년도의 8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성사 건은 승인된 5건중 1건으로 92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사 사례는 제10회 아시아육상경기 참가 북한선수 안내 및 통역을 위하여 장선덕(필리핀 마닐라 대학) 등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93년도의 남북인적 교류는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정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제3국에서의 경제인들의 접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은 우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방북초청장을 계속 발급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남북교류가 추진되었다.

94년도의 남북관계는 경색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추진 합의(94. 6. 28), 김일성 사망(94. 7. 8), 미·북 제네바 합의(94. 10. 21),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94. 11. 8) 등 일련의 남북한 상황 전개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³⁰⁾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도 한층련을 비롯한 불법·이적단체들의 FAX를 통한 교류가 주를 이루었지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교류 승인을 받고 성사된 청소년분야의 교류 사례도 있다. 양원채(고려대 독문과 3) 등 전국 대학원리연구회 학생대표 26명은 20여 개 국에서 17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제2회 세계학생지도자 과학평화회의」(6. 21~26, 북경)에 참석하여 김철순(김일성종합대 철학 4)을 비롯한 북한 대학생 19명과 교류하였다.

이와 같이 94년에는 학술, 문화·예술, 종교, 언론·출판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부진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교류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다만 교류 신청상의 눈에 띄는 추세로는 언론분야에서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의 향방과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심고조로 방북취재를 위한 신청이 93년도에 비하여 약 3배정도 증가하였다는 점과, 종교분야에서 천도교, 대종교 등의 대북접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95년도의 청소년분야 교류의 주요 성사 건은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주최로 95년 2월 5일부터 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대학생 평화세미나」를 들 수 있다. 세미나에는 남한 대학생 177명, 북한측 대학생 53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³¹⁾. 특히 남북 대학생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1분과에 함께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 청소년단체 대표들의 비공식적인 접촉도 이루어졌다.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30) 길은배, 위의 책, 39~40쪽.

31) 『세계일보』, 1995. 2. 7.

『95북경 동아시아 청소년 지도자 회의』(10. 8~11)에서 우리측 대표단 김집 단장(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과 북한측 대표단 백석 단장(사로청 국제부장)은 비공식 접촉을 갖고 남북한간 청소년 교류 및 협력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은 없는 상태이다.

이밖에 청소년분야의 남북한 청소년교류 및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한 제의는 여러 번 있었으나 성사된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오종원(원광대 원불교학과) 등 6명은 남북한 청소년 공동 국토순례를 제의하였으며, 권태환(청년포럼 대표)은 남북청년포럼 공동개최 협의를 위한 방북을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96년에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제3국에서 남북대학생들이 직접 교류한 사례가 있었다. 96년 4월 18일부터 미국 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심포지엄』에서 남북대학생의 공식적인 첫 교류가 있었다. 이 교류는 버클리대가 『한민족의 동질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4월 18일부터 20까지 개최한 심포지엄에 남북 학생 대표들을 초청, 양측이 동의함으로써 성사됐다. 남한에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여성오(23세)와 총학생회 국제교류담당 김재성(26세) 등이 참가하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대 학생대표 권호웅 등이 참가하였다³²⁾. 특히 버클리대에 재학중인 한국계 학생들은 버클리대학과 김일성대학간의 학술교류를 추진중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6년 들어 남북한 대학교육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 대학 총장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96년까지 통일원이 승인한 우리대학 및 학술단체들의 대북교류계획 35건 가운데 북한측이 수용한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제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청소년관련 단체의 남북청소년교류 제의도 있었으나 성사되

32) 『중앙일보』, 1996. 4. 21 ; 『한국일보』, 1996. 4. 19.

지는 못했다. 한국청소년육성회(회장: 이기남) 등 2명은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를 전개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의 북한방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97년에는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남북한의 인적교류는 전반적으로 경색되었지만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됨에 따라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접촉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³³⁾

97년도에 성사된 청소년분야의 공식적인 교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97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에 김봉태(세계평화청년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대학원리연구회 동아리소속 학생 80여명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하였고, 북한측 대학생도 참가하였다. 세계평화청년연합회와 대학원리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 30개국에서 3백 30여명이 참석해 「21세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4박 5일 동안 남북한 대학생들은 통일과 관련한 학술회의와 체육·문화행사 등을 가졌고, 특히 「고향의 봄」, 「반달」, 「아리랑」 등의 노래 및 제기차기, 윷놀이, 닭싸움 등 민속놀이를 함께 하였다.

또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남북한 대학생들이 제도적 절차를 통한 교류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97년 7월 1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북한 김일성종합대와 가칭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회복을 위한 서울대·김일성대 상호교류’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총학생회 이재성씨는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서울대와 김일성대의 개교기념일에 맞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양교 상호교류 기간으로 설정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학생과 교수들이 양교를 상호 방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³⁴⁾. 그러나 정부측의 공식적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와는 달리 이 시기에 있어 북한은 청소년분야의 교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남한 대학들에 대해 자매결연 및 공동학술토론회

33) 길은배, 앞의 책, 47~50쪽.

34) 『문화일보』, 1997. 7. 16.

를 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등 대학간 접촉과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다수의 제안을 하였다.

동년 11월 12일에는 원산경제대학 학생위원회가 한림대학교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의하였으며, 이후 12월 1일까지 20여일 동안 무려 7개 대학이 남한 대학들에 토론회, 자매결연, 공동학술회의, 공동축구대회 개최 등을 제의했다. 원산농업대학은 강원대학교에 “우리는 한핏줄을 나누는 동족임을 확인하고 동시대 대학생으로서 이상과 포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공동축구대회를 제안했다. 또한 장철구 평양사업대학 여학생회는 11월 21일 경희대학교 여학생들에게 통일토론회를 열자고 제의했으며, 11월 23일에는 원산수산대학이 강릉대학교에 자매결연을, 11월 24일에는 원산의과대학이 관동대학교에 ‘관동팔경을 공동답사하자’고 각각 제의했다³⁵⁾.

한 편, 이 외에도 해외에서는 아마바둑을 통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97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북해도) 삿포로시 선플라자에서 벌어진 제19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 남한 대표와 북한대표인 문영삼(18세) 7단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방북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방북자의 직업도 다양하여 기업인, 종교인, 언론인은 물론 작가, 시민운동 관계자와 예술인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교류의 확산에 힘입어 남북대학 및 남북 대학생들 간의 교류도 활기를 띠었다³⁶⁾. 98년 5월 성균관대학은 개성에 있는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분단 50년이래 최초로 남북대학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³⁷⁾. 남북대학간 자매결연을 통한 학술교류는 민족교육의 동질성을 상호보완하고 남북대학간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려대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아,

35) 『세계일보』, 1997. 12. 4.

36) 길은배, 앞의 책, 51~54쪽.

37) 『서울신문』, 1998. 9. 19 ; 『경향신문』, 1998. 5. 9.

12월 6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북한대학 스포츠 관계자와 만나 ‘남북한 대학 스포츠교류’를 논의하였다. 최근에 남북한 대학간의 스포츠 교류를 제의한 것은 고려대가 처음으로, 여기에는 고려대 체육위원회의 김성복 위원장, 박한 부위원장, 권오식 과장 등 3명이 참석하였다. 김성복 위원장은 “야구나 럭비 등 북한대학에 없는 종목을 제외하고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태권도, 스키, 쇼트트랙 등 고려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동종목이 교류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대는 한국대학 중 처음으로 1942년 7월 20일에 고려대 산악회 전신인 보성전문 등반팀 10명이 백두산에 오른 것을 기념해 ‘백두산·한라산 남북대학생 합동등반’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한국비디오선교회는 8월중 중국조선족인민정부 문화체육부의 주선으로 북한어린이들을 연변으로 초청, 한·중·북한 어린이 친선축구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 친선경기에 북한측에서는 나진·선봉지역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중국은 연길시의 초등학교 대표단이 참여할 계획이었다³⁸⁾.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사회문화분야 및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제3국을 통한 남북한 대학생들의 교류도 일부 이루어졌는데, 99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남북한 대학생이 참여한 『제5차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가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평화청년연합』과 『전국대학원리연구회』의 주최로 열렸다. 여기에도 남한측 대학생 180여명과 북한측 대학생 70여명 등 모두 250여명의 남북 대학생이 참여해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분과토의를 벌였다³⁹⁾.

다. 민간단체 중심의 비합법적 교류·협력

9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해오고 있는 남북교류의 전반적 경향성과 비

38) 『국민일보』, 1998. 3. 26.

39) 『한겨레신문』, 1999. 7. 24.

교해볼 때,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 문화의 중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와 협력은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길은배의 다음과 같은 해석에서 주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주로 체육, 문화·예술, 학술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청소년분야의 협력사업은 주로 국내외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분야의 인적교류는 대부분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안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 연령층은 리틀엔젤스 예술공연단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대학생 중심의 인적교류는 대부분 북경, 미국 등과 같은 제3국을 통한 국제적인 행사의 참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대학생 중심의 인적교류 중 많은 부분은 한총련 등과 같은 단체들에 의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의 불법적인 교류는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주로 통신(FAX), 서신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⁴⁰⁾

결국, 90년대 들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증가하였지만, 위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여전히 비제도권의 불법적인 교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90년 이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례들 중 비합법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특히 이러한 사례를 대표하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비합법적 교류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91년도에는 전대협과 해외범민련을 매개로 한 2원적인 대북 접촉 시도가 새로운 대북접촉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전대협을 주축으로 한 소위 자주교류 투쟁의 일환으로서 해외 범민련을 매개로 하여 FAX를

40) 길은배, 앞의 책, 33~34쪽.

통한 불법적 대북접촉도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1991년 FAX를 통한 불법적인 대북접촉 사례

소 속	내 용	일 자
서울시립대 수학과	김일성대 수학부	91. 8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	91. 8
고려대 농생물학과	계용상대학	91. 10 대자보 확인
세종대 국어국문학과	송도대학 조선어문학과	91. 9 대자보 확인
전대협	조선학생위원회	91. 10 한양대 대자보 확인
성신여대 화학과	조선학생위원회	91. 9 대자보 확인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2, p. 34 참조.

9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남북교류가 저조하였는데, 대학생들의 경우 특히 범 절차를 무시한 일부 재야운동권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대북 접촉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93년도에도 대학생들은 여전히 정부창구를 이용한 합법적인 대북교류 외에 소위 「자주교류투쟁」의 일환으로 북한 학생들과 불법적인 통신(FAX)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대협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총련」은 93년 5월 28일 불법적인 국제전화를 통하여 「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남북의 교류·협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등은 91년부터 94년까지 전국 57개 대학에서 1백 56차례에 걸쳐 북한과 불법통신교류⁴¹⁾를 해 온 것으

41) 통신교류 내역은 FAX 교류가 1백 16건, 전화 2건, 서신 38건 등으로(경향신문, 1994. 7. 2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학생 연대투쟁으로 통일의 마지막 장애인 미군을 축출하고 핵무기를 철폐하자(92. 3. 27),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제국주의 기치를 드높이자(92. 1. 8),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94. 7. 5), △전남 법대와 김일성종합대 법학부간의 자매결연 제의(93. 6. 9) 등의 내용이다. 또한 남북학생들의 FAX교류를 통해 결의한 투쟁의 방향은 주로 △북한 핵사찰 반대, △팁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무조건 중지, △쌀시장 개방 금지 등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1994. 7. 23.

로 나타났다. 또한 대경총련(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94년 8월 5-6일간 주최하는 「통일축전」에 함경남도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을 초청하기 위하여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이 서신에는 “김일성 주석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로 시작, “대경총련-함경남도 학생위원회의 통일축전을 제안합니다”로 적혀져 있는 등 불법적 남북교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⁴²⁾

1995년 4월 5일 전남대 총학생회는 FAX를 통하여 북한 김책공대와 일본 조선대 대표를 가을 용봉대동풍이에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특히 3월 13일 북한 평양경공대학 학생위원회는 91년 4월 분신한 전남대생 박승희에게 식료공학부 식료가공학과 졸업증을 수여한 내용을 전남대와 FAX를 통하여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1995년 8월 14일 북한에서 열린 범청학련 「제1차 중앙위원회」 및 「민족공동행사」에 범청학련 남쪽 대표로 정민주(22, 인천대 건축학과 3년 제적)와 이혜정(20, 카톨릭대 성심교정 회계학과 2) 등 여대생 2명이 베를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사무국장 최정남(26, 서울대 원예4 휴학)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95년 9월 28일에는 남북학생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 신고서를 낸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현우진(23, 동양철학 3) 등 학생회 간부 6명에 대해 11월 3일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경우는 이들이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내려진 조치였다.⁴³⁾

96년은 한총련의 활동에 의한 비합법적 남북교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한 해였다. 우선, 96년 4월 27일 「충청지역 대학총학생연합」과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북한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북·미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충청지역 총학련(의장: 설증호, 단국대 천안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북한의 자강·양강도 학생위원회와 4월 23일부터 FAX를 통해 교신한 뒤 작성한 결의문에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한·미 군사합동 훈련

42) 길은배, 앞의 책, 39~41쪽.

43) 『중앙일보』, 1995, 9. 29.

중지, 전쟁 고조하는 김영삼정권 타도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총련은 96년 8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리는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북측대표단의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유세홍(25, 조선대 치의학 4년), 도종화(21, 연세대 기계공 휴학) 등 2명을 남측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96년 8월 17일 공개한 「한총련의 이적·폭력실상」 자료에 따르면 한총련은 출범 이후 24차례에 걸쳐 FAX를 이용하여 북한과 불법 통신교류를 하면서 투쟁방향을 협의하고 1백 75종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1996. 8. 18). 북한과 불법 통신교류를 실시한 예를 보면 한총련은 8월 2일 북한 함북학생위원회와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공동결의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도에도 불법적인 남북한 대학생들의 교류는 줄어들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97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조용주(24, 서강대 신문방송 3)가 한총련 대표로 파견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때 북쪽에서도 범청학련 북측본부 부의장겸 사무국장 김영도, 해외본부 공동의장 박구호 등이 참석하여 남북한 연대강화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98년과 99년은 국내외의 NGO를 통한 대북 교류·협력 제의가 많아졌고, 주로 인도적 지원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회문화분야의 국내 NGO의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성사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의 간접적·불법적인 형태를 띠던 교류가 점차 직접적·공식적으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⁴⁴⁾

그러나 물론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비공식적·불법적 접촉

44) 길은배, 앞의 책, 51쪽.

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범청학련 지도부는 6월 10일 「제9차 범청학련 통일축전 실무회담」 추진을 위하여 서울, 평양, 도쿄 사이에 FAX를 통한 문건 교환방식으로 회의에 참가하였다. 범청학련 등은 당초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제의를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FAX를 통한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다.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평가

남북관계의 변화는 90년도를 전후하여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등에 있어서는 그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변동의 중심에 서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계층인 청소년을 고려해볼 때 그 교류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많은 활동이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순수 청소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활동은 빈약한 실정이다.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변동 과정을 상정해 본다면 그 속에서 청소년 계층이 차지할 비중은 사회의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남북교류에 있어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도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서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⁴⁵⁾

첫째, 청소년분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걸어온 경제 위주의 정책구성 경향과도 관계되는 측면으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조속히 긍정적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는 공리주의적 조급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5) 길은배, 앞의 책, 60~61쪽 참조.

둘째, 국내의 청소년관련 NGO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남북교류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 이념갈등 시대의 사회성이 반영된 것으로 NGO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낮은 관심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이는 두 번째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로서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역할과 위상을 제외시켜 온 그동안의 정책적 편협함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북한 내 민간단체가 부재이다. 공산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볼 때 이 문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남북한 교류 노력은 더욱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한총련 등과 같은 일부 불법·이적단체들의 불법적·비공식적 접촉이 대 국민 인식을 악화시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인식 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념갈등의 폭이 지금보다 더 깊었던 1980년대와 1990년 대 초·중반기에 있어 대학생 중심의 불법적 남북 교류활동은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이들 단체의 역할은 그만큼 어떤 방향으로든지 작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남북한이 제의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가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띤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는, 소극적·미시적인 제안들로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 역시 이념갈등에 기인하고 있었지만 갈등의 폭이 완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 경향성에는 변화가 적었다는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주체인 정부와 학생, 북한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가 크다. 즉, 정부의 보수적 태도와 대학생들

의 급진적 태도는 남북교류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갈등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한 동안 이 문제가 남북 청소년교류의 시행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 요인은 앞서 제기된 몇몇 다른 요인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여덟째, 제3국을 통한 제한적·간헐적인 접촉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을 크게 위축하고 있다. 이는 양 체제에 부담이 없는 국제사회 활동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제3국에서의 청소년 접촉은 현재까지 남북한 청소년들이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고착화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전체가 아닌 대학생 중심의 제한된 교류는 청소년분야의 교류 범위를 좁히고 있다.

3장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상에서 제시된 제반 문제점들은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될 몇 가지 조사결과들, 특히 통일 전반에 대한 의견들 및 통일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북청소년교류가 지니게 될 통일을 위한 역할에 대한 의견들 간의 비교분석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1(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 사람들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십니까?), 문3(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보면 비록 대화의 빈도는 적지만(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51.1%) 통일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사고는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의 빈도가 전체 응답자 중 75.9%가 된다는 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5.8%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은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사고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표 IV-10> 청소년들의 통일관

구 분	빈 도	비 율	리코딩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299	27.3	832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533	48.6	(75.9)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173	15.8	173(15.8)
통일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	20	1.8	92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72	6.6	(8.4)

‘현 상태가 좋다’ 또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는 각각 15.8%와 8.4%로 대부분이 통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등 청소년들의 통일관 자체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1> 청소년들의 통일가능성에 대한 의식

구 분	빈도	비율
예	929	85.8
아니오	154	14.2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14.2%에 그치고 있는 등 많은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리코딩
전혀 하지 않는다	107	9.8	560
거의 하지 않는다	453	41.3	(51.1)
그저 그렇다	449	40.9	449(40.9)
자주 한다	83	7.6	98
매우 자주 한다	5	0.5	(8.1)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 정도는 51.1%가 하지 않는 경우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에서 보여주었던 긍정적 태도와는 달리 통일이라는 주제를 실질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남북교류의 정책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 역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문4(현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경우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없다’와 ‘기타’를 제외한 전체를 보았을 때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23.5%,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47.1%로 결국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이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청소년들이 제외됨으로 인해 나타났던 부정적인 측면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IV-13>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불만족스러운 통일논의

구 분	빈도	비율	리코딩 1	리코딩 2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180	20.0	180 (23.5)	541 (70.6)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361	40.0	361 (47.1)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	171	19.0	171 (22.3)	171 (22.3)
남북한을 적대·대립관계로만 생각한다	54	6.0	54 (7.1)	54 (7.1)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	105	11.6	제외	제외
기타	31	3.4	제외	제외

또한, 문5(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문11(북한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다음의 정책들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을 보면 다수의 청소년들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현재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북교류에 있어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기타 다른 분야에서 다양하게 교류가 확대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졌었던 정치적 제의가 지금까지의 남북교류 및 남북 청소년 교류에 있어 방해 요인이었다고 하는 앞서의 논점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표 IV-14> 청소년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통일과제

구 분	빈도	비율	교류 항목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379	34.6	531 (48.5)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	261	23.8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270	24.7	
평화협정 체결	77	7.0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94	8.6	
강대국의 협조요청	5	0.5	
기타	9	0.8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항목을 교류 가능성의 측면에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 항목과 연계시켜 한 항목으로 묶을 경우 이 부분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8.5%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곧 청소년들이 교류·협력 부분을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시키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IV-15>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대북정책

구분	빈도	비율	교류항목
식량이나 비료를 비롯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204	19.9	873 (85.2)
경제적 협력 및 지원	223	21.8	
사회문화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446	43.5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붕괴 유도	72	7.0	152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국방경계태세 확립	80	7.8	(14.8)

시급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도 85.2%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교류 및 협력과 관계된 부분에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등 이 분야의 중요성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해 강경한 대북정책의 경우는 14.8%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문14, 문15, 문25, 문26, 문29 등을 보면 청소년들은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통일과 이질성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14에서는 남북한 교류가 통일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25에서도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9.3%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문29에서도 남북한 간의 이질성 해소에 있어 청소년교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청소년들이 66.6%를 차지하는 등 앞서 살펴본 남북교류에 대한 긍정적 역할에 있어 이들의 긍정적 태도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다음의 상관관계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남북교류정책과 청소년이 배제된 교류정책의 틀로부터 벗

어나 언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을 위한 적극적 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체적인 청소년 교류모델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겠다.

〈표 IV-16〉 청소년들의 통일관계의식과 교류에 대한
문항간 상관관계

구 분	통일 의견	통일 대화	통일 가능	교류통 일역할	교류의 방향	청교류 영향	교류참 여의사	이질해 소가능	
Pearson 상관	통일의견	1.000	-.246 (**)	.357 (**)	-.314 (**)	.318 (**)	-.372 (**)	.276 (**)	-.297 (**)
	통일대화	-.246 (**)	1.000	-.143 (**)	.150 (**)	-.140 (**)	.171 (**)	-.203 (**)	.185 (**)
	통일가능?	.357 (**)	-.143 (**)	1.000	-.249 (**)	.262 (**)	-.240 (**)	.152 (**)	-.220 (**)
	교류통일역 할	-.314 (**)	.150 (**)	-.249 (**)	1.000	-.362 (**)	.476 (**)	-.205 (**)	.325 (**)
	교류의 방향	.318 (**)	-.140 (**)	.262 (**)	-.362 (**)	1.000	-.347 (**)	.198 (**)	-.244 (**)
	청교류 영향	-.372 (**)	.171 (**)	-.240 (**)	.476 (**)	-.347 (**)	1.000	-.299 (**)	.377 (**)
	교류참여의 사	.276 (**)	-.203 (**)	.152 (**)	-.205 (**)	.198 (**)	-.299 (**)	1.000	-.223 (**)
	이질해소가 능	-.297 (**)	.185 (**)	-.220 (**)	.325 (**)	-.244 (**)	.377 (**)	-.223 (**)	1.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협력은 오늘날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 속에서 볼 때 아직도 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전환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통일은 그동안 남과 북이 상호 단절을 이루어 왔던 역사, 문화,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중심 축인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혹은 앞으로 담당해나갈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이며 이해관계에 얽힌 관료적이고 공리적 태도는 한반도의 역사적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통일이라고 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직 사회적 때를 묻히지 않고 있는 계층으로부터 통일의 순수한 의미는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의식은 남북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으로 진행되어온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집진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영역들로 확산되어나가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앞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 주도나 성인주도의 교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다양성과 순수성을 포함할 때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통일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남북교류는 단기성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이 절대 단기적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류·협력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민간단체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중요성을 고려해본다면, 또한 NGO라고 하는 비정치적 의도에 의한 활동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이 점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수행해 나가야 할 남북교류 또는 통일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교류와 협력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류의 영역과 활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 번 시행된 교류·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는 상호 관계 영역을 사회의 각 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청소년과 NGO, 순수한 의식과 태도의 견지는 통일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앞으로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 보다 순수한 의도가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성일 수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과 NGO는 남북교류의 정점일 수 있는 것이다.

3.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 분석⁴⁶⁾

가. 동·서독 교류

(1) 동·서독 교류의 배경

동·서독 교류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목적과 필요성, 과정, 실천방안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 분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대내외적 정치적 상황, 그리고 동·서독 교류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토대구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先)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동·서독 교류정책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교육적 배경에 대한 고찰은 빼어놓을 수 없다.

(가) 역사적 배경

동·서독 교류의 기원을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분단된 조국을 언젠가는 통일하여야 한다는 그들의 자주적인 의지와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인의 자주적 의지와 노력이 시도되고 그 결과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인내하여야 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 8월 무조건 항복을 한 후 독일의

46) 이 부분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이민희 박사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수록하였음.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전후 독일의 점령 지역이 확정되고, 베를린이 연합국들에 의하여 점령 구획을 4분할하게 되며, 전후 계속되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해 1945년 11월 30일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교통소통을 위한 항공 구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독일의 분단은 마침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계속적인 냉전은 이후에도 독일의 분단을 갈수록 심화시켰는데, 1948년 소련에 의한 베를린 봉쇄와 이에 맞선 미국의 11개월 동안의 항공수송 조치로 동서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고, 1955년 서독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그리고 동독이 같은 해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에 회원국이 되면서 결국, 1961년 8월 31일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독일의 분단이 세계적으로 선포되는 실질적인 독일의 분단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소의 냉전체제가 반드시 독일에게 악영향만을 준 것만은 아니었다. 전후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은 독일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독일경제의 중심을 공업에서 농업으로 전환시키려 했으나 서독을 발전시켜 소련의 사회주의 침투를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 독일의 새로운 동맹정책은 ‘마샬플랜’에 의한 경제원조로 서독의 새로운 공업화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후에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던 것이다.⁴⁷⁾

(나) 정치적 배경

독일이 분단된 이후 미·소의 냉전체제로 말미암아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로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동·서독 교류는 언젠가는 역사적 필연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러한 역사를 앞당겨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인 자신들

47) 박영호, “독일의 분단. 극복의지, 동·서독 교류의 오늘”, 『마당』, 1984-12-040, 1984, 147쪽 참조.

의 정치적 결단이었다.⁴⁸⁾ 이러한 정치적 결단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브란트(Willy Brandt)의 신동방정책(新東方政策; Die neue Ostpolitik)⁴⁹⁾이었다.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은 그 이전 서독의 보수적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아데나워(K. Adenauer) 수상의 동방정책과는 매우 다른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독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이었다. 즉, 기민당 집권 20년간은 미·소의 냉전체제의 구도 아래 미국을 의식한 강경한 대(對) 공산권 정책으로 동방정책이나 장차 독일의 통일을 위한 독일정책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일의 분단을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브란트 수상이 이끌었던 서독의 사회민주당(SPD)은 1863년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기초로 창당된 독일의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적으로 접근시키려 했던 유럽 최고의 가장 전통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당 중 하나로서, 이미 1917년 러시아혁명과 동유럽 국가 및 동독에 이념적 뿌리를 제공했기에 그 기초적 이념에 있어서부터 신동방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브란트 수상은 1969년 그의 취임연설에서 독일이 ‘일가(一家)’임을 강조하면서 현존하는 독일의 분단(auseinander)을 지양(止揚)하고, 병존(並存; nebeneinander)을 거쳐, 상호공존(miteinander)하며,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데(füreinander) 까지 발전할 것을 주창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으로 사민당 정부는 1970년에 소련 및 폴란드와 상호 무력포기와 현존의 국경을 인정하는 동방정책을 체결하였는데 특히, 소련과의 ‘평화와 긴장완화’, ‘유엔의 평화정신 준수’, ‘유럽의 현존하는 국경 인정’에 관한 조약은 그 후의 동·서독 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동구권의 대변혁을 가능케 한 역사적 공헌으로 평가

48)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우리의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통일에로의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는데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마침내 2000년 6월 13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함으로서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역시 역사를 앞당기게 한 것이다.

49) 신용철,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의 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제2권 1호, 1990, 119~121쪽 참조.

될 수 있는 중요한 업적이다.

이러한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동·서독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 1972년 9월 4대국 협정으로 베를린의 통행이 보장되고, 1973년 ‘독일연방공화국(BRD)과 독일민주공화국(DDR)간의 기본적 관계에 대한 조약’이 서독 야당의 강력한 비방 속에서 비준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등권의 기초 위에 선량한 이웃관계, 유엔헌장의 준수로 상호 주권독립과 영토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상대방 대표권 없음, 상호 자기편 통치권만 있음,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 상주(常主) 대표부 설치, 지금까지의 타국과 맺은 조약은 이 조약과 관계가 없음의 여덟 개가 그 기본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 교육적 배경

교육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간 개체의 완성을 위한 도야(陶冶; Bildung)의 과정이지만 국가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이의 실천을 위하여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교육은 국가의 대내외적 치리(治理)를 위한 국민들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결과가 그들의 정치행위로 나타나는 중요한 교육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이나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이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을 상황에서는 정치교육이 가지는 의미와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서로 다른 통치체제 아래의 서독과 동독의 정치교육이 동·서독 교류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분단 후 서독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청소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위하여「정치교육을 위한 연방중앙기구(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⁵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치교육을 통한 장차 하나의 독일을 위한 서독 정부의 노력은

독일의 정치적 노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앞에서 언급한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 이후 서독의 정치교육 방향과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69년 브란트는 그의 연방정부 의회 연설에서 독일통일을 위하여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독은 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과 모든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에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훈련을 쌓도록 한다”⁵¹⁾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흔히 분단국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이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 체제를 비호하려는 차원을 넘어서는 교육으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의 이념이 교육으로 실천되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동방정책에서 브란트 수상이 보여준 분단 독일의 정책을 통일정책이 아니라 독일정책으로, 다시 말해서 통일 문제는 단지 독일 문제의 일환으로서 상호 인식하게 함으로서 통일 문제는 독일의 내적 문제로 독일인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의 영향으로 1972년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전에는 서독의 많은 정치교육 관련 교과서가 통일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이를 위한 조심스러운 준비단계로서 철저한 「시민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²⁾

이렇게 볼 때에 비록 동독의 정치교육은 서독에 비하여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한 교화적 교육이었지만 양측이 상호

50) 이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중앙기구(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는 원래 전후 히틀러 추종자들이 많이 잔재하여 있는 것을 의식하여 생겨났지만 후에는 동·서독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독일 통일 전후에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박순영, “서독의 정치교육”, 『공군』, 1983, 2. 183, 19쪽 참조.

5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Vol. IV. Bonn, 1970, 9~40쪽,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서울: 고려원, 1988), 90쪽 에서 재인용.

52) 다시 말하자면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 민족자결권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한 준비과정으로서 서독의 정치교육을 위한 교과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①동독의 성립, 특징, 승인 ②동독의 정부기구 ③동독의 선거, 정당, 선전 ④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동독의 생활수준 ⑤동독 정권에 대한 동독 국민들의 저항 ⑥SED(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청소년·문화정책과 미래관, 정용길, 위의 책, 90~91쪽 및 104쪽 참조.

체제가 서로 다른 것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깊이 이해시키고 이러한 정치교육적 기초 위에서 바로 동·서독 교류 및 청소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다.⁵³⁾

(2) 동·서독 교류정책

독일의 통일에는 여러 대내외적인 크고 작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지만 그 중 독일의 분단 후 끊임없이 이어졌던 동·서독간의 여러 형태의 교류는 독일 통일과 이후의 독일문제에 결정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⁵⁴⁾ 이러한 동·서독 교류는 빌리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에 입각하여 꾸준히 인내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동·서독 교류정책에 기초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여러 형태의 교류들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아래의 정치교류, 경제교류, 그리고 인적교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정치교류

동·서독간의 정치교류는 주로 동·서독 정당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측간의 정치교류는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체제비판으로

53) 동독의 고등학교 정치교육을 위한 교과서『국민생활(Staatsbürgerkunde)』제5장 5절 <독일민주공화국(DDR)의 민족적 사명>에서 동독은 “평등권의 기반 위에서 두 독일 국가의 정상적인 관계와 협력의 수립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민족적 갈망이다. 나아가서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시민은 제국주의에 의해 독일 민족에게 강요된 독일의 분단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반 위에서 그 결함에 이르기까지 두 독일 국가의 단계적 접근을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Wehling, H.G., Einführung: Politische Bildung in emanzipatorischer Absicht. in: Ehrenwirth, F.(ed.). Unterrichts-praktisches Handbuch zur politische Bildung. Modelle für den Sozial-kundeunterricht. München, 1973, pp. 7~8 ; 윤근식, 『동·서독 통일교육 현황분석』, 국토통일원, 국통정 78-12-1485, 1978, 20쪽에서 재인용.

54) 특히 우리와 같이 반세기가 넘도록 한번도 공식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갖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가 어떠한 공동의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단시간내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냉기류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자신과 상대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의 이해와 갈등의 극복이 대화 그 자체에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서독의 전통적인 정당인 사회민주당(SPD; 사민당)과 동독의 사회통일당(SED; 사통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했지만 그 이념의 뿌리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동·서독간의 지속적인 정치교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동·서독간의 정치교류를 대략 살펴보면⁵⁵⁾ 냉전의 시기에도 서독의 정당들은 제3국의 중개인들을 통해서나 교회행사를 통해 동독 정당과의 접촉을 꾀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⁵⁶⁾ 동독도 동독의 주도 정당인 사회주의 통일당(SED) 외의 동독 기민당(CDU), 동독 자민당(LDPD), 독일민족민주당(NDPD), 독일민주농민당(DBD)과 같은 위성정당을 동원하여 서독 정치계의 의중을 탐지하기 위하여 정당차원의 접촉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 서독은 동독에 대하여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 이후 더욱 열린 정치를 전개해온 반면, 동독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의회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독에 비해 폐쇄적이었으며 이러한 정통성 부재의 노출과 체제의 와해를 염려해 소극적인 정치적 교류자세를 가질 수뿐이 없었다. 이렇게 동·서독 정치교류의 자세가 다른 이유는 서독의 정치교류 목적이 상호 접촉을 통해 상대방을 잘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편견을 극복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한 반면, 동독은 오직 독일 내의 2개 국가 인정과 동독의 국제법상 인정을 유도해 체제 내부적 갈등을 호도하고 국제적으로 동독정부 자체의 존립을 선전하는

55)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서울: 통일원, 1993), 112~128쪽 참조.

56) 서독 사회민주당(SPD)은 국제 사회주의 그룹의 일원으로 특히, 이테리 공산당을 통해 동독의 사회통일당(SED)과 접촉했으며, 서독의 기독교민주당(CDU)은 같은 계통의 동독 기민당과 비정치적으로 국제적인 기독교 집회나 교회단체 모임에서 접촉을 시도했다. 통일원, 위의 책, 112쪽 참조.

데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동·서독 양측 체제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동·서독 양측의 성격이 비슷한 정당들 사이에 통일 전까지 끊임없이 상호 정치적 교류를 모색해 옴으로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으며 또한, 통일 후에 체제의 상이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후유증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독일의 상황이나 우리 남북한의 상황도 국내외적인 정치적 형세와 그에 따른 분단 양측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목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교류를 갖느냐에 따라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⁷⁾

(나) 경제교류

동·서독 교류에서 정치교류 못지 않게 중요한 영역이 경제교류 부분이다. 그것은 정치교류가 다분히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제교류는 인간의 의식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전쟁 직후에는 이념보다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간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1834년『관세동맹』을 통하여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어서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는 전후에 실제로 정치교류보다 먼저 이루어 졌고, 동독이 민간인들의 서독방문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에도 상인들에게만은 서독방문을 허용한 것으로도 동·서독간의 경제교류가 동·서독간의 교류전체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이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로도 분단국 교류에 있어서의 경제교류가 차지하

57)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남한에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큰 정당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의 남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비록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정당으로서 약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하고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 정치교류의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는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간의 경제교류가 처음부터 그리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소련과의 대립에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규제정책을 통해 서방경제력을 강화시켜서 상대적으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군수산업 발전을 억제시키고 기간산업 부분을 약화시킴으로써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서독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었다.⁵⁸⁾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對) 유럽 경제정책은 서유럽 국가들과 서독으로부터 점차 비판을 받게 되면서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는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에 편승하여 1969년 서독 정부는『지역간 교역 시행 규정』을 마련하여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를 위한 허가 신청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특정 교역 상품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규정을 두었고, 마침내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게 되었다.⁵⁹⁾

동·서독 사이의 경제교류를 종합해 볼 때 경제적으로만 보면 서독의 대 동독 경제교류의 의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교류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계속적인 인적교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정치적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무역 및 자본교류가 정치적인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독의 입장에서 볼 때에 대(對) 서독과의 경제교류는 동독의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는데, 동독 GNP의 약 3%를 차지하게 되었고, 80년대 동독의 대 서방 무역에서 서독이 차지하는 비율이 36%나 달하여, 과거에는 40%~50%에 미치기까지 했다.⁶⁰⁾ 결국 이러한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는 동독의 경제를 돕는 양상이 되었고 이는 후에 독일이 통일된 후에 통

58) 통일원, 앞의 책, 332~333쪽 참조.

59) 1969년부터 1976년 사이의 서독과 동독간의 무역거래 총액이 거의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일원, 『10년간의 독일정책』(서울: 통일원, 1992), 107쪽 참조.

60) 통일원, 앞의 책, 368~369쪽 참조.

일 비용의 절감과 양측의 경제적 편차로 인한 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던 커다란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인적(人的) 교류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동·서독간의 정치 및 경제교류는 이념이나 물질에 관한 교류로 통일 독일을 이루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지만 분단된 양국에 있어서의 인적 교류는 정치교류와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모든 접촉의 기본이 되는 교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인적 교류의 핵심을 이루는 이산되어 있는 가족, 친척 및 친지를 중심으로 한 동·서독의 인간 중심 교류는 동·서독 교류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교류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염원하게 하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분단의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은 영토보다는 인간의 분리에 있다. 따라서 이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 친숙해지고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아가는 것은 분단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미래의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⁶¹⁾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동·서독 인적교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²⁾

제1기는 1950년대 베를린을 통한 자유왕래가 있었던 시기를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49년 동·서독의 독자적 정부수립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에 이르기까지로 정치적으로는 서독정부가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1950년대 중반 서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구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블록대결 속에서 양측 독일의 분단이 사실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냉전의 상황에서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제한적으

61) Schierbaum, Die deutsch-deutschen Beziehungen von der Teilung Deutschlands bis zur Gegenwart, 1987,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강연논문, 신웅철, 앞의 책, 131쪽에서 재인용.

62)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7~49쪽 참조.

로 허용된 반면, 동독주민들의 서독방문은 주민들의 서독탈출 때문에⁶³⁾ 1953년까지 공무상의 여행을 제외하곤 차단되었다. 동·서독간의 인적교류는 이렇게 주변의 정치상황에 따라 상당히 예민하게 변화되었는데 대체로 동독의 대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예로 1953년 6월 17일 동독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에 의한 폭동으로 서독방문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매년 평균 약 250만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⁶⁴⁾

제2기는 1960년대의 베를린 장벽으로 인한 인적교류가 위축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동독정부는 1953년의 동독노동자 폭동으로 동독주민들의 서독방문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이후 베를린을 통해 동독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탈출을 하게되자 1957년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동독 최대의 청소년단체인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의 서독 여행을 금지하였고 1960년부터는 서독주민의 동베를린 방문에 대한 통과사증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1957년 270만명에 달했던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이 100만명 이하로 격감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서독정부는 1960년 9월 1951년 체결된 『베를린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동독정권의 여행통제에 대한 보복조치와 동시에 동독의 간첩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독과의 인적교류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동·서베를린 주민들의 상호방문 재개와 관련한 ‘통과사증협정’의 체결, 동독정치범의 석방거래, 그리고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 중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서독정부의 최대 관심사였다.⁶⁵⁾ 이를 통해서 1965년부터

63) 동독정권 수립 이후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될 때까지 매년 14만~33만명에 이르는 동독주민이 서독지역으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그러나 사실 이러한 많은 동독주민들의 서독 방문을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 동독의 연금수혜자들의 친지방문으로서 모든 동독인들이 서독방문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65) 동독은 1962년 7월부터 노동력이 없는 연금수혜자의 서독이주를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실제로 이는 동독주민의 서독탈출 욕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까지 약2,700여명이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

제3기는 1970년대의 동·서독간 인적 교류로 말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인적 교류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와 한계가 근본적으로 양측 동·서독 정부의 공식적 접촉과 제도적 합의의 부재에 기인하였다면, 이 시기 양측의 인적교류는 앞서 언급한 서독 브란트 수상외의 신동방정책의 영향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1972년 양국의 정치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양독간의 통행협정과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동·서독은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독주민들도 1년에 총 30일간 한번, 혹은 여러 번에 나누어 동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1970년대 말까지 총 253만 여명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이루어진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은 1980년대 동·서독 및 유럽의 정치적 환경변화 속에서도 양독 관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인적 교류의 증대를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기는 1980년대 이후의 동·서독 인적 교류의 시기로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기 역시 당시의 대내외적 정치환경에 따라 동독의 반응이 양측의 인적교류에 예민하게 반영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독주민의 경제침체와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고조와, 미국과 소련간의 핵미사일 협상 결렬, 그리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야기된 소위 ‘신냉전(新冷戰)’의 영향으로 동독정권은 서독과의 인적 교류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시 최소의무환전액을 25DM로 인상함으로써 동독 방문을 간접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1983년 신냉전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서독정부의 대동독 차관이 약속되자 동독은 다시 인적 교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는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규제 완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984년 최소의무환전액의 재인하, 1년간 총 여행일수를 30일에서 45일로 연장, 국경 근접지 방문의 경우 1일에서 2일간 체류로 연장되었고, 동독주민들의 서독 친지방문 허용일수도 연간 총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87년

이후에는 동독의 연금수혜자가 아닌 서독방문 주민이 매년 120만 여명에 이르게 된 사실이다. 서독으로의 이주인구도 점차 늘어나 1984년에 약 3만 5천명에 달하게 되자 노동력 감소를 우려한 동독은 이주허가를 잠시 다시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1980년대 말에 들어서서는 인적 교류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몇 가지 사실은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가장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난 시기이고 양측 도시간 자매결연의 활성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베를린 장벽 설치로 중단되었던 동·서독 개신교단의 합동 종교대회가 재개되었고, 1986년에는 문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예술, 학술, 교육 분야로 나누어 교류·협력 사업이 전개된 사실들이다.

나. 동·서독 청소년교류

(1) 동·서독 청소년교류 정책⁶⁶⁾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대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은 아주 상이했었는데 그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양측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것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념적, 사회구조적 문제는 동·서독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그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지배적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는 탁아소에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및 청년들의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이념으로 의식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는데, 각 성장기에 명목상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만들어 이념교육을 시켰으며, 그 안에서 가장 열성적인 활동을 한 자들만이 공산당원으로 발탁되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받는 반강제적 체제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서독에

66) 동·서독 청소년교류 정책의 면모는 우리의 통일원이 분단국 통일사례연구의 일환으로 주독대사관으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된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에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있다.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636~656쪽 참조.

서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40여 청소년 가입 단체가 각기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국가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국가가 정한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기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동·서독 청소년 교류 정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역시 양 국가의 상대방을 향한 기본 국가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가) 서독의 대(對) 동독 청소년교류 정책

서독은 일찍부터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서로 다른 양측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향후 민족적 동질성을 점차 상실해 갈 뿐만 아니라, 장래 독일의 통일과 통일 후에 커다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을 직시하였다. 즉, 서독 정부는 그들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서독간의 긴장 완화, 상호 대화, 관계 개선 등에 대하여 양측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상호 교류를 통하여 기본적인 통일의 자세를 익히는 것이 결국 독일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로 보았다. 따라서 동·서독 청소년들 간에 사적(私的) 교류, 여행, 평화적인 정치적 논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체들간의 공식적 모임 등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맺어짐으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적대감 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단 직후부터 1961년 베를린 장벽의 구축 시까지 서독정부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 오거나 이주한 청소년들이 서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주(州) 정부는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연방정부의 정착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에는 동독 측에서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하자, 당국간 협상을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마침내 1981년 10월 서독의 슈미트(H. Schmidt)와 동독의 호네커(E. Honecker)⁶⁷⁾ 양 수뇌 회담을 통해 청소

년교류의 확대를 합의하여 이듬해 서독의 ‘독일연방청소년단체협회(Deutscher Bundesjugendring; DBJR)’과 동독의 ‘자유독일청소년단(Freie Deutsche Jugend; FDJ)’간에 관광차원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에 합의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후에도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에 청소년교류 증진 대상 단체를 확대하고, 1987년 양측 청소년 여행 앞선기관끼리의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 1988년 호네커의 서독 방문 이후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 여행에 관한 통제가 많이 완화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동독의 대(對) 서독 청소년교류 정책

동독정부는 서독의 적극적인 동·서독 청소년교류 정책에 비하여 서독의 이러한 제의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특히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서독 측으로부터의 재정적·경제적 반대급부를 의식하고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마지못해 응하면서도 동독 청소년들이 사상적으로 자본주의에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여 여러 형태로 통제를 하여 양측 청소년들간에 공개적이고 순수한 교류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독의 청년 공산당 양성소라 할 수 있는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은 국가의 통제하에 청소년교류를 감시해 왔고,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동독의 청소년들도 체제에 가장 잘 순응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졌으며, 여행자 대부분은 사회의 직업과 가정에 불모가 되어 있는 26세 이상의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동독정부는 이러한 서독여행의 허용을 통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통제와 욕구불만을 해소하려는 기대와 함께 서독의 자본주의적 사회분위기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생각을 갖게 하고, 동독체제에 대한 상대적 신뢰감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을 이루려하였다. 한편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접촉을 벌였던 단체는 개신교 청

67) 동독의 수뇌 E. Honecker는 초대 ‘자유독일청소년단(Freie Deutsche Jugend; FDJ)’의 회장 출신이었다.

소년단체들이었는데 동독정부가 이를 허용한 정책적 배경은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종교활동 범위 안에서 통제위주의 동독사회에 대하여 자칫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층에게 일정한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야만 서독으로부터의 물질적·재정적 도움을 비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개신교 단체간의 접촉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고,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FDJ의 간부들이었으며, 서독이 희망하던 동독 청소년간의 교류 대상자는 200~3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동독정부는 신교단체간의 접촉에서도 사회과학 서적 특히, 교육학, 사회학의 반입을 불허했으며, 단지 신학 책만 선별적으로 허용해 체제유지를 위하여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다.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발전과정

동·서독간의 청소년교류는 우리와는 달리 전후 1945년부터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전쟁이 종결된 직후부터 수년간의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양측간의 교류도 거의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한 서독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독일연방청소년단체협회(DBJR)’과 동독을 대표하는 ‘자유독일청소년단(FDJ)’간의 교류가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 서술하는 이러한 양측을 대표하는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에 관한 발전과정은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발전과정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⁸⁾

68) 이러한 동·서독 대표 청소년단체인 DBJR과 FDJ간의 교류과정에 대한 내용을 Werner Sauerhöfer의 글 “Die Jugendverbands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에서 발췌하였다. Sauerhöfer, W., “Die Jugendverbands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in: Kein Alter zum Ausruhen. Deutscher Bundesjugendring, 1992, pp. 151~166.

(1) 제1기: 새로운 시작

1945년 5월『제3제국』의 붕괴와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직후 독일 청소년들에 관한 많은 노력들이 급속히 취해졌다. 소련의 점령지역에서는 ‘반(反) 파시즘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로부터 동독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자유독일청소년단(FDJ)’이 이미 1946년 3월에 창설되었다. 서독의 군사정권에서는 ‘나치청소년’으로 불리어지는 소위, ‘히틀러청소년(Hitler Jugend)’에 관한 불신감과 염려로 인해 히틀러 정권이 들어선 1933년 전(前)의 청소년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정서가 지배적이었고, 미국의 점령지역에서는 그와 달리 청소년들을 위한 자신들의 “재교육(reeducation)”과 여가활동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후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보다 급선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추방자, 고아들 문제와 그들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의 구성이었고, 동시에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한 장려와 교육이었다. 이러한 “살아남기”를 위한 노력들이 1933년 이전의 청소년사업의 형태로 참여되었는데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은 조심스럽게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를 위한 최초의 청소년단체협회는 미국의 점령지역인 Bayern, Kurhessen 그리고 Bremen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의 연합국들은 FDJ의 창설과 그의 서독 점령지역의 청소년조직들과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매우 불신감을 가지고 주시하였는데, 그것은 사실 처음에 FDJ가 독일의 통일과 점령지역들을 넘어서는 한 청소년조직구조를 만들려는 방향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의 연방 청소년조직들의 영역에서 이러한 노선을 지지하는 대표들이 생겨났고, 1946년 Hohen Meißner에서 한 커다란 청소년집회가 계획되었기 때문이다.⁶⁹⁾

69) 결국 이 집회에는 서독의 점령지역 뿐만 아니라 FDJ와 소련의 점령지역의 많은 청소년단체들에서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독일의 청소년들에게 “독일청소년단체협회의 형성”을 목표로 “민주주의 정신에서의 청소년단체협회를 결성할 것을” 성명서에서 선포하게 되었다.

1947년에는 더욱 많은 청소년조직들이 점차 FDJ와 접촉을 가지게 되었고 대표자들간의 대화에서 “독일청소년총연맹”을 만들자는 제안이 확산되었는데 최종 목표는 “분단될 수 없는 독일 공화국”으로 명명되었다. 1945년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구교의 청소년단체에서 FDJ와 서독 지역의 청소년단체들을 초청하였는데 여기서 FDJ의 단장으로서 뒤에 동독의 수상이 된 호네커는 런던의 외무상회의에 보내는 독일청소년단체들의 결의문서와 독일청소년총연맹을 위한 법안문서를 제출했으나 동독지역에서의 FDJ외에 다른 청소년단체의 활동 불허에 따라 서독지역의 청소년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특히, 1949년 5월 23일 서독지역에서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이 탄생하고 동독지역에는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이 같은 해 10월 7일 생겨남으로서 마침내 서독에는 FDJ를 제외한 ‘독일연방청소년단체협회(DBJR)’가 새로이 결성되게 되었다.⁷⁰⁾

독일이 공식적으로 분단된 후 양측의 이념을 서로 달리하면서 DBJR과 FDJ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1954년에는 FDJ의 서독 내 활동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DBJR는 FDJ와 대화를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그의 전제조건으로 소련의 점령지역에서 모든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의 석방, 국가청년조직으로서의 FDJ의 독점 포기, 다른 청소년조직들의 허용과 서독 청소년잡지의 자유로운 판매를 요구했다. 결국 FDJ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955년 DBJR과 FDJ 사이에 잠시 대화가 재개되었으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DBJR의 12차 총회에서는 “독일연방청소년단체협회는 FDJ와의 계속적 대화를 할 아무런 이유와 명분이 더 이상 없다. (...) 모든 지역청소년단체협회들은 이러한 결정에 동참해 줄 것과 FDJ와 그의 관계자들과의 대화나 협상에 거리를 두기를 권장한다”라는 보고를 결론으

70) 비록 독일이 1949년 두 개가 국가로 분단되고 서독이 DBJR을 만들면서 FDJ를 배제시켰지만 DBJR은 1960년대에 들어와 동독을 DDR로 명명함으로써 통일 독일에 대한 지속적인 지향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로 제시하였다. 그 후에는 1970년에 와서야 비로소 DBJR가 다시 FDJ를 초청하였지만 DBJR은 1960년대에 와서도 하나의 독일에 대하여 계속적인 성명을 발표한 반면, FDJ는 점차 2개의 독일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 대표 단체의 생각기에도 이미 DBJD의 많은 작은 청소년단체들은 동독의 FDJ와 접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제2기: 역할 전환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대화나 접촉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대체로 동독의 FDJ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는 서독의 DBJR가 이러한 역할을 떠맡기 시작했다. 당시 주변의 국제정세는 아직 동방과 서방국가들 사이에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0년과 71년 사이에 소련과 폴랜드는 사회자유주의적 동맹을 맺었고 이에 DBJR은 1972년 4월 “동방계약 - 청소년을 위한 전망은?”이란 청소년정책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대다수가 이 동방계약의 비준에 찬성을 하였다. 이어서 1973년 8월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0회 청소년·대학생 세계축전”에서도 DBJR과 FDJ는 계속적인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동독의 FDJ는 서독의 DBJR과의 대화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뿐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1978년 1월 마침내 서독의 수도 Bonn에서 DBJR와 FDJ사이에 공동 코뮈니케가 작성되었고, 1979년 4월 최초로 DBJR의 회장이 FDJ를 공식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DBJR의 회장인 Konrad Gilges는 “이 방문을 통해 FDJ은 DBJR 공동 코뮈니케의 중요사항을 실천했고, DBJR은 가능한 FDJ와 DBJR에 소속되어 있는 양독의 지방 청소년단체들 간에도 상호 접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⁷¹⁾을 천명했다. 이후 1980년에 서독에서 두 대표 단체간에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 세미나는 매년 교

71) Sauerhöfer, W., 위의 책, 1992, 156쪽.

대로 양 독일에서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주로 “청소년들의 관심, 특히 평화를 위한 관심을 대변해 주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청소년단체 역할”에 관하여 다루기로 협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1년 10월 동독의 Werbellinsee에서 있었던 서독 수상 쉬미트와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인 호네커의 정상 만남에서는 이 두 단체간의 관계가 진일보되어 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두 단체간의 정치적 의지가 강화되고 실천에 옮겨 질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82년 9월 20일 두 단체는 양 독일의 청소년간 여행에 관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서독의 5개 청소년여행사는 동독의 FDJ 소속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⁷²⁾ 이로 인해 이 해에만 300명의 동독 청소년이 서독을, 15,000명의 서독 청소년이 동독을 상호 방문하였고 다음 해에는 1,200명의 동독 청소년과 22,000명의 서독 청소년들이 상대국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양 독일의 두 단체간 청소년 교류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동·서독 교류가 양국간의 정치 기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청소년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례로 FDJ는 1984년 서독 내무부「국가안보보고서 1983」에서의 “여러 동독 기관들의 서독 내 작업” 내용을 문제삼아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방문을 전면 중단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서독 내무부는 FDJ 소속 동독 청소년들의 서독방문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교육받은 FDJ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반(反) 서독의 정치적 의도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⁷³⁾ 그러나 서독 내무부가 바로 다음 해에 이러한 비판적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양 단체간의 청소년교류는 곧 재개되었다. 이후에도 1986년 양 독일간의 문화협정 체결 직후 소련의 체르노빌에서의 핵 원자로 사고로 인

72) 여기서는 배당, 가격, 여행일자, 여행사 측의 서비스 등이 결정되었으며, 마케팅 절차, 참가자 선발, 공공 지원 등에 관한 문제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639쪽 참조.

73) 이 밖에도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방문 시 착용했던 푸른 제복이 서독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나치제복착용금지와 같은 맥락으로 오인되어 기소되는 사건으로 양 독일간의 청소년교류가 불편해지는 사례도 있었다. 주독대사관, 위의 책, 643쪽 참조.

한 방사선 누출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여행을 통한 교류가 주춤했는데, 그것은 서독의 Baden-Württemberg 주(州) 교육청에서 당시 동독을 포함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학급여행을 금지한 후 이에 대응하여 동독 정부가 곧 바로 모든 Baden-Württemberg 주(州) 관련 동독 방문 청소년여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서독 내 소수 정치인들은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속도를 가속화하고자 독일과 프랑스간의 청소년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독·불 청소년사업(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 기구를 모델로 ‘동·서독 청소년사업(Deutsch-deutsches Jugendwerk)’ 기구를 만들고자 공개적으로 논의했는데 DBJR의 제57차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와 함께 두 단체간의 기존 동·서독 청소년교류와 청소년여행의 구조들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을 결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이 시기에 FDJ와 DBJR 사이의 모든 대화의 중심은 청소년교류의 지방화 문제였다. 말하자면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서독의 연방정부와 동독의 중앙당의회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화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은 서베를린의 청소년도 교류에 완전히 포함시킨다는 협의였다.⁷⁴⁾ 1986년부터 맺어진 협정에 따라 양 독일의 도시간 자매결연은 청소년교류 영역에 새로이 확대된 차원을 마련해 주었고, 통일 직전인 1989년에는 DBJR이 양 자매결연 도시들의 자치단체의 청소년단체 대표자들을 위한 상호 정보와 경험 교환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지방화는 1988년 최초로 FDJ의 제1서기장인 Eberhard Aurich가 서독을 방문하고 DBJR과 함께 동독의 FDJ 지부인 Cottbus와 DBJR의 Saarland 주(州) 청소년연맹과 청소년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74) 1987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인 Erich Honecker의 방문 직전에 서베를린 청소년들은 동독의 전문 ‘청소년여행자’ 담당 기관과 여섯 번째로 청소년여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내용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위한 양 독일의 대표적 청소년단체인 동독의 FDJ와 서독의 DBJR간의 노력은 분단 직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양 단체의 성인 대표자들간의 만남이었거나, 국제 청소년 집회에서 간접적 교류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동·서독 청소년간의 직접적 교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양 독일정부간에 합의한 것은 1981년 있었던 서독 수상 슈미트와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간의 정상 만남에서 청소년교류에 관한 논의가 있는 후 1982년 9월 20일 두 단체가 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를 공동 발표한 성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양 독일 청소년들의 상호 여행과 더불어 다른 중요한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내용은 개신교 청소년단체간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동·서독 청소년교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⁷⁵⁾

(1) 동·서독 청소년의 상호 여행

동독과 서독은 이미 1972년 통행협정을 맺어 양 독일간 여행교류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했으나 당시에는 관광여행과 개인여행만 취급하였고 청소년교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1982년 FDJ와 DBJR 두 청소년단체간에 청소년 여행에 관하여 합의한 이후 1983년부터 비로소 양 독일간의 공식적인 상호 청소년 여행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86년 동·서독 문화협정 제11조는 청소년교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을 기존 청소년단체 간부들과 함께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일반학생들까지 확대하기에 이르렀다.⁷⁶⁾

75) 아래의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내용은 주로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주독대사관, 앞의 책, 645~656쪽.

-
- 76) 서독정부의 이러한 청소년들의 동독여행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연방정부인 내무부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학생, 청소년, 대학생의 내독(內獨)간 정보 및 활동여행 장려 지침(Richtlinien für die Förderung innerdeutscher Informations- und Bewegungsfahrten von Schülern, Jugendlichen und Studenten)”에 의거하였다. 이에 반해 동독은 뒤늦게 1988년 11월 30일자로 여행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통해 18세 미만 동독시민의 대 동구권 이외지역 여행 시에 신청서제출 의무를 폐기하였다.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규집』에는 남·북한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주독대사관, 위의 책, 645쪽 참조 ;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법규집』(서울: 통일원, 1996) 참조.

<표 IV-17> 연도별 서독 청소년의 동독 여행 현황

연도	건학 여행 그룹별						총횟수 (총인원:명)
	대학생 그룹	구성비 (%)	청소년 그룹	구성비 (%)	학생 그룹	구성비 (%)	
1984	45	5.2	127	14.5	705	80.3	877 (22,000)
1985	34	3.5	160	16.7	709	73.7	961 (자료없음)
1986	45	5.2	136	15.7	665	76.9	864 (22,551)
1987	64	5.7	171	15.2	889	76.4	1,124 (26,326)
1988	71	6.5	186	17.1	833	76.4	1,090 (26,812)
1989	62	5.8	189	17.8	811	76.4	1,062 (자료없음)

※ 자료 :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1993)⁷⁷⁾, p. 647.

이렇게 양 독일간의 청소년교류가 상호 여행을 통해 활발해지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에는 서독의 청소년여행 알선기관인 ‘유스호스텔사업(Jugendherbergswerk) 서베를린 지부’와 동독의 청소년여행 전담 여행사인 ‘청소년여행자(Jugendtourist)’ 사이에 구체적인 청소년들의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⁸⁾

77) 주독대사관에서 제공한 1987년 이후의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여행 통계수치는 M. Piepenschneider와 W. Weidenfeld/K.-R. Korte가 서술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1987년에만 4,900 서독 청소년단체에서 77,000명이 동독여행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수치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Piepenschneider, M., “청소년교류”, 『독일통일소사전』, 주독대사관, 서울, 506쪽, Weidenfeld, W./Korte, K.-R.(Ed.)(1993).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 367 참조.

78)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Ed.),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Bonn, 1989, pp. 197~200 참조.

먼저 양 독일간의 상호 청소년여행의 목적을 크게는 평화유지와 긴장완화 그리고 상호 호혜적 협력 장려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하고 있으며, 작게는 동독과 서베를린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과 지리,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고 알게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협약된 바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30세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과 관련기관의 대표자들간의 만남, 청소년여가시설 및 문화·역사적 유적지 방문 그리고 시내관광과 다른 여행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룹여행시 숙박소로는 유스호스텔, 청소년민박소, 청소년여행자호텔, 청소년휴양소 등이 이용되었고, 양측은 각 한명의 여행안내자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낸 측에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밖에도 모든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즉시 신고의 의무도 지도록 되어 있고, 여행 참가자들은 여행지역의 모든 여행 관련 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상호 여행을 통한 동·서독 청소년 교류는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독 청소년의 동독여행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었던 반면, 동독 청소년의 서독여행은 매우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었으며 또한 정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서술한 양 독일의 청소년단체간의 협약들보다는 실제 양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평가가 청소년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양 정부의 청소년 여행에 대한 목적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서독 정부는 분단을 초월한 민족 동질성을 함양하고 청소년세대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단 현장의 견학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정책에 대한 상호토론의 기회를 모색한 반면, 동독 정부는 1975년 헬싱키 조약에서 결의된 사항 중 하나인 “청소년여행”에 대한 정치적 의무와 다른 중요한 정치적인 동·서독 교류들의 일환으로서 협약된 사항에 대한 의무적 수행으로 청소년여행을 보아왔고, 청소년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체제가 유

사한 소련 및 기타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에 주력함으로써 동·서독 청소년여행은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동·서독 청소년교류 여행에 대한 적극적인 서독정부의 구체적 지원을 보면 먼저 위의 <표 IV-1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5세~25세 사이의 청소년 그룹이나⁷⁹⁾,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 학생 그리고 대학생을 위주로 하였고,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여행자 수는 장기여행의 경우 최소한 7명, 그 이외의 경우에는 최소한 20명, 최대한 60명까지였으며 이들은 모두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했다. 지원의 규모는 아래의 <표 IV-18>과 같으며 예산지원의 신청절차는 여행출발 최소한 6주전에 허가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관청은 여행경비 지원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준 후 여행종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사후 정산하는데 이 때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여행 진행경과와 프로그램, 여행 참가자들의 인적사항 각종 지출 증거서류 등으로 되어있다.

79) 동독과는 대조적으로 서독정부는 나이가 적은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여행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표 IV-18> 청소년 교류여행에 대한 서독정부 지원

견학의 종류	교통비 지원	체류 비용 지원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3-10일간의 장기 견학 여행 및 상봉여행	○출발지에서 동독 또는 동베를린까지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철도여행의 경우는 2등 기준 단체여행 철도요금의 전액 -버스여행의 경우는 80%를 지원함	하루 일인당 5DM씩 지원
동독과 동베를린으로 1-2일간의 단기 여행, 4-8일간의 서베를린 여행	○출발지에서 동독 또는 동베를린까지의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km별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동독에서의 교통비지원을 위해 1인당 1회에 걸쳐 7DM지급	위와 동일 (단, 서베를린으로 여행하는 경우, 출발일과 도착일을 합해 하루로 보고 5DM 추가)
1-3일간의 내독간 국경지대 견학여행	○출발지에서 국경까지는 km별로 일정 부분 지원 ○국경을 따라 가는 비용도 거리만큼 지급됨	위와 동일

※ 자료 :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649쪽.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로서의 동독으로의 청소년 여행에 대한 평가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수 있으나 프로그램이 너무 관광 위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 진행을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동독 청소년 조직이 담당했기 때문에, 서독정부가 얻으려 했던 교육적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사회 곳곳에서 서독과의 심한 경제적 차이를 실제로 확인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동질감 보다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동요와 여행 시 동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통제적인 입장에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게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또한 60분~90분이나 소요되는 지루하고 까다로운 국경통과 절차와 정치적인 선전목적으로 실시되는 관광안내와 일정 이외의 비공식적인 접촉의 금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서독 청소년들은 공식적으로만 동독의 FDJ 대표 청소년들하고만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동독의 참가 청소년들은 대부분 평균 25세 이상이었으며, 이들의 발언과 행동도 성인 FDJ 대표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접촉에서 논의된 테마는 주로 동독의 청소년 조직과 활동, 동독의 학교제도, 직업교육제도와 같은 비정치적인 것과, 평화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경제문제 등의 테마도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접촉은 대체로 매우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으며, 오히려 유스호스텔의 디스코텍이나 청소년 전용 클럽, 길거리 또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접촉에서 상호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솔직한 의견 교환들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FDJ 대표들의 감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서독지역 대학생들의 그룹여행 경우에는 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서독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 교육학,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 노동운동 및 노조활동 등의 특정 전공분야에 대한 대화와 관련 인물들의 접촉을 원할 경우 동독 측은 매우 호의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원했기 때문이다.⁸⁰⁾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분단이전의 동·서독 공동문화유산에 대한 견학 및 관광과 동독의 청소년실태, 주거환경, 도시건설 현황, 농업구조 등의 정보취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했으나, Buchenwald의 나치집단수용소 방문과 같은 곳에서는 동독 측의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에 거부감을 가졌고, 서독 측 청소년단체가 요구한 일정과 동독 측 여행사가 실제 주선한 여행일정과 차이가 많아 갈등이 자주 야기되었다.

80) 동독의 이러한 태도는 행사의 주제가 학술적이고 비정치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노동운동 및 노조활동의 주제는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V-19> 동·서독 양측의 청소년여행 일정에 대한 입장(예)

비 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일요일	요구			
	실제	출발	동독여행사 안내자 접촉	동독과 여행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월요일	요구	출발	Magdeburg 시 관광	대화 및 토론시간(특정주제)
	실제	Halle 시로 이동	Halle 시로 이동	자유시간
화요일	요구	국영기업체 방문	Thale 시 관광	다음 숙소로 이동
	실제	농업협동조합(LPG) 방문	Gardelegen 유적지 방문	자유시간
수요일	요구	Buchenwald 나치 수용소 방문	Weimar 시 관광	다음 숙소로 이동
	실제	Thale 시 문화유적지 방문	Queollenburg 유적지 방문	자유시간
목요일	요구	농업협동조합(LPG) 방문	Halle 시 관광	디스코텍 방문
	실제	Buchenwald 나치 수용소 방문	Weimar 시 방문	다음 숙소로 이동
금요일	요구	학교 방문	Bode 계곡 소풍	자유시간
	실제	박물관 관광	국영기업체 방문 (일정취소)	국영기업체 직업 청소년들과 대화 (일정취소)
토요일	요구	유적지 방문	Fallenburg 성 관광	Thale 시 청소년과 대화
	실제	유적지 및 박물관 관광	종유석 동굴 관광	동독 청소년들과 대화
일요일	요구	귀 환	귀 환	귀 환
	실제	유적지 관광	귀 환	귀 환

※ 자료 : 주독대사관, 앞의 책, 1993⁸¹⁾, 653쪽.

81) 서독 측이 요구한 일정의 조정과 확정은 FDJ에 소속되어 있는 동독 측 청소년여행사(Jugendtourist)가 전담했다.

(2) 개신교 단체들간의 청소년교류

동·서독 청소년교류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또 다른 접촉은 양 독일의 개신교 청소년단체들 사이의 예를 들 수 있다. 말하자면 FDJ와 DBJR 두 양 독일을 대표하는 청소년단체와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개신교 청소년단체 이외의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⁸²⁾ 동독 정부가 신교 청소년 단체들에 대해 서독과의 접촉을 허용한 배경은 우선 종교활동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제 위주의 동독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통로를 제공하고, 이러한 신교 청소년 단체간의 접촉을 통해 서독으로부터의 물질적·재정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독의 체제와 접함으로써 그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부각되도록 유도할 목적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교 단체간의 접촉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통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신교 청소년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동독은 1989년까지 나이 많은 20~30세 FDJ 간부급들만을 선발하여 서독 여행을 보냈고 실제 서독이 희망하던 청소년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0~300명에 불과했으며, 공개적인 접촉 횟수도 점차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개신교 청소년 단체간 접촉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상호 전문가들의 의견교환 및 물자교류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종교문제와 성교육문제에 관한 상호 토론 등이 이루어졌고⁸³⁾, 서독 단체들이 여행 때마다 동독에 사무용품 및 기기 등을 제공하였으며⁸⁴⁾ 동독은 이를 비공개적으로 접수한 것을 알 수 있다.

82) 구교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는 동독지역에서 그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접촉이 거의 없었고, 노조산하 청소년단체들도 동·서독 노총간의 이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83) 이러한 상호 전문가들의 의견교환도 그 결과가 미미할 수뿐이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동독 측으로부터 전문서적을 반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단체들간의 접촉에서도 선별적인 신학서적 이외의 사회과학 서적(특히 교육학, 사회학)의 반입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84) 서독 정부는 이러한 신교 단체내의 접촉에 대해 조건 없이 재정지원을 했다.

마.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주는 시사점

독일 통일 후 Mainz 대학 정치학연구소 유럽청소년부 차장인 M. Piepenschneider는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특징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그리고 정치체제상의 기능 면에서 고찰하였다.⁸⁵⁾ 그에 따르면 먼저 양적 측면에서 보면 80년대에 들어와 동·서독을 모두 상호 여행자 총수는 증가하였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의 비교되는 청소년 여행자의 연령구조나 접촉 대상과 성격, 내용 그리고 청소년교류의 통계수치를 볼 때에⁸⁶⁾ 과연 상호 대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교류의 개념을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상호 청소년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Piepenschneider는 동·서독 청소년교류 여행의 실태가 과연 청소년교류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서독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가치관인 다원주의,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기본원칙 등이 동독의 여행시에 전혀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맹종하는 동독의 청소년 여행참가자들, 동독 청소년여행 성인 대표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관광 위주의 판에 박은 프로그램 등이 바로 회의적인 요소들이었다. 정치체제상의 기능 면에서 볼 때에는 동독은 결국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행을 통해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긴장완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이용하려 했고, 서독은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동·서독의 전체 관계를 개선하는 한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서 장차

85) Piepenschneider, M., 앞의 책, 1992, 507~509쪽 참조.

86) Piepenschneider는 80년대 이후 동·서독 청소년교류 여행의 숫자의 증가도 1989년 '독·불 청소년사업(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 기구의 교류활동보고서에서 나타난 200만이 넘는 1988년의 독일과 프랑스 청소년교류 수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Piepenschneider, M., 위의 책, pp. 507~509;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 Tätigkeitsbericht 1988 des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s. Bad Honnef, 1989 참조.

통일을 위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시하는 서로 다른 동·서독 청소년교류 기능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⁸⁷⁾

Piepenschneider가 위에서 자신들의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바라본 시각은 의외로 상당히 비판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 말하자면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실상은 그가 가지는 의미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그 의미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만큼 미약했다는 것이다. 즉,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다른 동·서독의 인적교류와는 달리 그 성격이 청소년간의 순수한 상호 교류로서 그 교류가 지향하는 바가 미래지향적, 평화적, 교육적, 비이념적, 비정치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책임은 사실상 거의 동독에 있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독의 순수한 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함양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적인 순수한 목적은 동독의 비협조적이고 폐쇄적이며, 통제적인 교류의 태도로 인하여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여행한 대다수 서독 청소년들은 여행소감에서 동독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나 인식을 바로잡았다고 솔직히 밝힌 것들⁸⁸⁾ 음미할 때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바로 동일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국가로서 청소년간 상호 이해와 서로 다른 체제로부터의 불신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일이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분단 직후부터 통일까지 지속적으로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힘써 온 결과가 위와 같은 것을 볼 때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우리의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많은 생각할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분단 이후 반 백년이 지나 최초로 이산가족들이 상호 상봉한 지난 2000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분단사 이래 가장 뜻 깊은 날이라

87) 박성희,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89~312 ; 305~308쪽 참조.

88) Piepenschneider, M., 앞의 책, 1992, 504쪽 참조.

고 할 수 있다. 이 날은 남북한 교류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날이요, 장차 있을 민족 통일의 초석이 놓여진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동·서독 청소년교류와 독일 통일이 가져다 주는 역사적 교훈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때, 우리는 부단한 인내와 노력 그리고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통일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독일이 이미 동·서독 분단 전후에서부터 통일되기까지 상호 지속적으로 여러 다각적인 교류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을 이루는데 근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일 뿐 아니라, 비록 서로 다른 사회적 이념과 체제에서 성장했지만 통일을 주도한 양(兩) 독일의 많은 주역들이 이미 그들의 청소년시절부터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경험을 통하여 일찍부터 통일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간의 청소년교류는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거의 전무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1946년 3월에 창설된 동독을 대표하는 ‘자유독일 청소년(FDJ)’ 단체가 이미 1946년 Hohen Meißner에서 커다란 청소년집회를 통해 “분단될 수 없는 독일 공화국”을 최종 목표로 하는 하나의 “독일청소년총연맹”을 만들 계획을 세웠었고, 당시 FDJ의 초대 회장으로 뒤에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 된 호네커가 80년대부터 통일되기까지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주역으로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는 것은 독일 통일이 우연한 사실이 아닌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식적 분단 이후 양측이 이념을 서로 달리하면서 DBJR과 FDJ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절과 화해의 반복되는 냉각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인내와 노력으로 다양한 접촉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독일 통일전후의 독일 사회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통독 후 독일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전의 서독과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아래와 같은 통일 전 서독정부의 대(對) 동·서독 청소년교류정책으로부터의 몇 가지 중요한 기본원칙들을 교훈 삼아 남북의 통일 전후(前後)를 준비하여야

한다.⁸⁹⁾

첫째, 서독정부는 일찍부터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독일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로 깊게 인식했다.

둘째, 서독정부는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정치적, 재정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셋째, 동·서독 청소년교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민간청소년단체와 개신교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서독정부는 이러한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통일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매우 중시했다.⁹⁰⁾

다섯째, 서독정부는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많은 정치경제적 어려움들을 부단한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치경제적으로 서방 유럽의 최고 강대국인 서독과 소련 다음으로 강한 동독이 통일된 후 10년간 쏟아 부은 통일비용은 600조를 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분단 직후부터 통일과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준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⁹¹⁾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서로 다른 양측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통일정책이요, 통일 후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사회안정 및 번영에 결정적 자산이 될 것임을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89) 이민희,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교훈”, 『청소년소식』, 제46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8쪽 참조.

90) 서독의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는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동·서독의 통일을 위하여 서독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을 중요시해온 서독정부는 이를 통해 심도 깊은 많은 연구를 토대로 동·서독 청소년교류를 추진해 왔다.

91) 우리의 남·북한간 공식적 청소년교류는 사실상 전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체육이나 문화 및 학술분야에서 있었던 교류도 모두 일회적이고 제3국에서의 간접적 교류가 대부분이었다. 조영승·이민희·이선재,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 문화관광부, 1999), 231~239쪽 참조.

IV.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본 장에서는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NGO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활발한 반면, 북한은 NGO의 존재, 또는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기반을 갖고 있는 국내외의 NGO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살펴본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미래의 잠재적인 주요 행위자인 청소년에게 많은 긍·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체제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점 '지구화' 되고 있는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양쪽 주민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폐쇄적·적대적인 관계만을 강요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한민족공동체 의식 형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비정치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점진적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하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는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시혜적 지원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북한 미래세대 간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쌍방향 교류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의식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21세기 지구시민사회의 대두에 발맞추어 환경, 인권, 평화 등의 지구적 의제와 청소년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

사나 기성세대가 주도하고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수동적 프로그램은 더 이상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걸맞지 않다. 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행동 지향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운동 등 정치적 분야보다 과학, 수학 등 비정치적 분야 및 인도적 사업 등에서의 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총괄적인 조정·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NGO의 역할은 정부기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2. NGO를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

「국민의 정부」는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일변도의 정책에서 민간분야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교류·협력의 창구단일화 원칙에서 벗어나 창구 다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표명과 더불어 시장경제 및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국내의 NGO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많은 관심과 함께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⁹²⁾

92) 최근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벌인 종교분야의 경우 1998년 6월 재미동포 이광덕 목사와 10월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이 간첩혐의로 북한에서 추방되었다. 연변과기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김진경총장의 추방사유로 자유주의 이념전파, 중국식 개혁·개방유도, 기독교전파 등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는 종교단체의 지원을 넘어선 선교활동에 대한 북한의 경고일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남북 교류의 과열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경쟁이 지나치고 공격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교단들이 방북을 위해 국경지역에 파견한 선교사들의 활동이 지나쳐 현지인들의 거부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이 즉흥적이고, 과시적인 실적위주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방북자체를 이용 위상을 높이려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셋째, 일관된 대북정책을 세우지 못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1998. 11. 28.

그러나 현재 남북간 추진되고 있는 교류·협력 사업은 경제분야에 이어 사회문화분야에서 활발하게 성사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분야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소년분야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주변의 환경에 빠르게 동화될 수 있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학술, 예술·문화, 체육, 여성 등과 같은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 정책·제도의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

(1) 정책·제도의 개선

현재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방북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⁹³⁾되는 등 규제 148건이 정비되고 178개에 달하는 남북한 반출·입 제한 품목도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편을 통하여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시 관계부처 협의를 폐지하고 방북증명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방문기간 연장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법·제도 개선은 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많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93) 통일부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나거나 편지 등을 주고 받기에 앞서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이산가족종합센터에 이산가족찾기 등록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접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이산가족이 재북 가족과 제3국에서 상봉 또는 서신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때 미리 통일부장관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도록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NGO를 통한 대북지원 창구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한 적십자사로 일원화되어 있던 대북 지원창구를 가능한 많은 NGO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의 폭을 확대하려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측 NGO의 대북 직접지원을 선별 허용하는 대북 지원창구 다원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창구를 직접 개설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실적, 남북교류협력법 준수 여부, 사업수행능력 및 북측채널확보 여부, 분배의 투명성(인도인수증 확보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별·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NGO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우리민족돕기운동」, 「한국JTS」(대표: 법륜스님), 「겨레사랑북녘돕기운동본부」 등 10여개 단체에 불과하다⁹⁴⁾.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NGO에 대북지원을 맡겨두기 보다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승인·조정권을 활용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 직접 지원창구를 확보한 NGO도 방북신청서를 통일부로 신청하여 허가 후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2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중에는 위의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NGO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북 직접지원 창구 참여 기준을 개선하여 대북 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직접 지원창구에 지원하는 NGO를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비례할당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 업체에 공적자금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⁹⁵⁾. 소요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연리 5%, 3년거치 10년 이내 상환의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필요한

94) 물론 완전 개방을 할 경우에 NGO간 과열경쟁, 물류·분배확인·교섭 비용의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원품의 공동구매, 공동수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95)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해외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관세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업체,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업체 등이다. 『문화일보』, 1999. 4.

의식주, 보건관련 물품을 수출하거나 유희설비,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경우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⁹⁶⁾

또한 정부는 대북지원 NGO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증산과 보건, 의료 및 환경보전 분야의 대북지원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믿고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지원 사업을 벌이거나 자금대출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력기금을 무상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적십자사를 비롯한 독자지원 창구로 분배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북한동포후원연합회」, 「유진벨」 등 9개의 NGO가 꼽힌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NGO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협력 중심의 지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목적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북한체제의 개방 또는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있기 때문에 기금 적립 목적에 맞게 교류·협력에 참가하는 NGO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NGO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접촉승인제도의 개선,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절차의 간소화, 북한방문기간의 연장 등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남북교류·협력 승인절차의 ‘원스톱 승인’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자들은 각종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방북 및 사업 승인, 남북 교역과 관련한 반입·반출 승인 등을 통일부 교류협력국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자는 적은 양의 물품이라도 대북 반출을 위해 여러 부서로부터 일일이 승낙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 승인’ 서비스제가 도입되면 남북한 교류·협력의

96) 『조선일보』, 1999. 10. 22.

원활한 추진 및 간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재정지원 및 기금조성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은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재정협력방식’과 ‘위임 또는 하청계약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정협력방식’은 NGO가 기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NGO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비율은 국가별, 사안별 차이가 있다. 반면, ‘위임방식’은 정부가 기획하는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NGO는 대리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⁹⁷⁾

또한 ‘재정협력방식’은 사업별로 일정비율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Matching Grants’ 및 선별된 NGO에게 일정액이 일괄 지원되는 ‘Block Grants’로 나눌 수 있다. ‘재정협력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1년마다 사업별 심사를 거쳐 지원되지만,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수년간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원되는 분야에 따라 긴급구호, 식량지원, 개발사업지원, 해외봉사자파견 지원, 개발교육비 지원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특성과 NGO의 성격 및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재정협력방식’과 ‘위임방식’을 적절히 안배하는 재정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운동차원의 교류·협력사안이나, NGO의 시민사회적 영향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Matching grants 혹은 Block grants 등의 재정협력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분야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NGO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교류·협력사업의 전문성과 해당 NGO의 노하우가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임방식’의 재정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97) 김채형, 『OECD회원국의 NGO활동』(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2), 30~35쪽 참조.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NGO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지원, 촉진시키기 위해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8조(기금의 용도) 1항은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항은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그리고 5항은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왕래 자금지원, 문화, 예술, 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지원과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정부출연금이며, 일부 민간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다⁹⁸⁾. 향후 대규모 수급이 있을 때에는 다른 기금·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초기에는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단일팀 출전지원과 쌀 직교역의 손실보전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쌀 15만톤 무상지원 및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북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에 사전 용역비 600만달러를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500만달러를 대출한 바 있다. 1998년 12월 말까지 1995년의 대북 쌀 15만톤 무상지원비용 1,854억원 등 15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총 3,02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다.

98)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8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 4,300만원, 운용수익금 1,206억 7,100만원 등 총 6,562억 1,400만원이 조성되었다.

이밖에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1998년 12월 말 현재 3,522억 2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중 1,806억 1,900만원은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1,715억 8,3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보다 많은 NGO에 지원하는 것은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크고 사업실적이 많은 여타 NGO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유리한 반면, 청소년분야의 군소 NGO의 경우 그 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분야 차원의 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육성기금’의 일부를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관련 NGO에게 지원하거나, 북한청소년관련 연구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NGO는 정부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이 심해질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은 NGO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네트워크 강화

「민화협」은 통일관련 NGO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아직 많은 청소년관련 단체들이 회원단체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 회원을 갖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제한

적인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NGO의 몇몇 시도가 있었으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는 청소년관련 NGO간의 협력이 자주 있어왔으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 NGO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진 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기존의 추진기구를 활용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예산 지원 등과 같은 활성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청소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이 중심체가 되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거나,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같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부설기구로 새로운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인력, 공간 등의 확보문제 및 기존에 존재하는 기구와의 차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교류·협력에 있어 정부 또는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보다는 순수 민간단체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설립·운영되고 있으면서 남북한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등의 사업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남북한 교류·협력 환경 및 청소년분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에는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조정의 기능이 있으며, 현재도 청소년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 남북한 청소년분야 교류·협력부문이 강화되어야 한다.

원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사업 중에는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업기능이 있으나, 그동안 추진 실적이 미진하였고, 최근 들어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99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280명의 지도자 및 취재기자 28명이 참석해 3박 4일간 실시된 ‘청소년 금강산 수련회’ 사업을 들 수 있다. 비록, 남북한 청소년 간의 접촉은 없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보다는 청소년관련 민간단체에 의한 교류·협력 사업이 북한에서 받아들여지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사업주관 단체에서도 일회적·단기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노력과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부설기관으로 2000년 6월에 개관된 「청소년교류센터」는 향후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포함한 세계청소년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회원 청소년단체들의 협력·조정 기능을 갖는 것처럼, 「청소년교류센터」는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들을 협력·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청소년관련 NGO의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청소년교류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사회문화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주로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인적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측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방북을 허용해도 체제유지에 커다란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교류·협력 사업을 선

택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남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교류보다는 제3국을 통한 인적 교류가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로 남북고위층회담, 이산가족상봉, 학술행사, 체육행사, 세계청소년회의 등 많은 남북간의 접촉이 중국, 일본과 같은 제3국에서 성사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북한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3국을 통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청소년교류기관과 중국, 일본 등의 청소년교류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일본 카가와현의 「국제교류협회」는 1989년 10월 설립된 기구로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 「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적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도 2000년 6월 「청소년교류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청소년교류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우리나라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교류단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일본의 청소년교류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남북한, 일본 등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남북한 당국의 커다란 부담 없이 청소년간의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화하여 어학연수에서부터 외국의 문화체험까지 그 영역을 넓힌다면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감 해소에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제 전문NGO와의 연계·협력 강화

현재 국제 NGO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환경, 인권, 여성문제에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국제적

NGO와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는 못하다. 주요 이유는 한국 NGO의 연륜이 서구에 비해 짧고, 관련되는 전문 인적자원이 취약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인권, 환경, 여성문제 등이 전지구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NGO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도 국제 NGO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민간단체들 가운데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십자사」, UN산하의 「세계아동기구」(UNICEF), 「국제농업기구」(FAO), 그리고 「국제식량기구」(WFP), 「세계교회협의회」(WCC)⁹⁹, 「국제선명회」 등 국제기구들의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한 대북식량지원 계획과 추진활동 등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국제무대에서 빈곤 및 사회발전, 인권, 여성 및 아동문제, 환경 및 자연보호, 반핵 및 평화운동 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국제민간기구를 비롯하여 남한의 NGO와 북한의 사회단체간의 상호 경쟁과 협조를 위한 교류·접촉이 충분히 예상된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NGO와의 연대는 북한측으로부터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대북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시 각 분야별 국제 NGO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국제 NGO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NGO간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청소년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할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신뢰유지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9)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세계 100여 개국 3백여 교회가 구성한 개신교의 협의기구이다. WCC는 선교 활동을 기본으로 지구상의 빈곤과 사회발전,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정의, 평화의 문제를 근간으로 사회 참여, 환경, 원주민문제, 공동체, 지구화, 민주주의, 인권문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면서 전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32쪽.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¹⁰⁰⁾

여기서는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 기획의 기본방향과, 초기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가. 프로그램 기획의 기본방향

그동안 남북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에는 학생청소년이나 일반청소년의 참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문화교류, 체육교류 등의 이름으로 수행되었고, ‘청소년 교류·협력’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남북한의 동질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기획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상호간에 부담이 적은 비이념적·비정치적 내용과 대상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남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점차 작은 단체로 확산시킨다.

셋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주요 인사의 인적 교류·협력으로 시작해서, 점차 일반 청소년간의 교류와 서신·통신 교류로 확산시킨다.

넷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진행 장소는 상징성이 강한 주요 지역(서울·평양, 금강산·한라산 등)에서 시작해서, 점차 한반도

100) 이 부분은 청소년관련 학과 교수(이용교, 권일남, 김민) 및 전문가(장동현, 전효관), 그리고 북한전문가(이원웅, 한만길, 이금희) 등에 아이디어 제시 차원의 원고를 의뢰하여 정리한 부분임.

전체로 확산시킨다.

넷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은 상징성이 강한 시기(설, 3.1절, 5.1노동절, 광복절, 추석 등)에서 점차 일상적인 시기(여름 방학, 연중)로 확산시킨다.

나.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

(1) NGO 중심의 남북문화교류센터 설립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현장의 열악함과 인적자원의 비전문성, 프로그램의 미비 등은 남북 청소년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당면 선행과제이다. 더욱이 현장 근무조건이 열악한 단체·기관의 경우 안정적인 재정기반도 부실하고, 누적적인 자료정비 및 확충(Data-base)도 불충분하며,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의 개발·교류도 역시 요원하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급격한 변화조짐 및 정세에 대해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NGO간의 인적자원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단체별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도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칭 ‘남북문화교류센터(South and North Korea Cultural Exchange Services)’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구안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문화교류센터’는 국내외 NGO들이 그 동안 개별적으로 북한을 지원·협력하였던 사업들을 포괄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제안, 이를 위한 분야별 우선사업들을 선정·개발하는 등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중핵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동일한 이해와 목적을 갖고 있는 국제 NGO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2)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전거 국토대행진

남북한 청소년이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상징하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자전거로 국토 대행진을 실시한다. 첫해에는 남과 북의 청소년이 한라산(혹은 백두산)에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고, 상징성이 강한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두 세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동해안과 경상도-강원도-함경도를 잇는 노선, 남해안과 전라도-충남도-평안도 등을 잇는 노선 등을 개발한다. 숙박은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이용하면서 그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한다. 음식을 나누고, 노래·연극공연을 하며, 캠프파이어를 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중적인 행사를 기획한다. 자전거 국토 대행진을 지원하는 차량에는 의료진 등이 탑승하여 응급 사태에 대비하고,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3) 학교별 자매결연과 수학여행

남북한 청소년이 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교류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교, 서울고등학교와 평양고보 등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첫해에는 교환방문을 하면서 자매결연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대표가 자매결연을 맺고 축하공연을 한다. 매년 해당 학교의 기념일이나 그 전후에 열리는 학교축제에 자매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대표가 참가해서 축하인사와 공연을 한다. 점차, 자매학교가 있는 곳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주변 지역을 관광하고, 학예회와 같은 문화예술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숙박은 처음에 해당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점차 일정 중 일부나 전부를 민박을 통한 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4) 문화유적답사와 성지순례

남북한 청소년이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등 우리 역사의 수도였던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조상이 한 뿌리임을 인식하게 한다. 남북한 청소년이 우리의 역사상 수도였던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을 함께 답사하고 그림전시회, 사진전 등을 통해서 대중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한다. 첫째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문화유적답사를 갖고 점차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킨다. 현재 남아있는 문화유적에는 불교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교계 청소년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고, 점차 천주교, 기독교계는 문화유적답사와 함께 성지순례를 기획하도록 한다. 유적답사와 같은 가시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에서 참선 등 수련회를 갖고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화해하는 기운을 키운다.

(5)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소년포럼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계를 대표하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학자들이 함께 참가하여 청소년계의 주요 관심사인 청소년문제,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등을 토론한다. 또한 몇 개의 분과를 나누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대회 주제를 달리하여 그 시대 청소년 지도에 가장 필요한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나누도록 한다. 예를 들면, 새 천년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공동조사, 청소년의 성과 이성교제, 청소년 가족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나눈다. 세미나와 별도로 청소년 관련 책, 영상자료 등의 자료전시회, 대표적인 청소년활동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사장소는 매년 남한과 북한에서 교차적으로 추진하되, 서울과 평양을 벗어나서 광주학생운동, 신의주학생의거 등과 같이 역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주제에 따라서 사전에 공동연구팀을 만들어 교환방문을 하면서 준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6) 청소년 체육대회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청소년 체육선수들이 주로 단체경기를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눈다. 처음에는 소수의 대표선수들이 뛰고 다수가 응원할 수 있는 축구, 배구, 농구대회 등을 펼치고, 점차 개인기를 볼 수 있는 체조 등으로 확산시킨다. 경기방식은 1차전에서 남한과 북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2차전은 남한과 북한의 선수를 혼합하여 진행한다. 체육대회는 한 지역에 한정시키지 말고 남한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북한은 평양, 해주, 원산, 홍남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7) 남북한 청소년 교환봉사활동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이 수해 등 자연재난을 당한 지역을 응급 복구하거나 ‘산림녹화’ 등 주제가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남한과 북한의 어느 지역이든 큰 수해가 나면 응급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대를 파견하고 그 팀에 청소년자원봉사대를 포함시킨다. 자원봉사자는 수해지역으로 가서 10여일 내외 기간 동안 복구작업을 돕는다. 위문품 및 수해의연금의 전달 등을 함께 해서 동포들이 재난을 극복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 등을 통해서 수해방지대책을 돕는다. 봉사활동의 종류는 처음에 수해의 응급복구로 시작하여 점차 컴퓨터관련 기술봉사활동, 탁아소의 영양지도 등으로 확대시킨다. 봉사대로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을 통해서 수재민을 도울 수 있는 식량과 위문품을 마련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남북교환 봉사활동은 순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체제 우월성의 선전이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한다.

(8) 한민족 청년학생축전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해외동포의 청년과 학생이 함께 광복절행사의 하나로 ‘청년학생축전’을 열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교류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한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청년·학생의 대표들이 모여서 일제로부터 해방(광복)된 날을 기념하고, 분단 조국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청년학생축전을 주도했지만, 이에 남한정부가 적극 협력함으로써 그 내용과 성격을 변화시키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이 행사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갖고 있는 ‘범민족대회’와 연계·발전시킨다.

(9) 청소년 ‘통일의 배’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이 ‘통일의 배’를 타고 동해, 남해, 서해를 순회하면서 배에서 우정을 나누고, 중간기착지에서 캠프활동을 한다. 인천이나 원산 등 큰 항구에 집결하여 발대식을 갖고, 참가자들은 ‘통일의 배’에 탑승한다. 항로는 인천에서 출발할 경우 국토의 극지점인 백령도, 소흑산도, 마라도, 독도 등을 경유하도록 하고, 원산에서 출발할 경우 그 반대로 한다. 해상에서 주제가 있는 학술행사와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간기착지에 내려서 캠프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백령도에서는 넓은 백사장에서 기마전 등 신체활동을 하고, 마라도에서는 식물채집이나 환경탐사활동을 하며, 독도에서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는 <청소년독도선언서>를 낭독한다. 남한과 북한이 교대로 주관하되, 중간 기착지에서의 활동은 해당지역의 청소년단체가 후원하여 자연스럽게 참가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를 넓힌다.

(10) 청소년 인터넷방송제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이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문화활동을 영상으로 교류한다.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일상생활, 각종 문화예술활동의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를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전송한다. 매회 방송의 주제를 정해서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을 신고 남북한 청소년이 공동으로 느끼는 일상적인 정서를 담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고민, 좋아하는 놀이, 우정과 사랑, 유행하는 옷과 차림새, 공부와 취업, 노래와 게임 등을 주제로 해서 영상물을 만들고 전송한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교류한 영상물을 비디오나 CD로 제작하여 자료전시회를 함께 갖는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남북한 청소년의 각종 교류·협력 프로그램에 청소년기자를 파견하거나, 행사 참가자중에 ‘명예기자’를 선정해서 그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행사를 전후로 하여 남북한 청소년이 상호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11) 남북한 청소년공동 도미노경기프로그램

남북한 청소년들이 상징적인 장소(관문점 등)나 제3국 등에서 만나 공동으로 도미노경기를 실시한다. 도미노의 작품 내용은 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 역사 및 통일과 관련된 작품으로 한정하여 공동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기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상호간에 동질성이 증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 “남북한 청소년 문화 이해지” 만들기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 이해지’ 만들기 프로그램

램을 추진한다. 문화 이해지는 기본적으로 타문화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화 이해지는 남성과 여성, 혹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시행되어 큰 성과를 본 경험이 있다. 남과 북의 10대 문화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 이해지 작업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문화 이해지는 서로 문제를 풀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편견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교육적이다. 물론 이 내용을 10대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는 청소년 교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북한 청소년의 어떤 만남에서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 한라산 방문 이벤트에서 1-2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보면서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문화란 기본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고, 이 점을 인식할 때 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국가적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13)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동포사회를 거점으로 한 청소년 문화 및 체육 교류

남북한 청소년의 직접 교류 활성화는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의 안정성에 비례한다. 독일의 청소년 교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 방문 및 여행은 적극 권장된 반면, 동독 청소년의 서독 여행은 불규칙하고 규제적이었다. 덜 개방된 사회는 교류 자체를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서도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민족의 동질성과 동포애를 경험할 수 있는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사회를 거점으로 한 청소년 교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4) 남북한 청소년 수학 및 과학 올림피아드 공동개최 및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공동참여

수학 및 과학 분야는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책 분야이다. 남북한 수학영재들간의 경쟁은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북한 지도자들도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객관적인 순위에 의한 남북공동 선수단을 파견한다면 북한의 재정부담도 덜어주면서 국내외에 북한 과학영재들의 실력을 과시하는 기회도 될 것이며, 점차 남북한 청소년간의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15) 비무장지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 환경 실태조사단 교류 및 환경지킴이 창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절실하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환경생태계는 상호 분리되어 지난 50여 년간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해결할 이 문제의 현장을 미리 방문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벌이는 것은 유엔은 물론 국제 환경단체, 국제언론의 큰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16) 지진, 국제 재난 등에 대한 남북한 청소년 국제협력단 파견

남북의 대학생, 청소년들이 외국의 재난사고, 자연재해 등에 공동의 자원봉사단들 파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가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는 일본, 중국 등의 청소년들과 아시아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결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지구촌 사회를 돕는 봉사정신은 세계평화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7) 남북한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단 교환

북한은 자신들의 항일투쟁의 혁명 역사를 대단히 자부하고 있다. 또 단군조선과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다. 만약 우리측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북한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청소년 탐방단을 파견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 단, 탐방단 방문의 조건은 신라와 백제, 조선시대 유적지에 대한 북한 청소년과의 동일한 교차방문이다. 이러한 상호교차 방문을 통하여 남북한 미래 세대가 상호간 역사인식의 깊은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통합의 역사를 서술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18) 컴퓨터software 경진프로그램

남북한 청소년간에 합일된 마음을 갖고 상호 동질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남한청소년의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한 북한청소년과의 접근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며 상호 동질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북한 청소년들이 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분야를 발굴하여 상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의 기회를 통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도록 유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문화 환경은 우리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한 청소년경진대회는 북한측에서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19) 남북한 청소년 지도자의 상호 방문

남북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 초기에는 지역 답사, 학술 여행과 같이 단순 방문의 형태를 띠면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처음에는 단순 방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인간적인 접촉의 기회를 넓힐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청소년 지도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동 행사를 상호 교환 방문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최근 들어 통일논의에 대한 민간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NGO를 통한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활동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영역또한 넓혀 나가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증가는 청소년 교류·협력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동안 성사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살펴보다라도 문화·예술, 학술, 체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와 같은 분야는 단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교류·협력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류·협력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경우도 있고, 청년·인권·교육 및 통일관련 NGO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속에는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정부주도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전개되었고,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많은 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역할도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에서 제기되기 어려운 문제 내지는 정부간의 공식적 교섭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NGO는 민간분야의 특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과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및 화해·협력의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동질성 증대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청소년분야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성을 대표하는 NGO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NGO간의 네트워크 강화, 법제도 개선 및 제도화 추진, NGO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금 조성 등과 같은 구조적·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NGO의 참여 확대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NGO를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확대는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인 선택이며,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담부서와 관련부처, 그리고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한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기구의 성격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방향, 대상, 방법,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마련하며, 각 단계·분야별로 추진 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위원회는 그 하위 영역에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각 분과에는 청소년이 일정 비율 참가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청소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만약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 추진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국토순례대행진’,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체육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중심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청소년관련 단체 및 각급 학교,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재정지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NGO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통일 및 사회복지관련 NGO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NGO는 설립목적과 사업추진계획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조직 및 재정 등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NGO를 대상으로 일정 심사후, 사업유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NGO를 대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건전청소년육성’,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사업에 편중되어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남북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도 일정 비율의 청소년육성기금이 할당되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교류방법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인 방식 모두를 병행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된 대학생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제3국을 통한 접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측은 국내에서의 교류·협력보다 중국의 연변지역 및 일본 등과 같은 주변의 제3국을 통한 교류·협력을 뚜렷하게 선호하고 있는 것을 파악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초기단계에서 제3국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교류·협력 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교포청소년과 일본 조총련계의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양체제의 부담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나 회의 등에 남북한 청소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정부의 관련부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 및 북한청소년의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진향적인 통일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통일교육은 이념 및 체제와 관련된 통치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기능을 일정부분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새롭게 마련·시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토통일원, 『남북 인적교류 추진방안』,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길은배, 『NGO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영래, “한국비정부단체의 세계화전략연구”, 『국제정치학논집』, 제37집 1호.
-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혁래, “세계화와 한국 NGO의 현황”,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안』,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77.
- 박성희, “동·서독 청소년교류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1993.
- _____, “민간차원의 자율적 교류가 바람직: 남북한 청소년교류 방안”, 『통일한국』, 1993.
- 박순영, “서독의 정치교육”, 『공군』, 1983. 2.
- 박영호, “독일의 분단. 극복의지, 동·서독 교류의 오늘”, 『마당』, 1984-12-040, 1984.
-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2권 4호, 1990.
- _____,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의 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문제연구』, 2권 1호, 1990.

윤근식, “동·서독 통일교육 현황분석”, 『국토통일원』, 국통정 78-12-1485, 1978.

이근주,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9.

이민희, “동·서독 청소년교류의 교훈”, 『청소년소식』, 제46호,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이재봉,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방안”,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서울: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 자료집, 1998.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8.

전득주 외,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 서울: 고려원, 1988.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조영승 외,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1999.

조한범, 『NGO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1993.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독일통합실태연구』, 서울: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1992.

통일원, 『10년간의 독일정책』, 서울: 통일원, 1992.

_____, 『남북교류협력법규집』, 서울: 통일원, 1996.

_____,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3.

2. 외국문헌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Vol. IV. Bonn, 1970.

Bunjes, Ulich, Normalität stellt sich nur langsam ein. Zur Entwicklung des deutsch-deutschen Jugendaustauschs. in: *Ausserschulische Bildung*, 1989.

Clark, J., *Democratizing Development: The Role of Voluntary Organizations*, London: Earthscan., 1991.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ur Global Neighbour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 *Tätigkeitsbericht 1988 des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s*. Bad Honnef, 1989.

Deutscher Bundesjugendring(Ed.), Die unbekanntenen Nachbarn - Deutsch-deutscher Jugendaustausch. in: *Jugendpolitik* 7/1986.

Gesamtdetsches Institut(Ed.), *Jahresbericht von Schüler-, Jugend- und Studentengruppenreisen in die DDR und nach Berlin(Ost)*, Bonn, 1989.

Piepenschneider, M., “청소년교류”, 『독일통일소사전』, 서울: 주독대사관, 1992.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Ed.),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Bonn, 1989.

Salamon, L. M.,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A Global ‘Associated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73, No. 4(1994).

Sauerhöfer, W., “Die Jugendverband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in: *Kein Alter zum Ausruhen*. Deutscher Bundesjugendring, 1992.

Schneider, E./Siebert, B., Die Bündnis Kommen! Jugend erlebt die DDR. Eine Handreichung für Schülerreisen in den anderen Teil Deutschlands. in: *Ein anderes Deutschland*. Bonn, 1988.

Wehling, H.G., Einführung: Politische Bildung in emanzipatorischer Absicht. in: Ehrenwirth, F.(Ed.). *Unterrichts-praktisches Handbuch zur politische Bildung. Modelle für den Sozialkundeunterricht*. München, 1973.

Weidenfeld, W./Korte, K.-R.(Ed.),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3.

Weiss, Thomas G., and Leon Gordenker., *NGOs, the UN, and Global Governanc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66.

3. 홈페이지 및 기타자료

www.unikorea.go.kr.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분단과 통일정책의 변천.

『경향신문』, 1994. 7. 23

『경향신문』, 1998. 5. 9

『국민일보』, 1998. 3. 26

『문화일보』, 1997. 7. 16

『서울신문』, 1998. 9. 19

『세계일보』, 1995. 2. 7

『세계일보』, 1997. 12. 4

『조선일보』, 1998. 11. 28.

『중앙일보』, 1995. 9. 29

『중앙일보』, 1996. 4. 21

『한겨레신문』, 1999. 7. 24

『한국일보』, 1996. 4. 19

부 록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의식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청소년의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의식’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요령

1. 응답 내용은 반드시 같이 배부해 드린 <응답지>에 기재해 주십시오.
2.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과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응답항목을 하나만 골라 주시고,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개수만큼 골라 주십시오.

2000. 9.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우)137-715
연구진 : 길은배(2188-8843), 최원기(2188-8823)

다음은 통일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문 1]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 ②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③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④ 통일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
- 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문 2]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 사람들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십니까?

- ① 매우 자주 한다
- ② 자주 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거의 하지 않는다
- ⑤ 전혀 하지 않는다

[문 3]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문 3-1로 가시오)
- ② 아니오 (문 4로 가시오)

[문 3-1] 만약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이내
- ② 10년 이내
- ③ 20년 이내
- ④ 20년 이상

[문 4] 현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②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③ 실현가능성이 적고 너무 추상적이다
- ④ 남북한을 적대·대립관계로만 생각한다
- 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
- ⑥ 기타()

[문 5]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시급히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북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 ②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
- ③ 평화협정체결 ④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
- ⑤ 주한미군 철수 및 보안법 철폐 ⑥ 강대국의 협조요청
- ⑦ 기타()

[문 6]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좋아질 것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어려워질 것이다
- ⑤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문 7] 다음은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각 항목별로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장애가 된다 -----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 남북한의 이념 대립	①	②	③	④	⑤
2) 남북한 지도층의 이해관계	①	②	③	④	⑤
3)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	①	②	③	④	⑤
4)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①	②	③	④	⑤
5) 남북한간의 이질성 심화	①	②	③	④	⑤
6) 통일방법상의 차이	①	②	③	④	⑤
7)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고수	①	②	③	④	⑤
8) 주한미군 주둔	①	②	③	④	⑤
9)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①	②	③	④	⑤
10) 상호 통일외지 결여	①	②	③	④	⑤
11) 상호 실질적인 노력부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문 8] 북한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다음 중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얻고 있습니까?

- | | |
|--------|-------|
| ① TV | ② 신문 |
| ③ 잡지 | ④ 라디오 |
| ⑤ 학교수업 | |

[문 9]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 관해 가장 자주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 | | |
|------------|------------|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 ③ 할아버지·할머니 | ④ 친척·친지 |
| ⑤ 학교선생님 | ⑥ 친구나 선·후배 |

[문 10]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문 10-1로 가시오) ② 모른다(문 11로 가시오)

[문 10-1] 만약 알고 있다면 '햇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하다 |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바람직하지 않다 |
|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

[문 11] 북한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다음의 정책들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식량이나 비료를 비롯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② 경제적 협력 및 지원
- ③ 사회문화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 ④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붕괴 유도
- ⑤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국방경계태세 확립

[문 12] 당신은 식량지원 등과 같은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한 적이 있다 ② 참여한 적이 없다

[문 13] 당신은 남북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북한을 방문하시겠습니까?

- ① 방문하겠다 ② 방문하고 싶지 않다

[문 14] 남북한 교류가 남북통일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②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③ 그저 그럴 것이다 ④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⑤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문 15] 앞으로 진행될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②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축소시켜야 한다 ④ 교류를 단절시켜야 한다
⑤ 모르겠다

[문 16] 남북한의 교류·협력과정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갖고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2개만 고르시오.

- ① 경제협력분야 ② 관광분야
③ 체육분야 ④ 이산가족상봉
⑤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
⑥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언론분야
⑦ 종교분야
⑧ 과학기술 및 학술분야
⑨ 예술단, 곡예단, 역사유물, 미술품 등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

[문 20] 북한 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한국(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 청소년들이 어떻다고 생각되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하나씩 골라 주십시오.

- 1) 겸손하다-무례하다

① 매우 겸손하다	② 겸손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무례하다	⑤ 매우 무례하다	
- 2) 상냥하다-무뚝뚝하다

① 매우 상냥하다	② 상냥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무뚝뚝하다	⑤ 매우 무뚝뚝하다	
- 3) 영리하다-둔하다

① 매우 영리하다	② 영리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둔하다	⑤ 매우 둔하다	
- 4) 부지런하다-게으르다

① 매우 부지런하다	② 부지런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게으르다	⑤ 매우 게으르다	
- 5) 조용하다-시끄럽다

① 매우 조용하다	② 조용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시끄럽다	⑤ 매우 시끄럽다	
- 6) 명랑하다-우울하다

① 매우 명랑하다	② 명랑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우울하다	⑤ 매우 우울하다	
- 7) 부유하다-가난하다

① 매우 부유하다	② 부유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가난하다	⑤ 매우 가난하다	
- 8) 건강하다-허약하다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허약하다	⑤ 매우 허약하다	

다음은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문 25]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이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②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 ④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26]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반드시 참가하겠다 (문 26-1로 가시오)
- ②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문 26-1로 가시오)
- ③ 참가하지 않겠다 (문 27로 가시오)
- ④ 절대 참가하지 않겠다 (문 27로 가시오)
- ⑤ 모르겠다 (문 27로 가시오)

[문 26-1] 만약 남북한 청소년교류에 참여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 ② 체육활동
- ③ 음악·미술 등 예능활동
- ④ 국토순례대행진,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 ⑤ 문예활동
- ⑥ 학술활동
- ⑦ 기타()

[문 27]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협력과정에서 가장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2개만 고르시오.

- | | |
|------------------------------|----------------------|
| ① 체육분야 | ② 인터넷, 컴퓨터 분야 |
| ③ 전통문화 분야 | ④ 만화, 게임 등의 오락분야 |
| ⑤ 소설, 시 등의 문학분야 | ⑥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예술분야 |
| ⑦ 종교분야 | ⑧ 역사탐구, 학술토론 등의 학술분야 |
| ⑨ 기타() | |

[문 28] 현재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의식주 등 생활문화 | |
| ② 이념, 관습, 규범과 같은 가치관 | |
| ③ 문화, 예술, 문학 등의 대중문화 | ④ 놀이문화 |
| ⑤ 학교 및 학업과 관련한 교육문화 | ⑥ 전통문화 |

[문 29] 남북 청소년문화의 차이와 격차(이질성)를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
- ②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 ④ 거의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 ⑤ 전혀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문 30]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문 31] 학년은? ① 고 1 ② 고 2 ③ 고 3

[문 32] 학교 계열은? ① 인문고 ② 실업고

[문 33] 아버지의 직업은?

- ① 입법 공무원, 고위 임원직 및 관리직(고위정부공무원,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기업의 고위임직원 등)
- ② 전문가(교수, 교사, 판·검사, 의사, 변호사, 건축가, 컴퓨터 전문가 등)
- ③ 사무직원(사무직원, 은행사무원, 사서, 우편 및 관련사무원, 비서 등)
- ④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여행사 직원, 음식서비스 종사자, 상점판매원 및 영업사원, 매점 및 시장판매원 등)
- ⑤ 농업 및 어업, 임업 숙련 근로자(농업, 어업 등 종사자 등)
- ⑥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건설기술 노동자,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 등)
- ⑦ 단순노무직 근로자(단순 가두서비스직, 건물관리인,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경비 등)
- ⑧ 군 인
- ⑨ 미취업(가사노동, 무직,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등)

[문 34] 아버지의 학력은? (중퇴도 졸업에 포함, 예: '중학 중퇴'는 '중졸'로)

-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문 35] 가정의 생활수준은?

- ① 매우 잘 사는 편
- ② 중간보다 잘 사는 편
- ③ 중간 수준
- ④ 중간보다 못사는 편
- ⑤ 매우 못사는 편

[문 36] 가족이나 친척 중 남북 이산가족 여부?

- ① 있다
- ② 없다